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2007. 12

연구책임자 : 김 이 선 (본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황 정 미 (본원 연구위원)

이 진 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 간 사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 인구이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자가 급증하고 점차 정주자화 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생활 곳곳에서 서로 만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며 살아온 역사적 경험의 제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 과정에 있는 한국사회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한국형 다민족·다문화사회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그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실은 국내외 각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 덕분에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연구 특별위원회에서는 연구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며 수많은 국내외 학계 전문가와 NGO활동가께서는 국제세미나와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소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마음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향배를 가늠할 개척자적인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진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토대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생산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사회를 향한 실천적 움직임이 한층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경 애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원장	한 경 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위 원	이 혜 경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이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란 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이 진 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차 연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19-0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9-02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9-03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19-0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9-05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19-06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회· 울릉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센터(호주)
2007-19-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노동 연구원	이정환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훈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순희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서덕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은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지역복지팀장
	한국 문화인류학회/ 호주 울롱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센터 (호주)	이태주 한성대학교 교양과 교수 권숙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Julia Martinez 울롱공대학 교수(호주) Yamamoto Kaori 아이치현립대학 문학부 교수(일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요약

1. 협동연구의 목적과 구성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분주히 일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이주 자체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의 ‘폭발적’이라고 할 만한 커다란 관심은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외국인 이주의 급증과 함께 이주 양상의 변화, 이주민의 한국사회와의 관계성의 변화, 그에 따른 사회적 전개 방향에 대한 관심의 형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역동성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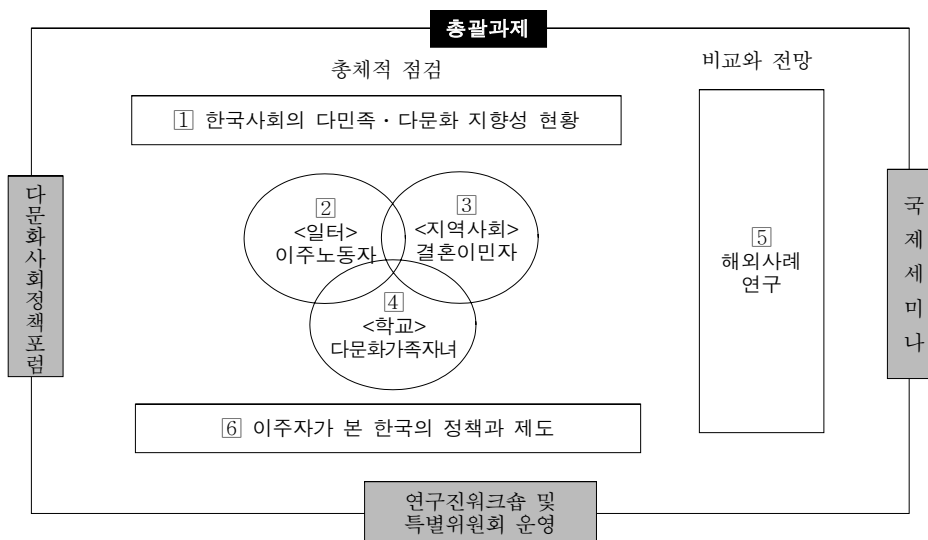
한국사회보다 앞서 이주의 증가를 경험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던 서구의 경험은 이 과정이 단선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노정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직, 간접적 갈등이 야기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로 대표적인 비-이민 전통국가로서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이를 근거로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민족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이주민을 완전한 성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험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 논의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도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태도, 그 대안을 둘러싼 관심과 입장 등을 점검하고 주요한 난관의 지점을 예견하며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협동연구는 그간 간과되어 왔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태도와 구체적인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주민의 증가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전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접근의 포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 성과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간에 걸쳐 협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 연구는 이 가운데 1차 연도 연구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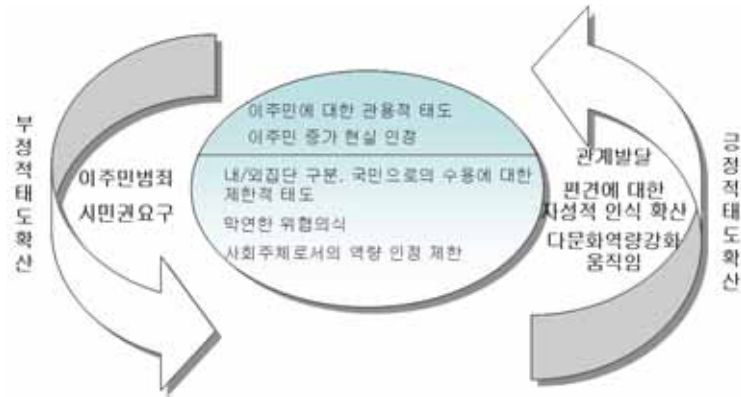
1차 연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주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수용 실태와 시민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 특정한 이주민을 대면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양상에 접근하여 다문화사회의 구체적 전개 방향을 포착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바 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보다 앞서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온 해외 사례를 통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과정을 전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협동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기획과 분석을 담당하는 총괄과제와 함께 총 6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었다.



<그림> 협동연구의 구성

2.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그림>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1) 다문화사회에 대한 탐색 단계

본 협동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작업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주민과 대면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작업장 동료, 교우와 교사, 지역주민과 정책·서비스 담당자들의 수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혈통 중심적 국민정체성 의식도 기대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회원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주민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이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해 한국사회가 긍정적인 지향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은 이상의 몇몇 측면에서는 관용적인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척도 가운데서도 다양성 수용능력의 한계나 이주민 본국 송환 등에 대해서는 EU회원국가 국민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배제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에 있어 현재 한국사회가 보이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체적 의제별로 태도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와 논의의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는 이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에 관한 의제가 발굴되기 시작하고 관심과 논의가 형성되어 가는 단계로서 일반국민들 역시 몇몇 사안을 중심으로 태도를 형성해가고 있을 뿐,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라기보다는 이주민이 현저히 증가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된다.

2) 국민, 사회주체로서의 수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전반적으로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몇몇 측면에서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때로는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과는 모순되는 태도도 발견된다. 우선 한국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클 뿐 아니라, 특정한 관계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을 동료나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해 혈연이나 가족관계로 받아들이는데 현저히 소극적이며, 이러한 태도는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시민’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in-group)에 가까운 관계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만큼 외국인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각종 권리 부여에 대한 태도에 있어 노동법적 권리나 가족 동반권, 인권 보호 등의 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데 비해 시민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활의 장에서 이주민을 실제로 대면하면서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서는 이

러한 태도가 이주민들의 사회주체로서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연결된다.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활동역량에 대해서도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사회의 수용성으로는 이주민을 친구나 이웃, 동료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에 적합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선진국 지향성과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수용 태도가 출신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용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태도의 분화 양상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저연령, 고학력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층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비해 개도국에 대한 관심은 제한되어 있으며 경제발전수준과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주민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분화시키는 글로벌 상호문화지향(global interculturalism)(Kymlicka 2003)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출신자가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 지향적인 태도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특히, 향후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선진국 지향적인 태도가 강화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관련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출신국가별로 이주민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독 개도국 출신자를 향한 부정적 태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대표적 편견으로는 이들로 인해 제

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나 생활환경과 안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협의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출신 이주자를 향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집단적 편견은 이들을 완벽한 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흔히 학습성취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결핍’과 ‘부정응’의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짙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과정 상에 문제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사회성원으로서 무엇인가 불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 탈 개체화된(depersionalized) 일반화 경향은 다양한 국가 출신 가운데에서도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 출신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자칫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민족적 편견으로 비화될 우려도 잠재해 있다.

무엇인가 ‘부족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실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 정도가 일부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선의’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인식 역시 현재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자칫 이주자를 일방적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선입견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주체로서 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관계의 제약과 배타적 태도의 재생산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은 이주의 전개 양상과 이주민의 존재 양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 방향 등을 탐색하면서 태도를 형성해 가는 단계로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초-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향배가 좌우될 것이다. 특히, 점점 많은 시민들이 특정한 이주민과 개인적 차원의 직, 간접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자신과 주위의 수용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작업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이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경우에도 대부분 단순한 안면관계 이상의 개인적 친분관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이주민과 별 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관계 형성 자체만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언어 소통이 가능한 상대와는 어느 정도의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해당자에게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느낌을 벗어나 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태도의 구체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이에 기초한 막연한 위협의식은 다소 완화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를 지역주민으로 대하는 이들이나, 국제결혼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학생이나 교우로 대하는 이들 역시 이들을 완벽한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각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일반인 보다 오히려 크게 느끼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이나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자아/타자 집단의 구분이 강화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5) 수용성 변화의 가능성

현재로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한국에서 이주민 문제는 주로 인권침해나 소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소수자인 외국인 이주민이 다수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갈등을 빚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수용성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만약 이러한 조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인의 표면적인 관용성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경우 이들을 향한 부정적 태도는 상당

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시민권이나 사회 참여에 대한 이주자들의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일견 관용적으로 보이는 한국사회의 수용성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 촉매자(social facilitator)가 부재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학교생활에서는 교사, 지역생활에서는 일선 정책·서비스 담당자에게서 바로 그러한 역할이 기대되나, 현재로서는 이들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사회적 차원의 수용성 재구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이주민 집단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육적, 정책적 실천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교사나 서비스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형성되고 있어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 열쇠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과 개인적,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면서 이들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전되며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자성적 인식이 확산되는데 달려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삶 속에서 대면하는 이주민과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며 관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기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3. 정책 제언

1) 다양성 · 사회통합정책으로의 전환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가 공식적 정책의제에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정책목표로까지 채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4월 이후 각종 정책계획에서 ‘다문화사회’를 비전이나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의 현실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적 모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다문화사회’만을 반복적으로 공표하는 수준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다문화사회’라는 목표 하에서 실제 계획,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을 보아도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로 인정하는 근본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순되는 방향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정책으로서의 면모에 걸맞지 않은 방식으로 실현되는 상황까지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한 특정한 이주민 집단이 입국과 한국사회 적응 상에서 겪는 문제로 이미 가시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다양성의 가치와 인정 범위와 방식, 이주민의 사회적 위상 등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의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파편화된 현안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총체적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대상 정책으로서의 제한된 틀에서 탈피해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재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전개 가능성을 예측하며, 이를 기초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이념적 지향을 형성하고 그에 입각해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
‘다문화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기구’
설립



<그림>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방향

이러한 작업의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호주에서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호주 다문화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Multicultural Affairs: AIMA, 1979-1986)와 이민 · 다문화 · 인구 연구국(Bureau of Immigration, Multicultural and Population Research, 1989-1996) 등 국가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여 관련 의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총무성 산하에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개별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안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받고 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사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은 결여되어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의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전문가 기구(‘다문화사회 정책 수립 전문가 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종합적 진단과 예측, 현재 정책 평가, 정책 계획 수립, 관련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사회 정책 종합계획’(가칭)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도입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가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이주민 집단이 이미 가시화되고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해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주민과의 관계가 쌓여도 이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는데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완강해지는 경향까지 발견되고 있어 이주민의 증가와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대면에 따라 이주민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산적인 사회 질서를 구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에서 지역사회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으로서 이주민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문화공생을 표방하면서 일본 정부는 단순히 외국인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본인 주민도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지역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시정 모니터링제도를 비롯해 하마마츠시의 외국인 시민회의 및 지역공생회의, 가와사키시의 외국인 시민대표자회의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이슬람 공동체 등 주요 출신국가별 공동체 자문그룹을 설치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크로놀라 사태 해결과정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가 시행한 공동체 연락관 프로그램 (Community Liaison Officer Program) 역시 사태 해결 방안과 향후 대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주민의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위한 기제였다.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적합한 사회 질서로서의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주민을 완전한 역량을 지닌 사회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으로서의 위상과 직접 관련된 대안을 논

의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합법적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공인하고 그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지역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정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학교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다양한 배경의 주민, 동료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다문화 지역사회’, ‘함께 하는 작업장’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시범학교도 이러한 방향에서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시민적 통합 증진 정책 도입: 다문화 시민교육의 확산

다문화사회의 궁극적 지향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대면하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의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생산적 시너지를 구현해 가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지향, 지식,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과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 등은 다문화적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주(민)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서구의 경험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다문화사회가 진전되면서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의 근본적 질서의 재구성 문제까지 이르게 되면 다문화사회의 향배는 시민적 태도와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간과될 경우 다문화사회의 전개는 결정적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기적 전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왜곡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적 태도와 역량은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에서는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 의제를 철저히 간과한 채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점검하고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모순되는 지점을 파악해 대안적 방향을 설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 수용 양상을 철저히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여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의 증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민주주의의 성숙과 문화적 관용의 확산을 결합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시민적 역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큰 방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다문화 사회의 주체들인 ‘다문화 시민’을 양성하는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민족·다문화 사회는 곧 시민적 관용성이 확대된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주도의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중요하다.

다문화 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제도화된 학교교육 시스템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재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 특히 인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시민적 관용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와 지역의 정책·서비스 담당자들과 같이 실제 생활의 장에서 다문화 주체들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 촉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다문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육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시민교육의 이상에 따르면 이주자에 대한 교육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주입할 것이 아니라, 이주자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문화나 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사회 역시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

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이주자들이 다문화 이해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즉 자신의 출신 문화를 한국인에게 소개하는 문화전달자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양성하여 각급 학교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세계화의 진전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자칫 글로벌 상호문화지향(global interculturalism)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시민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시아 개도국 출신 이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로컬 상호문화지향(local interculturalism)을 확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시민교육은 다양성과 역동성을 결여한 획일적 프로그램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시민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별·시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시민교육은 ‘문화’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보다는 체험과 실천,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 참여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지역단위의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다문화 시민교육이나 문화활동과 관련된 각급 단체와 주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이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목 차

요약문	i
 I. 서 론	1
1. 협동연구의 배경	3
1)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쟁점	4
2)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 양상과 사회적 관심의 형성	11
2. 협동연구의 목적	22
1) ‘다문화’개념과 한국사회의 ‘다문화’논의	22
2) 기존 연구 검토	25
3) 협동연구의 목적	29
3. 협동연구의 개요	30
1) 협동연구의 구성	30
2) 연구 내용과 방법	32
4. 보고서 구성	37
 II.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의식	39
1. 이주의 증대와 ‘다수자’수용의식의 의미	41
2. 조사개요 및 방법: 국민의식조사와 외국인 고용업체 한국인 직원조사	44
1) 조사 개요	44
2) 주요 조사내용 및 척도	49
3. 국민의식조사 결과: 관용성과 거리감의 공존	51

4.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비교: 국민의식조사와 한국인 직원조사 비교 분석	58
1) 사회적 거리	60
2) 종족적 배제주의	68
5. 소결	73
 III. 생활공간에서의 대면 양상: 학교와 지역사회	77
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우·교사의 수용 양상	82
1) 교우	82
2) 교사	92
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서비스 담당자의 수용 양상	104
1) 지역주민	105
2) 서비스 담당자	117
3. 소결	123
 IV.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시민적 통합의 중요성:	
호주와 일본 사례	127
1. 호주	131
1) 인종적 위계사회에서 이민국가로의 전환	131
2) 다문화주의 정책의 전개	133
3) ‘위로부터 아래로’ 정책의 한계와 시민적 통합의 필요성	137
2. 일본	141
1) 이주민의 증가와 정주자화	141
2)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143
3) 생활자 중심 접근의 성과와 한계	147
3. 해외 사례의 함의	152

V. 결론 및 정책제언	159
1.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161
1) 다문화사회에 대한 탐색 단계	161
2) 국민, 사회주체로서의 수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	162
3) 선진국 지향성과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163
4) 관계의 제약과 배타적 태도의 재생산	166
5) 수용성 변화의 가능성	167
2. ‘다문화’정책의 현실	169
1) 정책목표의 혼란	171
2) 정책대상의 선별: 차별/배제 접근	172
3) 정책과정에서 이주민의 위치	174
4) 동화 지향성의 유지	176
5) 시민적 통합에 대한 간과	179
3. 정책제언	179
1) 다양성·사회통합 정책으로의 전환	179
2)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도입	181
3) 시민적 통합 증진 정책 도입: 다문화 시민교육의 확산	183
참고문헌	189
부 록	195

표 목 차

<표 I-1> 외국인 노동자 추이	15
<표 I-2> 주요 국적별 외국인 이주자 추이: 2000-2006	20
<표 II-1> 국민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46
<표 II-2> 외국인 고용업체 한국인 직원조사 응답자 특성	48
<표 II-3>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인	51
<표 II-4> 종족적 배제주의: 조사결과 비교	55
<표 II-5> 같은 부서내 외국인 동료 유무 및 국적: 한국인 직원 조사	59
<표 II-6> 사회적 거리감: 찬성응답을 비교	61
<표 II-7> 이주자 집단별 보가더스 척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62
<표 II-8> 성별 사회적 거리감 비교	64
<표 II-9>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 비교	64
<표 II-10>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비교	64
<표 II-11> 사회적 거리감과 외국인 동료 유무 (회귀분석)	67
<표 II-12> 종족적 배제주의 하위 차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69
<표 II-13>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의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별 차이	72
<표 II-14>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촉 경험에 따른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 차이	72
<표 III-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수용성 연구 대상 학교·학급 개괄	80
<표 IV-1> 호주 다문화주의의 원칙과 전략	136
<표 IV-2> ‘다문화공생추진플랜(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의 주요내용	145
<표 V-1> ‘다문화’ 정책 계획 현황	170
<표 V-2>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내용구성	186

그림 목 차

<그림 I-1>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추이	12
<그림 I-2>	국제결혼 추이	17
<그림 I-3>	취학 국제결혼 자녀 추이: 2005-2007	18
<그림 I-4>	외국인 이주자의 구성: 2007	19
<그림 I-5>	외국인 이주자의 국적 분포: 2007	20
<그림 I-6>	전체 협동연구의 목적	30
<그림 I-7>	협동연구의 구성	31
<그림 II-1>	한국인의 요건 항목에 대한 2003년과 2007년 조사 비교 ..	53
<그림 II-2>	외국인의 권리 인정 또는 지원 필요성에 관한 응답 (평균 점수)	54
<그림 II-3>	종족적 배제주의: 한국-EU 비교(평균값 기준)	56
<그림 II-4>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인별 비교	69
<그림 III-1>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 사업’ 예시	98
<그림 IV-1>	이주민에 대한 니시오시 시민과 현영주택 주민의 태도 비교	150
<그림 V-1>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161
<그림 V-2>	결혼이민자의 지원정책 인지도	175
<그림 V-3>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참여도	176
<그림 V-4>	이주민대상 사업을 통해 본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	177
<그림 V-5>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방향	181

부 표

<부표 1>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 추이	197
<부표 2>	결혼이주여성의 출신문화·사회 존중도	198
<부표 3>	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개요: 2007년	199



서론

1. 협동연구의 배경	3
2. 협동연구의 목적	22
3. 협동연구의 개요	30
4. 보고서 구성	37

1. 협동연구의 배경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분주히 일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세와 이들의 ‘어두운’ 생활상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는 그간 준비해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2007년 8월 18일 발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의 권고를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은 한층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¹⁾ 성격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다양한 민족, 출신국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존재하는 실제 사회구성과는 모순되게 ‘단일민족국가’ 이미지와 인종적 우월성 관념이 한국사회 내에 팽배해 있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을 유지해온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지 국가차원의 의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초국가적 이주가 일상화된 세계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 변화를 다루어가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초-국가적 차원의 역동성이 구현되는 세계화의 구조를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이주 자체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의 ‘폭발적’이라고 할 만한 커다란 관심은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변화

1) 킴리카는 세계적 차원에서 다민족국가(multinational state)와 다종족국가(polyethnic state)를 구분했는데, 전자는 비교적 독립적인 민족집단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경우를 지칭하고 후자는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이주에 의해 국가 내에 다양한 민족집단이 형성된 경우를 가리킨다(Kymlicka 1995: 6). 이처럼 객관적 구성에 기초한 구분에 따르면 여기에서 지적한 사례는 ‘다종족국가’에 해당되지만,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 단일민족국가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계기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다민족국가와 다종족국가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민족사회’, ‘다문화사회’를 사용하고자 한다.

4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의 속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이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주 양상의 변화, 이주민의 한국사회와의 관계성의 변화, 그에 따른 사회적 전개 방향에 대한 관심의 형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역동성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전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 차원의 초-국가적 이주 추이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특수한 이주 추세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쟁점

(1) 초-국가적 이주의 진전

초국가적 인구이동과 자본, 상품, 문화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20세기 말부터이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태동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적 인구 이동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시작된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양 대 진영으로 세계를 구분하였고, 그 결과 이주는 각 진영 내에서만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소련과 더불어 인구대국인 중국이 채택한 사회주의적인 주민통제 체계로 인해 국제간의 이동은 물론 국내 이주도 최소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비하면, 서방 자본주의권의 인구 이동은 전후 서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대량이주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비교적 활발하였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서구에서의 이주 역시 그 규모면에서 제한되어 있었다. 노동경제학적인 수요 자체가 대규모 이주를 가능하게 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방진영은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을 추구하였고, 전 세계적 규모로 이를 통제 관리할 기구로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은행(IBRD), 세계은행(World Bank)을 설립하면서 자본주의적 개발과 연대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역에 있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통해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유럽과 일본의 경제 부흥과 저개발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상품과 사람의 이동은 그 규모도 제한되어 있었고 국가를 기본단위로 한 부수적 현상에 불과했다.

이러한 세계 질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으로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양진영간의 긴장완화(detente)와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한 제 3세계의 형성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일차 자원을 저개발 국가를 통해 받아들이면서 자원은 물론 그것을 운송할 사람의 이동도 점차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인구이동은 주로 역사적인 맥락과 관계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띠고 있었다. 즉, 서방 국가들의 과거 식민지나 자원과 연결된 특수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일반적인 형태였던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경을 넘는 이주를 가속화시킬 만한 기반은 현저히 강화되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항공기와 공항, 자동차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량되면서 이주의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는데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거대화된 상품 교역으로 선진국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야 했던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상품뿐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을 위해 점차 이주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들어 국제적 상호 의존은 또 다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질서와 관계 양상을 만들어 내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가 설립되고 각국의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진전되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구, 자원과 상품, 자본, 지식과 문화의 이동은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간과 물건, 정보의 이동 규모가 비약적

6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으로 증대했을 뿐 아니라, 국가간 이동이 특정 단위들 간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일상의 일부이자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구현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초-국가적 세계’가 형성되면서 민족국가(nation-state)에 기초한 20세기적인 사회질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개별 국가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으나, 일개 민족국가의 주권 범주를 넘어서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역과 금융은 물론 문화와 아이디어, 물건, 환경과 테러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이주 역시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는 바야흐로 ‘이주의 시대’(Castles and Miller 1998)가 도래한 것이다.

1965년 전 세계적으로 7천5백만명(세계인구의 2.3%)에 이르던 국제 이주자가 1975년 8천4백만명(2.1%), 1985년 1억5백만명(2.2%) 수준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주자의 절대적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전체 인구 중 비율은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어 초-국가적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2000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2.8%(1억7천5백만명), 2005년에는 전체 인구의 2.9%(1억9천2백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국제이주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IOM 2003, 2005).

(2) 다민족·다문화사회와 민족국가: 쟁점과 함의

특정한 사회 단위를 넘어선 이주는 인구 구성과 사회의 단위, 사회 성원들 간 관계 등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가운데에서도 20세기 말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선 이주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걸쳐 기존 체계에 일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일정한 공통점, 보다 정확히는 공통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기반으로 형성, 발전해왔던 근대 민족국가의 존재 기반과 모순되는 움직임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단위를 전제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질서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족국가는 근대의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정치 공동체의 성원인 시민들 사이에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질서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일한 혈통, 언어, 역사, 문화, 고향을 가진 - 보다 정확히는 그렇게 ‘상상’(앤더슨 1991)된- 민족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시민과 민족, 정치공동체와 문화공동체는 개념적으로 분리되고 현실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지만, 근대민족국가는 하나의 정치-문화공동체를 획정하고 공식교육과 언어, 문화유산과 역사 등을 통해 시민 자신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상상을 지속시키도록 해왔다. 그 결과, 혈통과 문화의 공유야말로 정치공동체 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필수적인 자질, 즉 ‘국민됨(nationhood)’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하는 지배적 경향이 재생산되면서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를 뒷받침해왔다.

그런데, 초-국가적 이주의 본격화는 ‘거주자-민족-시민의 삼위일체’를 전제로 한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동질성에 대한 상상과 신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이주의 상시화, 일반화로 인해 민족적 공유와 동질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힘든 집단이 국가 영토 내에 항시 존재하게 된 것은 물론 특정 집단의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심지어 절대시 되어왔던 공유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됨’의 요소는 혼란에 빠지고 분명한 듯 보이던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국가의 틀 속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국민’의 범위도 불분명해졌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민족국가 내부의 혈통적,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해왔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이주민을 포섭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이주를 제한하거나 이주민 가운데 민족적 동질성 내지 그 가능성, 실제적 기여 정도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에게만 국민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주민에게는 오직 제한된 수준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식으로 토착적 시민권(autochthonous citizenship)과는 확연히 구분된 이류 시민권(second-class citizenship)을 제도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단일성에 기초한 민족국가의 틀을 유지하면서 ‘진짜 국민’과 ‘가짜

국민', '일류 시민'과 '이류 시민'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 내지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간 사이에 구분과 내부적 위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토착인과 이주민 진영 모두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경우 인종차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정부와 국제기구의 조치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공식적인 태도 면에서 인종차별적 편견이 감소했다는 증거도 발견되고 있지만, 일반인의 일상적 태도 면에서는 이주민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계층 사이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두드러지며 (Coenders, et al. 2003: 22-25; EUMC 2005: 15-18) 위기 상황에서는 배타적 태도가 더욱 노골화되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공적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도 무의식적인 편견, 경멸, 무관심, 고정관념 등이 내포되어 있어 '제도화된 인종주의'(김수행 2006: 83)의 존재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유럽사회에 만연해있는 인종차별주의는 이주민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입지를 확보해가는 정치세력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민이 현저히 증가하던 1980-90년대 유럽에서는 신민족주의, 인종주의를 지향하는 이탈리아의 보시(Bossi)동맹, 벨기에의 블람스 블록(Vlaams Blok), 프랑스의 민족 전선(Front National) 등이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하여 개도국 출신의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의 존재를 핵심적 정치 의제로 삼으면서 그 세력을 확보해갔다. 이들은 3D업종의 노동력 수요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활기의 문제 등 이주노동자를 요구하는 구조적 현실은 철저히 간과한 채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적 병폐를 부각시키고 이주민의 존재에 의한 다양성의 증가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문화적 동질성, 인종적 순수성 내지 우월성을 확보한 '진정한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민족성, 문화, 유산, 전통, 차이 등의 용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배제 담론, 즉 '인종 없는 인종차별주의(racism without race)', '차이 중심적

인종차별주의’(Stolcke 1995:4)를 대중들에게 설파하여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비난을 격화시키는 데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된 갈등의 심각성은 일련의 폭력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럽 각국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성향의 백인들이 이주민, 특히 유럽 외부 출신의 유색인종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공격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위치에서 구조적, 제도적 인종차별에 직면한 이주민들이 백인을 공격하거나 양측이 조직화되어 서로 대치하고 공격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1995년 인도-파키스탄계가 모여 사는 브래드포드와 흑인계가 모여 사는 브릭스톤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진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 출생 아시아인(주로 파키스탄계)의 테러가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프랑스의 파리 및 마르세이유 도심에서 수 주간 벌어진 이민자들의 폭동도 프랑스의 가치를 흔드는 사건이었다. 독일에서는 구조적 실업에 내몰려 극우주의자가 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1980년 80건이던 외국인 혐오 관련 사건이 2000년에는 1000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한 바 있다(이용일 2007: 242).

이처럼 초-국가적 이주로 인해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치부해왔던 민족국가의 틀이 결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일각에서는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성을 극복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흔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통칭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성의 인정 범위나 사회 통합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가치,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대안 등에 있어 하나의 범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비교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로 대표되는 공화주의적 모델에서는 사적 생활영역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학교나 공공시설,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며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공적 영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개인의 이국 취향 이상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온건’ 다문화주의(soft multiculturalism), ‘가벼운’ 다문화주의(light multiculturalism) (마르티니엘로 2002: 89-93), 또는 ‘식탁위의’ 다문화주의로서의 한계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많은 공격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essentialistic) 전제에 기초한 신-민족주의적 경향이 대두되면서 공화주의적 모델은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다양성을 기초로 한 정체성에 대한 지지가 지닐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이 커지면서 보편적 공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수용을 강조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시민권을 통해 통합을 모색하는 공화주의적 모델로의 회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Stolcke 1995:10).

다른 한편, 공화주의적 모델과는 달리 공적 영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경향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소수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소수민족의 정치 참여나 공공부문 대표성, 교육, 취업, 거주, 문화향유와 재생산 등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인 평등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호주와 캐나다를 위시한 이민국가에서는 다양성을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질서로 받아들이고 이를 국가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천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일면 초-국가적 이주와 함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이상적인 접근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기본 지향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으로 민족적 단일성과 동질성의 신념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다문화주의가 모순적이게도 국경을 넘어 민족적 단일성과 동질성을 고수하는 ‘원격지 민족주의자’를 양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구건서 2006: 50).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도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민족 간 차별과 분리가 극복되고 역동적인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기 보

다는 차이와 분리가 공적으로 인정되면서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치로 인해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민족간, 계층간 골이 깊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2)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 양상과 사회적 관심의 형성

(1) 출발의 지연과 압축적 전개

세계적 차원의 이주 추세와 이주(민)의 존재를 둘러싼 유럽 등지의 논쟁과 갈등의 양상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황은 여러모로 특수성을 지닌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국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세계적인 이주 추이와 비교하면 한국사회로의 이주의 증가는 다소 지연되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1965년 이후 줄곧 인구의 2% 이상이 국제이주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까지도 외국인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이주의 연결망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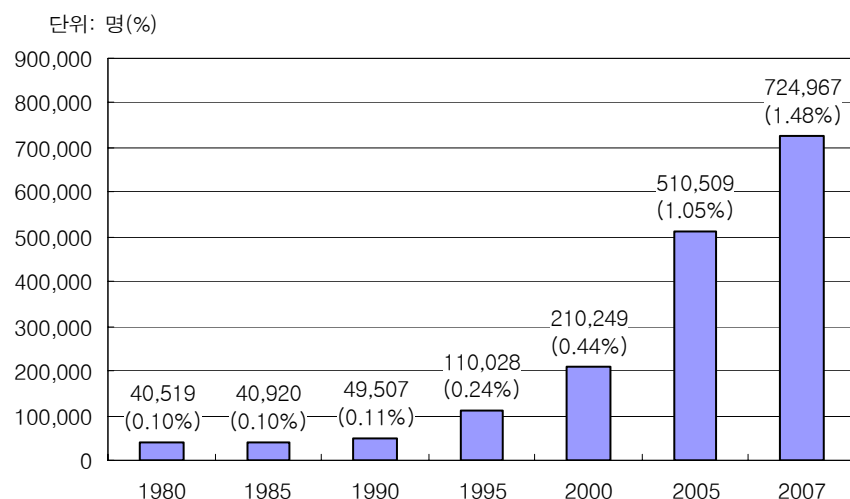
그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반도는 냉전이 지속되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냉전의 양상은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특히 냉전의 중심인 유럽은 독일의 통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 완전한 해체의 길을 걷게 된 시점에도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게 되어 탈냉전의 영향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나타났다. 냉전의 해체와 함께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었다.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적인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주민 유입의 토대가 만들어져가는 가운데에서도 냉전 구조의 잔존은 이주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분단과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공고화된 냉전 구조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동일화 시켰고, 이는 정치권력이 민족주의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냉전 구조는 단순한 정치적 틀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경직화 시키고, 단일화 시키는데 기여

12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하였으며, 이주의 측면에서도 제한적인 차원의 국내 이주와 한국인의 해외이민만을 허용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는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촉발되었다. 세계적인 탈냉전 기류에 편승하는 정치적인 목적 외에 경제적으로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한국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고립적인 상황을 탈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북방정책’을 통해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1992년에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냉전 구조가 해체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주의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서 바로 이 시점부터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자료: 법무부(2007).

<그림 I-1>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추이

1980년대만 해도 4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하던 한국사회 체류 외국인(장기체류자²⁾ 기준)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에

2)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를 의미한다.

는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0.24%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는 2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44%를 차지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2007년에는 전체인구의 1.48%에 해당하는 약 72만 5천명의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약 22만 5천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95만명 가량(전체 인구의 1.93%)의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³⁾.

이처럼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1990년대 초 일단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이후에는 단기간 내에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시장 개방과 결혼구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일어난 압축적인 이주의 전개는 세계적으로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의 경우, 이주의 역사는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민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식민지배와 유럽지역 내 국가와의 인구이동이 이미 19세기 말부터 진행되어 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경제부흥 과정에서 많은 외국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짧게는 반세기에서 길게는 150여년이 넘는 이주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주요한 전환기마다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형성해왔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 자체가 최근에서야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인 만큼,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 자체도 본격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 경험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수한 이주의 역사와 구조 역시 외국인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3) 여기에 단기체류자까지 포함하면 2007년 8월 24일 현재 100만 254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법무부 2007).

도 불구하고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과 논의의 출발을 상당기간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 한국계 중심의 이주와 ‘외국인’의 비가시화

세계적 차원에서는 초-국가적 이주가 일상화되어가던 1990년대 한국에서도 외국인 이주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의 혈통’을 공유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이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1860년대 이후 대륙으로 이주하여 ‘고려인’ ‘조선인(조선족)’으로 살던 한국계 외국인들이 냉전구조의 해체와 함께 한국사회로 들어온 것이다. 특히,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 동북지방의 불황과 단위제도의 해체에 따른 실업을 탈피하고자 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함으로써 당시 입국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한민족’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여기에 새터민 유입까지 중첩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양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문제는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한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정부 정책 역시 이들을 일반적인 외국인과 구분된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출입국과 국내 거주 등에 있어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⁴⁾.

4) 1998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법제정 당시에는 1948년 이전에 이주한 구소련, 중국 동포들이 제외되어 논란이 야기되었다.

<표 I -1> 외국인 노동자 추이

단위 : 명(%)

	전 체	취업비자	연수비자 ⁵⁾		불법체류자
			해투연수생	산업연수생	
1987.12	6,409	2,192(34.2)	-	-	4,217(65.8)
1988.12	7,419	2,403(32.4)	-	-	5,007(67.6)
1989.12	14,610	2,474(16.9)	-	-	12,136(83.1)
1990.12	21,235	2,833(13.3)	-	-	18,402(86.7)
1991.12	44,850	2,978(6.6)	-	-	41,877(93.4)
1992.12	73,868	3,395(4.6)	4,945(6.7)	-	65,528(88.7)
1993.12	66,919	3,767(5.6)	8,644(12.9)	-	54,508(81.5)
1994.12	81,824	5,265(6.4)	9,512(11.6)	18,816(23.0)	48,231(58.9)
1995.12	128,906	8,228(6.4)	15,238(11.8)	23,574(18.3)	81,866(63.5)
1996.12	210,494	13,420(6.4)	29,724(14.1)	38,296(18.2)	129,054(61.3)
1997.12	245,399	15,900(6.5)	32,656(13.3)	48,795(19.9)	148,048(60.3)
1998.12	157,689	11,143(7.1)	15,936(10.1)	31,073(19.7)	99,537(63.1)
1999.12	217,384	12,592(5.8)	20,017(9.2)	49,437(22.7)	135,338(62.3)
2000.12	285,506	19,063(6.7)	18,504(6.5)	58,944(20.6)	188,995(66.2)
2001.12	329,555	27,614(8.4)	13,505(4.1)	33,230(10.1)	255,206(77.4)
2002.12	362,597	33,697(9.2)	14,035(3.9)	25,626(7.1)	289,239(79.8)
2003.12	388,816	200,039(51.5)	11,826(3.0)	38,895(10.0)	138,056(35.5)
2004.12	421,641	196,603(46.6)	8,430(2.0)	28,125(6.7)	188,483(42.7)
2005.12	345,579	126,497(36.6)	6,142(1.8)	32,148(9.3)	180,792(52.3)
2006.06	394,511	166,599(42.2)	6,806(1.7)	31,886(8.1)	189,220(48.0)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2006.10.)

다른 한편,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에는 이미 소위 3D 업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민족’ 이외의 외국인들도 엄연히 존재했으며⁶⁾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들이 직면한 인권문제가 제기되기

5)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1991년 11월에, 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 11월에 도입하여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다가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6) 1994년 12월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이 31,33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인이 12,588명이었다. 이외에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출신자들도 체류하고 있었다(김종일 외 1995: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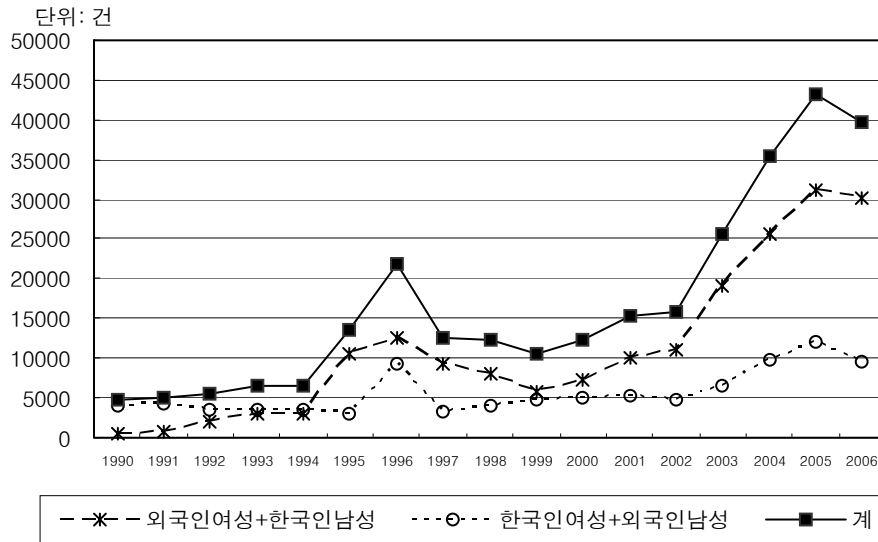
도 했다⁷⁾. 그러나, ‘한민족’ 이주민에 비하면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민족주의적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다.

(3)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의 촉발: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의 정주자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이 본격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로 시장 개방과 국내 노동력 구조의 변화로 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존재가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OECD 가입과 함께 국제적인 기준 부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민감성도 증가하면서 그간 관심 밖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부각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외국인 이주민의 존재와 이들과 관련된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상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집단이 생겨났다는 데 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어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국제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농촌과 농업취업자 등 특정 지역과 계층에서는 지배적인 결혼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7) 1990년대 중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부당한 노동현실에 대해 집단적으로 농성을 벌인 바 있다(김종일 외 1995: 177).



자료: 통계청(<http://www.kosis.nso.go.kr>)

<그림 I-2> 국제결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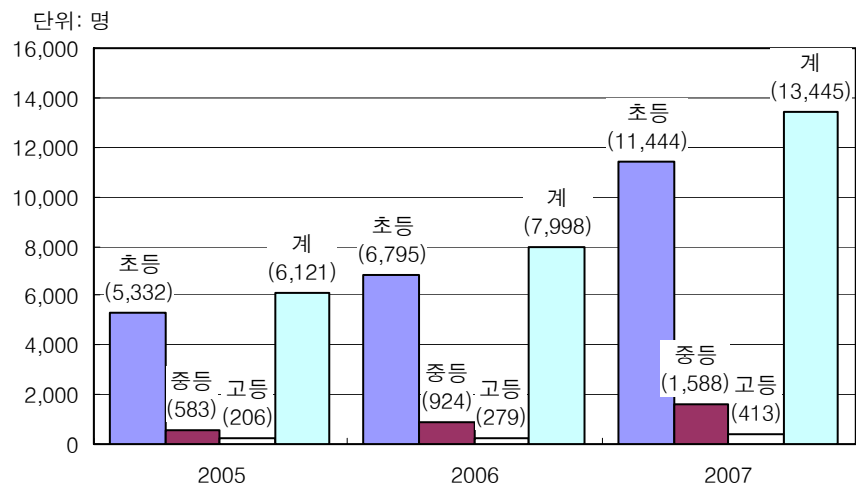
국제결혼의 현저한 증가세는 결혼 대상자의 성격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1998년 개정 국적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계 중국인이 대세를 이루던 국제결혼 대상자가 점차 중국(비-한국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출신으로 전환되면서<부표 1> ‘한민족’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의 일대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외모에서부터 차이가 두드러지고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과 가족, 친족, 이웃 등의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상황이 일반화된 것 자체가 한국사회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일시적 체류자로 간주되던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이들은 한국사회에 상당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와 전면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최초의 외국인’이기도 했다.

이들의 발견과 함께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족적 배경이 서로 다른 배우자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들이 늘어나고 학교를 비롯한 공적의 장에 본격적으

1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로 등장하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 당연히 되어 오던 ‘혈통’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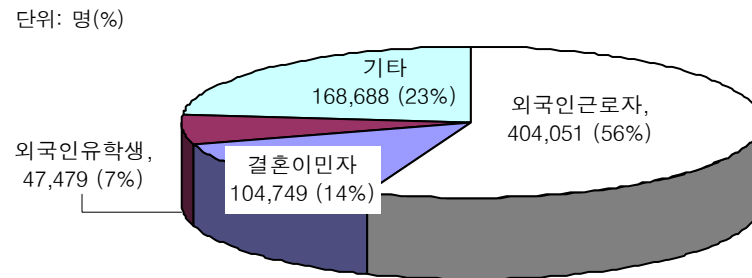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와 생활 적응상의 어려움, 불안정한 가족관계 등의 문제, 자녀의 발달상의 문제 가능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 언론의 대응이 봇물을 이루면서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했다. 이에 더해 하인즈 워드의 한국방문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건까지 전개되면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그림 I-3> 취학 국제결혼 자녀 추이: 2005-2007

이처럼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심은 점차 다양한 배경을 지닌 외국인 이주민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투자자, 그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이 상당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적은 다양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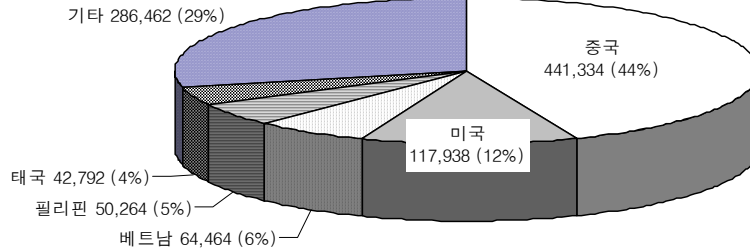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2007)

<그림 I-4> 외국인 이주자의 구성: 2007

또한 이주민의 국적 구성을 보면 세계 각국 출신자가 총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이 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동남아 등 소위 아시아 개도국 국가 출신이 전체 이주자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주요 국적별 이주자의 증가율을 보아도 미국('00-'06년 간 23.6%)과 일본(67.1%) 등에 비해 중국(139.7%)과 베트남(187.7%), 필리핀(72.6%) 출신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개도국 출신자의 비중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단위: 명(%)



자료: 법무부(2007)

<그림 I-5> 외국인 이주자의 국적 분포: 2007

<표 I-2> 주요 국적별 외국인 이주자 추이: 2000-2006

단위: 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0-'06증가율
중 국	159,475	201,184	223,410	237,497	281,934	282,030	382,237	139.70%
미 국	87,457	94,131	101,786	106,390	105,315	103,029	108,091	23.60%
일 본	25,861	33,167	39,648	42,504	42,949	39,410	43,207	67.10%
베트남	19,009	19,717	20,799	24,908	28,655	38,902	54,698	187.70%
필리핀	27,912	28,817	29,700	32,451	34,828	38,057	48,164	72.60%

자료: 법무부(2006)

요컨대, 세계적 흐름과 비교해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는 다소 지연되어 출발하였지만, 일단 본격화된 이후에는 단시간 내에 빠르게 증가하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의 본격화 자체가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계 이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의 특수성으로 인해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외국인 이주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었고 민족 밖의 '외국인' 이주 현상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갑작스럽다’고 할 만큼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존재가 부각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단일민족에 기초한 사회 구성의 전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갑자기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역동성 역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보다 앞서 이주의 증가를 경험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던 서구의 경험은 이 과정이 단선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노정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직, 간접적 갈등이 야기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사회에서 이주(민)를 둘러싼 갈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는데 비하면 최근에서야 외국인 이주가 본격화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주민과 관련된 갈등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주자들의 요구가 급격히 팽창되거나 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는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폭력적인 사태로까지 번지는 사례는 개인적 사건 이외에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의 가능성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 단초로 여겨질 만한 측면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가족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으로 고착되어 가는 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역이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등 유사한 계층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민족집단 별로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화교들의 결합이나 아직은 기본적인 단초만이 보이는 이슬람의 결합,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력화 움직임⁸⁾과 같이 전국적 차원에서 이주민 상

8)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결성된 바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반려취소청구를 제기하여 1심에서

호간의 네트워크가 점차 형성되어 가는 양상까지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동남아 대사 포럼⁹⁾처럼 출신국가 대사관을 통해서, 또는 화교와 같이 출신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문제에 대한 논의구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어 향후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과 정부의 정책, 이주민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협동연구의 목적

1) ‘다문화’ 개념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초-국가적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 구성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 문제의 현실과 향후 전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히 일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다문화’이다.

사실, ‘다문화’는 혼란스러울 만큼 다의적 개념으로서 때로는 객관적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descriptive) 개념이며 때로는 특정한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한 이념적 지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폭넓게 보면 기술적 개념으로서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사회에는 그 정도와 양상에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사회가 다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의미에서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관심을 둘 만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비로소 ‘다문화’는 의미

는 기각되었고 고등법원에서는 결정 가능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9) 동남아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들의 포럼으로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제기되자 동남아 국가 대사들이 한국 정부에 공동 대응하여 시정을 요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를 얻게 되며 그러한 사회만이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발전 계기는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해 질문과 문제를 던지는 집단이 가시화되고 이들의 권리와 사회통합문제가 제기되는데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단일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던 사회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민족국가 외부로부터의 이주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다른 한편, ‘다문화’는 기술적 개념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둔 이념적 지향으로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상당한 정도로 자리 잡고서 영향력을 발휘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공공 정책 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는 ‘다문화국가’ 또는 ‘다문화사회’로 통칭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증진해가는 것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나아가 특정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이를 기초로 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가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다문화주의 자체가 다양성의 인정 범위나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의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대안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때로는 모순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지향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¹⁰⁾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이상과 실제 역시 단일한 틀로 정리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특정 민족 집단이 국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구성원을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거나 배제하려는 국민형성정책 대신 집단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정해 가려는 정도의 공통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Kymlicka 2003: 150).

10) 마르티니엘로(2002)는 실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다문화주의를 ‘온건’ 다문화주의와 소수집단 권리 보장 정책, 정체성 정책, ‘강경’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이념적 지향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된다. 또한 구건서(2003)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코포레이트 다원주의, 급진적 다원주의, 연방제 다원주의, 분리·독립적 다원주의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양한 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다문화사회가 다문화주의의 이념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는 다른 지향을 토대로 다양성에 접근해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와는 대치되는 이념을 표방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뿐이며, 그 자체가 다양성을 다루는 여타의 접근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다분히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구건서(2003)는 다문화주의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와 정면으로 대치될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구성이나 발전 단계에 따라 사회 통합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다문화주의를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된 것은 최근의 일로 이는 20세기 말부터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이주자가 가시화되면서부터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인적 교류가 지속되어 왔으며 화교 집단을 비롯한 이주자 집단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만큼 가시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것이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별 다른 논쟁을 거치지 않고 정부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혼란스러운 개념을 가지고 다분히 논쟁적인 의제를 다루어 가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지난한 작업¹¹⁾을 시작하는 순간 해답이 내려져 버린 것처럼 보이나,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가 폭넓은 참여와 이해, 논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가 극적이라 할 만큼 급격한 전환을 이룬 데에는 한국사회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이주의 증가세와 이주민의 사회적 가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요인이 있겠지만, 이주나 이주민, 그와

11) 독일에서는 2000년 시작된 속지주의 전통의 국적법 개정작업이 4년에 걸친 사회적, 정치적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의 중재까지 거쳐 타결된 바 있을 정도로 논쟁의 골이 깊었다(이용일 2007: 244)는 것은 다문화 논의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 그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상적이고 단일한, 생명력 없는 불구의 담론(엄한진 2006: 73), ‘다문화사회’의 구체적인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피상적인 모토 수준으로 제기되는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 목표는 한국사회의 논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비-이민 전통 국가에서 외국인 혐오가 보다 심각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박병섭 2006: 108),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로 대표적인 비-이민 전통국가이자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오면서 제도적으로도 혈통과 민족적 단일성을 근거로 ‘국민인 자’와 ‘국민 아닌 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는(김현선 2006) 한국사회가 민족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이주민을 완전한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험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한국인의 인종·민족관은 19세기의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장태한 2001: 100)는 지적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그들의 존재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태도, 그 대안을 둘러싼 관심과 입장 등을 점검하고 주요한 난관의 지점을 예견하며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다문화 논의의 진전속도와는 대조적일 정도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 기존 연구 검토

국경을 넘어선 이주와 그에 따라 전개되는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이나 관계양상에 대한 연구로 대별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이주의 동기와 과정, 이주를 둘러싼 구조, 이주사회(host society)에서 겪는

갈등과 적응전략, 이들의 경험세계, 출신사회와의 관계 등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다양한 이주민 집단 가운데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주민 집단 가운데 제일 처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국제적 인구이동과 노동력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사회문제를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설동훈 1992; 1998; 이혜경 1994). 2000년대 이후에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갈등, 특히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 연구의 초점이 전환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이주민 가운데 가장 집중적인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결혼이주여성 내지 여성결혼이민자¹²⁾들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의 어려움, 정책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김애령 1998; 설동훈 외 2005; 2006; 정일선 2006; 정기선 외 2007)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의 구조와 그 안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치,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관계와 경험세계, 적응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이수자 2004; 이혜경 2005; 윤형숙 2005; 김민정 외 2006; 김이선 외 2006)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은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해서는 주로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설동훈 2003)과 제도상의 한계로 인한 교육적 소외문제(김정원 외 2005) 등이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국제결혼 자녀의 학습과정 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경험, 이와 관련된 자아정체성 문제(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금명자 외 2006) 등으로 연구대상과 주제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주민이 가시화된 것이 최근인 만큼 이주민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 지지는 못하고 있으며 주로 개도국 출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요인을 개괄적으로 분석해내는데 집중되어 있다. 다만, 여성결혼이민

12) 정책적 차원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로 통칭되나, 이민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당사자들의 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비해,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의 또 다른 축인 이주민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수용성과 관계 양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이주민과 일반시민들의 관계와 일반시민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 등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주민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 갈등이 상당 부분 이 문제에 기인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서구와 유럽 학계에서는 20세기 이후 줄곧 인종주의(racism)와 인종혐오증(xenophobia)¹³⁾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인종주의적 태도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는(Coenders, et al. 2003; Gijssberts, et al. 2004; EUMC 2005) 동시에 인종주의의 유형과 동향에 접근하기 위한 방대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인종차별에 대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소수민족 인권운동 등으로 생물학적 특징에 기반한 전통적 인종주의적 편견과 차별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규모 이주와 함께 민족성과 문화, 전통, 차이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소통과 변화가 불가능한 본질적(essential) 요소로 규정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민족을 구분, 차별하는 소위 ‘인종 없는 인종주의(racism without race)’, ‘차이 중심적 인종주의’가 생성, 유포되는 바에 대한 연구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Stolcke 1995:4; Blanc, etc. 1995; Banton 1996:8).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내 이주민, 특히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경험하는 한국사회의 일상적 차별 담론과 인종주의적 측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유명기 1995; 2002; 함한희 1995; 한건수 2004). 그러나, 이주민이 급증하고 이주의 양상과 이주민과 한국사회의 관계성이 재구성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13)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흔히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종주의는 위계를 전제로 거리를 두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비해 타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Banton 1998:8).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수용성은 연구 주제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몇몇 조사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지기는 정도로 장태한(2001)은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종, 민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였으며 설동훈(2006)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둘러싼 한국인의 국민·민족 정체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성이나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시켜 소수자 집단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를 분석하기도 했으며(박수미·정기선 2006; 김상학 2004) 국민정체성 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경계의식을 포착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정기선 2004).

이처럼 최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 국민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태도를 포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일면만을 다루고 있어 이주민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모순적인 태도를 포착하고 해석해 내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주민에 대한 배제 경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비롯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의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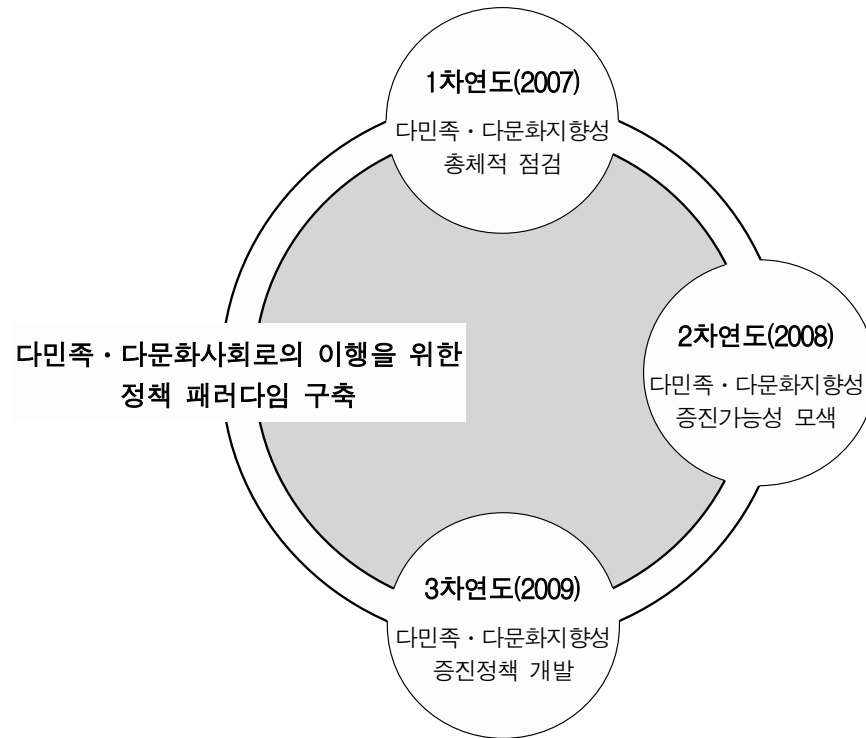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태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특정한 이주민을 실제 대면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양상에 대한 접근이다. 이주민과 시민간의 구체적 관계는 양 측의 존재양태, 접촉의 빈도나 관계의 밀도, 상대적 지위나 대면의 조건,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관계의 진전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선화(2007)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정 지역의 일반시민(원주민)들이 이주민을 보는 시각과 그 변화 가능성을 포착해 낸 바 있다. 한편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불신과 부정적 평가에 기초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화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로 이주민들과 연결되고 경찰의 집중 단속 등에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구체화되고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소통과 공존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주민을 대면하는 한국인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 연구는 찾기 어려운 상태로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을 포착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부문이 공백 상태로 남겨져 있다.

3) 협동연구의 목적

본 협동연구는 그간 이주 및 다문화사회 관련 연구에 있어 간과되어 왔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태도와 구체적인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주민의 증가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전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사회적, 정책적 접근의 포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 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협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 연구는 이 가운데 1차 연도 연구에 해당된다.

1차 연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주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실태와 시민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 특정한 이주민을 대면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양상에 접근하여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을 포착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바 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보다 앞서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온 외국 사례를 통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과정을 전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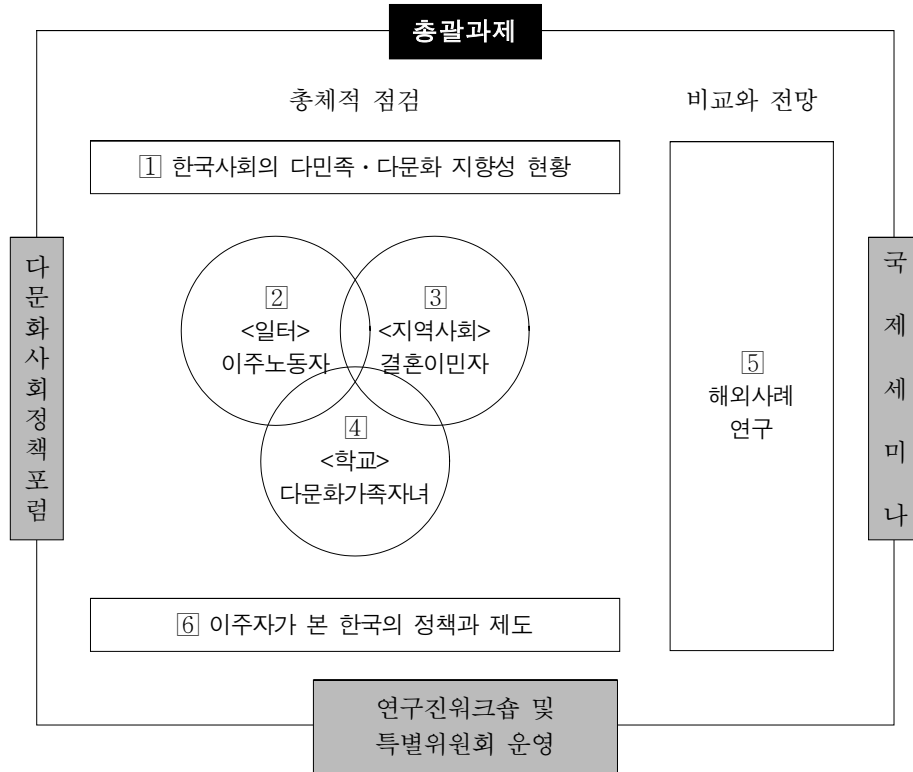


<그림 I-6> 전체 협동연구의 목적

3. 협동연구의 개요

1) 협동연구의 구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될 협동연구의 제1차 연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기획과 분석을 담당하는 총괄과제와 함께 6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었다. 그 전반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I-7> 협동연구의 구성

세부과제①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세부과제②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세부과제③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세부과제④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세부과제⑤ 다민족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 일본과 호주 사례 -

세부과제⑥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총괄과제 추진 방법

전체 협동연구의 구성과 세부과제를 기획하고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① 문헌 연구

국제이주와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전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회·정치·문화적 변동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움직임,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리뷰하였다.

②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다문화사회에 관한 소통의 장인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을 운영하여 연구진과 함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문화사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1차 포럼에서는 이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부각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정책 요구, 해외 주요 정책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포착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2차 포럼에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과 이주민들의 일반적 대면 현황과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1차 포럼(2007. 3. 14)>

▷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의 현실: 다문화사회로의 진전과 걸림돌”

▷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다문화주의 정책: 해외 사례의 성과와 한계”

<제2차 포럼(2007. 5. 2)>

- ▷ 이현선(전북 장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들의 삶에 대하여”
- ▷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한국사회와 이주민”

<제3차 포럼(2007. 12. 17)>

- ▷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③ 국제세미나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개최(2007. 9. 13)

세부과제에 참여한 국내외 연구진이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는 “이주의 증대와 한국사회의 수용성”과 “국가별 사례를 통해 본 다민족·다문화사회 전망”이라는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가자 등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 이주의 증대와 한국사회의 수용성

- ▷ 황정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 ▷ 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 ▷ 양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제2세션> 국가별 사례를 통해 본 다민족·다문화사회 전망

- ▷ 야마모토 카오리(Yamamoto Kaori)(일본 아이치현립대학 문학부 교수)
“다민족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갈등의 양상과 극복과정: 일본의 사례
지역사회의 시도 -아이치현 니시오시 사례를 중심으로-”
- ▷ 줄리아 마르티네즈(Julia Martinez)(호주 울롱공대학 교수)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이문화간 조화를 위한 정책”
- ▷ 한건수(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④ 연구진 워크숍

연구진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동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추진의 핵심적 과정에서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연구진 간에, 연구진-전문가 간에 상호 토론이 이루어져 연구 추진과정에 반영되었다.

- ▷ 1차 워크숍(2007. 2. 21): 세부과제 연구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수정
방안에 대한 검토
- ▷ 2차 워크숍(2007. 3. 26): 세부과제 최종 계획 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 공유
- ▷ 3차 워크숍(2007. 6. 15): 세부과제 중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토론
- ▷ 4차 워크숍(2007. 6. 19): 설문지 문항 공동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진 협의
- ▷ 5차 워크숍(2007. 12. 17):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
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차 연도] 종합 평가

이외에 국제이주 및 다문화사회 연구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협동연구 전체의 구성과 세부과제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⑤ 세부과제 기획, 평가 및 관리

총괄과제에서는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총 6개 세부과제를 기획하고 각 주제별로 전문성을 지닌 연구회 산하 기관과 학회, 국제기구 등에 위탁하여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세부과제 진행과정에서 협동연구로서의 통합성과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⑥ 세부과제 생산 원자료 2차 분석 및 연구결과 종합분석

각 세부과제 별로 적절한 방법론을 채택하여 양적, 질적 데이터를 생산해냈다. 총괄과제는 세부과제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2차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협동연구 전반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산출하였다.

(2) 세부과제별 연구 내용과 방법

세부과제①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 연구내용: 한국인의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민정체성과 시티즌쉽(citizenship)에 대한 태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 연구방법: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3명 대상), 국제비교분석, 문헌연구

세부과제②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 연구내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동료의 인식 및 태도, 사회적 거리감, 인종적 배제주의, 갈등 경험, 외국 인력의 현황과 관련 정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 실태
- 연구방법: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외국인을 고용한 322개의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해당 사업장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문헌연구

36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

세부과제③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 연구내용: 지역주민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책 관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 연구방법: 인터뷰(경기도 안산, 전라남도 영암 지역 지역주민 23명, 서비스 제공 담당자 22명), 문헌연구, 전문가 워크숍

세부과제④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 연구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사와 일반 학생들의 수용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 사례 및 프로그램 분석
- 연구방법: 참여관찰(전북지역 2개 초등학교, 서울 1개 초등학교, 인천 1개 초등학교, 부산 다문화대안학교, 외국인 지원센터 방과후 학교의 일반 교실과 방과후 교실, 다문화특별 프로그램 등), 인터뷰(일반학교 교사 11명, 방과후교사 및 대안학교 교사: 9명, 부모 14명), 일반학생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및 글짓기, 문헌연구

세부과제⑤ 다민족·다문화 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 호주와 일본의 사례

- 연구내용: 호주의 다문화 정책 전개 양상, 호주의 민족 간 갈등 및 조정 사례 분석,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전개 양상,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시 지역사회 사례 분석
- 연구방법: 문헌 연구, 정책 분석, 담론 분석, 지역 사례 연구, 원자료 재분석

세부과제⑥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 연구내용: 한국의 입국관리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이주민의 정책 인지도, 정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
- 연구방법: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이주노동자 116명, 결혼이민자 125명),

인터뷰(이주노동자 10명, 결혼이민자 21명, 시민단체 활동가 3명, 지자체 담당자 2명), 문헌연구

4.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국내외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세부과제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원자료와 인터뷰 자료, 정책 분석결과, 지역사례 연구 결과 등을 기초로 한 것이다.

[Ⅱ.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의식]은 세부과제①과 세부과제②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로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의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주민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비교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인 집단과 작업장 동료 집단의 수용성을 비교함으로써 이주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이주민과의 관계의 진전이 지니는 효과를 도출하였다.

[Ⅲ. 생활공간에서의 대면·수용양상: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특정한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일상생활의 장에서 대면하는 한국인의 태도와 대응양상에 주목한다. 이 부분은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질적인 방법론을 기초로 한 세부과제③과 세부과제④에서 생산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설문조사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이주민과의 구체적 관계 양상과 수용태도, 대응 양상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태도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Ⅳ.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시민적 통합의 중요성: 호주의 일본의 사례]에서는 세부과제⑤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보다 다소 일찍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시켜 왔던 해외 사례를 통해 ‘다문화’ 논의의 성격을 포착하고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정책적 접근을 점검하는 참고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V.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현실과 주요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¹⁴⁾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한국사회의 수용성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적 접근이 지닌 적절성을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14) 세부과제⑥의 결과는 이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졌다.

II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의식

1. 이주의 증대와 ‘다수자’ 수용의식의 의미	41
2. 조사개요 및 방법: 국민의식조사와 외국인 고용업체 한국인 직원조사	44
3. 국민의식조사 결과: 관용성과 거리감의 공존	51
4.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비교: 국민의식조사와 한국인 직원조사 비교 분석	58
5. 소결	73

1. 이주의 증대와 ‘다수자’수용의식의 의미

최근 들어 이주자의 급격한 증대와 새로운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0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즉, 1990년대까지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부족한 노동력 수급이라는 고용정책의 범위에 관심이 국한되어 있었다면,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외국인 정책’ 내지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사회가 산업화·근대화 시대의 지배담론이었던 이른바 단일민족이나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간과 문화의 이동이 확대되는 다민족·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달라진 ‘이민 환경’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향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이용일 2007: 220).

외국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나 소수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및 지원방안을 다루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이주자나 소수자를 바라보는 한국인 즉, 다수자 집단의 태도와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서 다수자인 한국인들은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한 한국인들이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다. 계층간 양극화나 지역감정 등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반면 인종·민족간 갈등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연구 자료도 축적되지 못한 것이다(장태한 2001).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연구에서 부분적

으로 외국인 이주자를 다루는 경우(박수미·정기선 2006), 조사 대상이 일부 대학생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김상학 2004; 윤인진 2002)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이주자의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초점을 맞추고 이주자나 이주자 정의 혼혈자녀를 한국인 또는 한민족으로 인식하는가를 분석한 연구(설동훈 2006)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전반적 인식과 태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인식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작업은 학술적 의미 뿐 아니라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이주자나 소수자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나 관련 단체 및 NGO의 노력, 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지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다수자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운동과 정부정책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윤인진 2002: 595~9).

외국의 경험을 보면 이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본격적인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관심의 시선이 이주자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자와 정주자 간의 갈등, 이주자를 수용하는 새로운 사회통합에 대한 성찰로 확대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처음부터 이주민들로 형성된 국가의 양상은 이와 다르겠지만,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으로 국가가 형성된 이후 이민을 받아들인 일본이나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종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구식민지 출신자들인 이른바 ‘올드커머’와는 달리,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로 유입된 ‘뉴커머’ 증대를 계기로 하여 일본사회 내 외국인의 존재가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이주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 즉 외국인 문제를 개별 이주자 집단의 문제가 아닌 일본사회 내부의 문제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에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정주화 경향도 증대하여 생활의 장, 사회적 공간에서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동질성을 전제로 한 일본사회 제반 시스템의 문제들이 노정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른바 ‘다문화 공생’ 담론이 일본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나게 된다(한영혜 2006: 157-8).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뒤 경제재건 과정에서 산업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였는데, 당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1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 저소득노동자 지위가 부여되었고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는 노동자 가족들의 동반이주현상이 확산되어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차츰 부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 들어서 독일의 국내경기가 냉각되자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들의 경직된 태도와 혐오감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통합 논쟁이 촉발되었다(이진숙 2005; 이용일 2007).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이주 양상과 관련 정책들은 최근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단신·단기체류만을 허용하던 소극적인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대와 이른바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필요성 대두, 외국인 근로자의 사실상 정주화 경향과 지역 사회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증대, 조선족을 비롯한 해외 한인들의 국내 취업 증대,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필요성 증대,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노동력 구조의 변화 등이 그 배경에 있다. 이주의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는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다수자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 조사개요 및 방법: 국민의식조사와 외국인 고용업체 한국인 직원조사

본 협동연구에는 이주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연구(세부과제①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와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연구(세부과제②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가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이주의 증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관,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를 폭넓게 조사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이주자와 자주 접촉하는 집단이므로 의식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차이를 비교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조사 개요

(1) 국민의식조사

국민의식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은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층화하여 비례 할당하는 다단계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다.¹⁵⁾ 조사는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가구방문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전체 1,203명 중 남성은 606명(50.4%), 여성이 597명(49.6%)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49.2%, 영남지역 26.8%, 충청·강원의 중부권 13.0%, 호남·제주지역 11.1%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30

15) 표본 추출의 과정은 1단계로 2006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만19세 이상 인구를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정리한 후, 2단계로 전국 16개 시도별로 인구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로 최종조사지점에서 성×연령 할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실사는 한국갤럽에서 담당하였다.

대가 25.3%로 가장 많으며, 40대 24.1%, 20대 23.4%, 50대 16.3%, 60세 이상 10.9%의 순이다.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 44.1%로 가장 많으며, 고졸은 42.6%, 중졸이하는 13.1%가 포함되었다. 직업별로는 전체 24.4%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가장 많았고, 블루칼라 근로자 20.6%, 전업주부 20.0%, 화이트칼라 근로자 18.0%, 학생·무직 및 기타로 응답한 사람이 14.6%, 농수축산업이 2.3% 순이다.¹⁶⁾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1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응답한 사람이 31.3%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300만원이 28.8%,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전체 30.6%를 차지하였다. 외국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1.6%, 외국인 이웃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3.1%, 외국인 친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16) 전국인구현황(2006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성, 연령별 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최종조사지점은 지역을 고려한 읍면동의 통반리로, 각 최종조사지점에서 성×연령 할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 연령 특성이 다른 변인(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 직업 등)에 우선하여 고려된 관계로 지역, 성, 연령 외 다른 특성들은 모집단 구성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II-1> 국민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
전 체		1,203	100.0
지 역 별	서울/인천/경기	592	49.2
	강 원	36	3.0
	대 전 / 충 청	120	10.0
	대 구 / 경 북	127	10.6
	광 주 / 전 라	120	10.0
	부 산/울 산/경남	195	16.2
	제 주	13	1.1
성 별	남 자	606	50.4
	여 자	597	49.6
연 령 별	20 대	282	23.4
	30 대	304	25.3
	40 대	290	24.1
	50 대	196	16.3
	60 세 이 상	131	10.9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58	13.1
	고 졸	513	42.6
	대졸(2년제 포함)	530	44.1
	모 름 / 무응답	2	0.2
직 업 별	농 / 수 / 축 산 업	28	2.3
	자 영 업	293	24.4
	블 루 칼 라	248	20.6
	화 이 트 칼 라	217	18.0
	전 업 주 부	240	20.0
	학생/무직/기타	176	14.6
	모 름 / 무응답	1	0.1
가구 소득 수준	100 만원 이하	87	7.2
	101~200 만원	281	23.4
	201~300 만원	347	28.8
	301~500 만원	376	31.3
	501~1천 만원	97	8.1
	1천 만원 초과	12	1.0
	모 름 / 무응답	3	0.2
외국인 이웃유무	있 다	398	33.1
	없 다	805	66.9
외국인 친구유무	있 다	271	22.5
	없 다	932	77.5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한국인 직원 조사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명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1,000개 이상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 경기도의 김포시(1,303개), 시흥시(1,287개), 안산시(1,180개), 화성시(2,082개)와 인천의 남동구(1,128개)와 서구(1,006개)의 6개 지역을 선택하였다. 화성시를 제외한 5개 지역에서는 각각 30개의 업체를 표집하고, 업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화성시에서는 50개의 업체를 표집하였다.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이나 면을 선택하여 그 지역의 업체들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22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500명의 한국인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75.8%로 다수를 차지하며 학력별로는 중졸자 5.0%, 고졸자가 57.6%, 전문대졸 23%, 대졸 학력자 14.4%로 나타나 국민의식조사에 비해 고졸 학력자가 더 많은 특징이 있다. 직급별로는 일반 근로자(31.6%) 뿐만 아니라 과장 및 부장(32%), 계장·주임·대리급(23%) 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사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표 II-2> 외국인 고용업체 한국인 직원조사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
전 체		500	100.0
지 역 별	경 기 시 흥	68	13.6
	경 기 김 포	82	16.4
	경 기 화 성	122	24.4
	경 기 안 산	74	14.8
	인 천 서 구	78	15.6
	인 천 남동구	76	15.2
성 별	남 자	379	75.8
	여 자	121	24.2
연 령 별	20 대	98	19.6
	30 대	202	40.4
	40 대 이 상	200	40.0
학 력 별	중 졸 이 하	25	5.0
	고 졸	288	57.6
	전 문 대 졸	115	23.0
	대 졸 이 상	72	14.4
직 업 별	미숙련 노동자	16	3.2
	숙련 노동자	196	39.2
	사무직원	118	23.6
	전문가	17	3.4
	관리 및 경영직	131	26.2
	판매 서비스직	10	2.0
	기 타	12	2.4
직 급 별	일반 근로자	158	31.6
	조장 반장 감독	46	9.2
	계장 주임 대리	115	23.0
	과장 부장	160	32.0
	임원 이상	19	3.8
	기 타	2	.4
월평균 급여액	100만원 이하	31	6.2
	101~150만원	138	27.6
	151~200만원	166	33.2
	201~300만원	133	26.6
	301~500만원	10	2.0
	무응답	22	4.4
부서내 외국인 유무	있 다	379	75.8
	없 다	121	24.2
외국인 친구 유무	있 다	88	17.6
	없 다	412	82.4

2) 주요 조사내용 및 척도

국민의식조사와 외국인고용업체의 한국인 직원조사에는 설문지 기획 단계에서 상호 비교분석을 고려하여 공통된 문항을 포함시켰다. 인종·민족적 편견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회적 거리(보가더스 척도) 문항과, 유럽의 인종문제 연구에서 최근 도입된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개념을 설문지에 도입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4.0을 사용하였다.

(1)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사회적 거리는 물리적인 공간상의 두 지점 간 거리를 재듯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친근감을 측정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하며, 여기에서 거리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친밀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이다. 인종과 민족이 다른 다양한 집단 간의 경계나 거리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보가더스 척도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나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친구, 이웃, 직장동료, 국민, 한국 방문자 등 7가지 항목으로 다른 인종·민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민족·인종을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조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한국인과 비교적 접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개 집단, 즉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동남아인¹⁷⁾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조사하였다. 조선족은 중국 국적 소지자라 하더라도 조상을 같이하는 동족이고 언어 소통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중국인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반대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인 등은 개별 국적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남아인으로 함께 묶어서 조사하였다.

17)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이 5개 집단 외에 몽골인, 남아시아인(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새터민(탈북자) 등 총 8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조사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대상 조사에는 5개 집단에 대한 조사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두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이 장에서는 5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종족적 배제주의는 다양한 인종·민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코엔더스 등(Coenders et. al. 2003)은 EU 회원국 각국의 인종적 편견실태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두 가지 사회조사, 즉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문항들을 추출하여 개념을 구성하였다. 코엔더스 등의 연구에서는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소가 모두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럽과는 상이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유럽에서 사용한 설문 중 일부를 선택·수정하여 한국 조사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실제 조사에 포함된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 요인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다문화 사회의 한계, 이주자 시민권 반대,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다양성에 대한 저항, 이주로 인한 위협의 집합적 인지 등 여섯 가지이다. 각 요인별 구체적인 조사 문항은 아래 <표 II-3>과 같다.

<표 II-3>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인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 요인	조사 문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 국가의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다문화 사회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합법적 외국인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불법 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집합적 위협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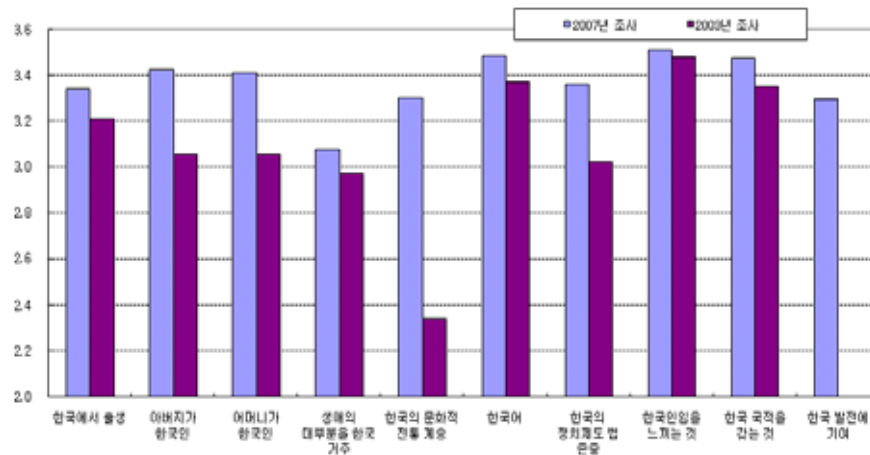
3. 국민의식조사 결과: 관용성과 거리감의 공존

국민의식조사는 이주자의 증대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다수자인 한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은 네 가지 개념, 즉 사회적 거리, 시티즌십(citizenship)에 대한 인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종족적 배제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네 갈래의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인의 태도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용적 태도와 더불어 출신

국의 경제개발 수준에 따라 위계화된 차별의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즉, 한국인들은 이주자나 다문화 사회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의식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즉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균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주자에 대한 관심 정도나 접촉의 단면이 응답자의 거주 지역, 계층적 지위, 사회적 정체성이나 문화적 가치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상들이 국민의식조사에 그대로 포착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들의 관용적 태도가 부각된 부분은 시티즌십과 종족적 배제주의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흔히 시민권으로 번역되는 시티즌십 개념 중에서도 ‘한국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자격조건’, 즉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국민 정체성을 혈통적 요인과 법·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써의 자격에 대해 혈통적 요인보다 법적·정치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자격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어 능력, 한국 국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단일민족 관념이나 순혈주의 의식이 강하다는 점은 흔히 지적되어 왔으나,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혈통적 요인은 법·정치적 요인보다 동의의 수준이 낮았으며, 유사 문항으로 조사한 2003년 조사¹⁸⁾와 비교하였을 때 점차 중요성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18) 2003년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이다. 2007년 조사는 비교를 위해 거의 같은 질문을 사용했지만, 2003년 설문항목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 두 항목이다: ① ‘조상이 한국인인 것’(03) →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07), ②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03)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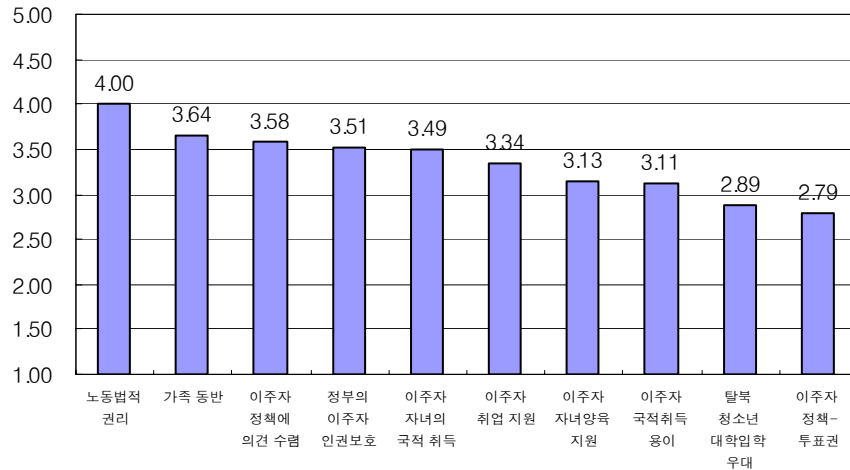
* 4점 척도로 조사: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 4점(매우 중요하다)

<그림 II-1> 한국인의 요건 항목에 대한 2003년과 2007년 조사 비교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4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혈통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혈통 요인보다 법·정치 요인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젊은 세대들의 자유주의적 합리성과 개방성 의식은 한국인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가족동반, 외국인 정책에 외국인 이주자들의 의견 반영, 이주자 인권보호 등에 대해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외국인 이주자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과반수이상의 사람이 찬성하였다(5점 척도에 평균 3.49). 또한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였다.

54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 5점 척도로 조사: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매우 동의한다)

<그림 II-2> 외국인의 권리 인정 또는 지원 필요성에 관한 응답(평균 점수)

‘종족적 배제주의’ 문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자나 외국인에 대한 관용성은 증대하였다. <그림 II-3>을 통해 종족적 배제주의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별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다양성을 용인하고 이주자의 증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함에 있어서는 EU 사람들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단, 불법이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유럽인들보다 다소 배제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주자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들을 정주자가 아닌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동이주자에게 정주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정책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퓨(Pew)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국가별 세계화 수용 태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는 ‘외국인 이민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25%만 “그렇다”고 답해 47개 조사 대

상국 중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았다. 한국인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거부감은 이 연구소의 지난 2002년 조사(37%)에 비해 서도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한다.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국가로는 이탈리아(87%), 스페인(77%), 미국(75%), 영국(75%) 등 서구 선진국과 인도네시아(89%), 말레이시아(89%), 남아프리카공화국(88%), 인도(84%) 등 개발도상국이 꼽혔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47%), 중국(52%) 등 동아시아 국가는 대체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표 II-4> 종족적 배제주의: 조사결과 비교

data source	dimension	응답률(%) ²⁰⁾		평균(mean)	
		EU ²¹⁾	한국	EU	한국
Euro barometer (2003)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25.2	11.2	.366 ^{a)}	.3545 ^{c)}
	다문화 사회의 한계	59.9	48.4	.702 ^{a)}	.5991 ^{c)}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	38.7	15.3	.409 ^{b)}	.3540 ^{c)}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22.1	55.6	.352 ^{b)}	.6394 ^{c)}
ESS (2003)	이주자에 대한 저항	50.47	-	.505 ^{b)}	-
	난민에 대한 저항	29.01	-	.440 ^{b)}	-
	다양성에 대한 저항	47.69	18.5	.554 ^{c)}	.3751 ^{c)}
	인종적 거리 선호	20.59	-	.296 ^{c)}	-
	범죄자 송환정책 선호	69.54	-	.695 ^{c)}	-
	위협에 대한 집합적 인지	58.17	28.9	.554 ^{c)}	.4766 ^{c)}

a) 3점 척도로 조사, 0 ~ 1사이의 값으로 recode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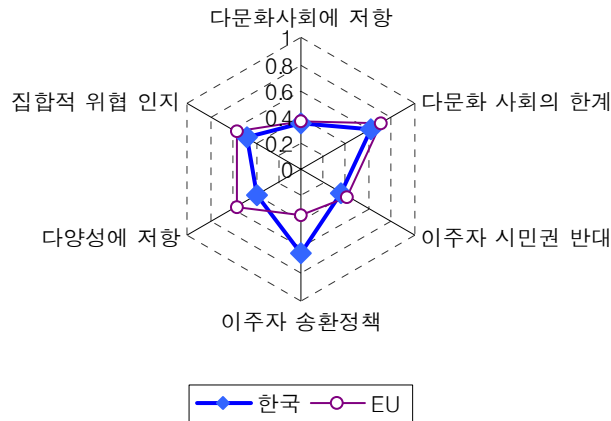
b) 4점 척도로 조사, 0 ~ 1사이의 값으로 recode 함.

c) 5점 척도로 조사, 0 ~ 1사이의 값으로 recode 함.

19) 2007년 10월 6일 조선일보 보도내용.

20) 여기에서 응답률은 종족적 배제주의를 지지하는 응답률을 의미하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적 응답을 배제한 찬성 응답률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EUMC(2005)의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1) EU 평균은 조사대상 국가별 인구 크기나 표본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계산한 평균값임.



<그림 II-3> 종족적 배제주의: 한국-EU 비교(평균값 기준)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한국인들이 이주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 사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의 관용적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아직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고 인종·민족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적 조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격적인 이민국가라고 할 수 없는 한국에서 이주자 문제는 주로 인권침해나 소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소수자인 외국인 이주자가 다수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갈등을 빚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인의 표면적인 관용성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감이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이주자나 외국문화에 대해 느끼는 소원함이나 위계적인 태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족 - 새터민 - 일본인 - 동남아인 - 중국인 - 몽골인 - 남아시아인의 순서로 사회적 거리감이 점차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

은 외국인을 이웃이나 동료, 친구 등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국민’이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관대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의 최근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종합적인 보가더스 척도에서도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모든 외국인 집단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허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순서가 서구인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 다음 순서로 이웃이나 친구가 아닌 ‘국민’이 나타난다.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정치적 시민과 혈통적 민족의 경계가 일치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한국인들은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국민’을 중요한 내집단(in-group)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혈통요인보다 법·정치요인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의식이 변모하고 있다는 해석과는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도구나 척도상의 차이, 그리고 비교 기준의 차이 등이 다른 해석을 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정체성이나 국적 취득의 조건 등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정책적으로도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주의 증대와 세계화의 추세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는 시각, 외국문화 관심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태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어느 국가의 문화인가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문화에 가장 관심이 많았으며, 일본·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중간 수준으로 엇비슷하지만, 경제개발 수준이 낮은 동남아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낮은 반면,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음식, 대중문화, 공연예술, 자연경관 및 관광, 역사유산, 언어, 사회경제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50~60대의 고연령층은 관광 등 특정 분야에 관심이 치우쳐 있으며 20대의 경우는 음식문화·미국과 일본의 언어 및 대중문화에 관심을 보여 연령별 차이가 두드

러졌다. 특히 젊은이들은 외국 문화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문화에 관심이 치우쳐 있으며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출신지인 동남아 문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화 다양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는 국가별·문화 영역별 관심이 매우 위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화, 이문화(異文化)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문화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히 이웃의 아시아 개도국과의 문화교류보다는 선진국의 ‘대문화(Great Culture)’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인의 태도에서는 양가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라는 데에 한국인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주자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주의 증대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며 외국인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나 외국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위계적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4.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비교:

국민의식조사와 한국인 직원조사 비교 분석

이 절에서는 두 가지 조사 자료, 즉 전국 규모의 국민의식조사와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대상의 의식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주자들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일하며 비교적 접촉의 기회가 많은 한국인 직원들과, 그러한 접촉의 기회가 거의 없는 일반 국민들의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이로부터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두 응답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살펴보면, 국민의식조사는 학력, 연령, 직업별로 다양한 집단을 아우르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에 대한 조사는 특정 지역의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30~40대가 대다수이며,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별로는 대다수가 숙련노동자와 사무직, 관리경영직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반적인 응답경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II-5> 같은 부서내 외국인 동료 유무 및 국적: 한국인 직원 조사
단위: 명(%)

같은 부서 내 외국인 동료 유무			
있음		379 (75.8)	
없음		121 (24.2)	
외국인 동료의 국적별 사례 수 (전체합산)			
태국	336 (22.22)	방글라데시	21 (1.39)
베트남	269 (17.79)	우즈베키스탄	19 (1.26)
조선족	227 (15.01)	파키스탄	18 (1.19)
필리핀	212 (14.02)	미얀마	11 (0.73)
인도네시아	174 (11.51)	캄보디아	10 (0.66)
몽골	88 (5.82)	네팔	8 (0.53)
중국인	72 (4.76)	러시아	4 (0.26)
스리랑카	41 (2.71)	카자흐스탄	2 (0.13)
		계	1512 (100.0)

두 집단의 차이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촉경험이다. 국민의식조사의 응답자 중 외국인 이웃이 있다는 응답은 33.1%,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나 아는 외국인이 있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할 내지 8할이 거주지역에서 외국인과 접촉할 경험이 거의 없으며 외국인과 친분도 없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외국인 고용업체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경우 같은 부서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75.8%로 매우

높아 작업장에서 외국인 이주근로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17.6%로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는데, 이는 설문 내용이 단순한 외국인 친구가 아니라 ‘한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17.6%가 반드시 낮은 수치라고만 볼 수는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10명 중 약 2명 정도는 한국인만큼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동료가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과 인종·민족이 다른 집단과의 접촉경험이 인종적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오히려 증가하고 이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더 강화된다(Coenders, et al. 2005)는 지적들도 있다. 결국 접촉 여부 그 자체가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과 상황, 접촉의 내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거리나 인종·민족적 편견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1) 사회적 거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인식에서 국민의식조사와 한국인 직원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조사에 포함된 외국인은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의 다섯 집단인데,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주로 고용하는 이주자에 해당하는 조선족, 동남아시아인,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인 이주자와의 접촉 경험이 그들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보가더스 척도는 일종의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로서 사회적 거리를

느끼는 정도가 위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전통적인 보가더스 척도는 입국(또는 입국금지) - 시민(국민) - 동료 - 이웃 - 친구 - 결혼 항목의 순서를 사용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두 조사에서 모두 외국인 이주자에게 허용하는 사회적 관계 순서는 ‘방문객 - 동료 - 이웃 - 친구 - 국민 - 자녀의 배우자 - 나의 배우자’ 순서로 나타난다. 그런데 구체적인 찬성 비율에 있어서는 조선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외국인 고용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찬성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외국인 이주자들과 접촉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일반국민보다 이주자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한국인 직원들의 찬성응답이 더 높은 항목은 조선족과 동남아시아인을 동료로 수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미 같은 직장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6> 사회적 거리감: 찬성응답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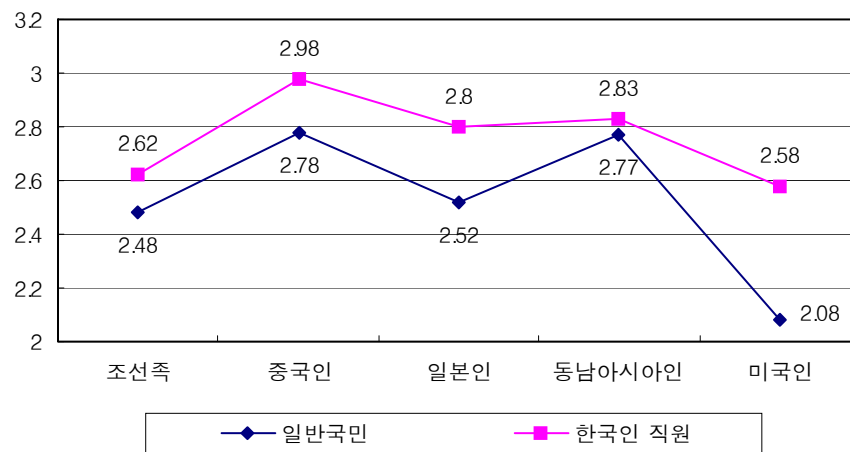
단위: 명(%)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방문	468 (94)	1160 (96)	459 (92)	1151 (96)	475 (95)	1150 (96)	478 (96)	1179 (98)	483 (97)	1162 (97)
국민	254 (51)	740 (62)	167 (34)	564 (47)	153 (31)	617 (51)	193 (39)	787 (65)	159 (32)	592 (49)
동료	410 (82)	974 (81)	367 (74)	885 (74)	369 (74)	956 (79)	395 (79)	1053 (88)	407 (82)	892 (74)
이웃	392 (79)	995 (83)	357 (72)	899 (75)	360 (72)	932 (78)	389 (78)	1062 (88)	372 (74)	903 (75)
친구	320 (65)	845 (70)	270 (54)	771 (64)	310 (62)	838 (70)	343 (69)	985 (82)	292 (59)	794 (66)
자녀의 배우자	128 (26)	293 (24)	82 (16)	233 (19)	119 (24)	340 (28)	124 (25)	415 (34)	78 (16)	199 (17)
배우자	119 (24)	267 (22)	73 (15)	196 (16)	102 (20)	302 (25)	104 (21)	347 (29)	66 (13)	176 (15)
사례수	500	1203	500	1203	500	1203	500	1203	500	1203

국적별 보가더스 척도 점수(1-7점)를 나타낸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 직원들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이주민 집단에서 한국인 직원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가 일반국민의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리감을 느끼는 인종 집단의 순서는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반국민과 한국인 직원 모두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느끼며, 조선족 - 일본인 - 동남아시아인 - 중국인의 순서로 사회적 거리감이 늘어나고 있다.

<표 II-7> 이주자 집단별 보가더스 척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한국인 직원 조사		국민의식조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선족	2.62	1.68	2.48	1.57
중국인	2.98	1.79	2.78	1.76
일본인	2.80	1.83	2.52	1.71
동남아시아인	2.83	1.64	2.77	1.72
미국인	2.58	1.70	2.08	1.33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눈에 띈다. 일반국민과 한국인 직원의 보가더스 점수 격차를 보면 미국인(.50)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차이가 많고, 다음으로 일본인(.28) - 중국인(.20) 순서로 나타나며, 조선족(.14)과 동남아시아인(.06)에서는 일반국민과 한국인 직원의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작업장 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주자 집단이 조선족, 동남아시아인, 중국인이란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국민들에 비해서 이주민을 더 멀게 느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촉경험이 빈번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거리감은 일반 국민의 수준에 보다 가깝게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령·교육수준별 비교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응답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한국인 직원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 직원과 일반 국민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뚜렷한 차이는 조선족에 대한 태도에서만 나타나는데, 그 방향은 일반국민과 한국인 직원에게서 반대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조선족에 대한 거리감은 일반국민들 중에서는 남성들이 더 가깝게 느끼는 반면, 한국인 직원들 중에서는 여성들이 더 조선족을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인, 일본인, 동남아인,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멀게 느끼는 집단은 한국인 직원 남성 집단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8> 성별 사회적 거리감 비교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남성	2.91	2.33	3.11	2.76	2.87	2.53	2.98	2.76	2.60	2.14
여성	2.52	2.62	2.94	2.80	2.78	2.52	2.79	2.77	2.58	2.02
합계	2.62	2.47	2.98	2.78	2.80	2.52	2.83	2.77	2.58	2.08
F값	.029*	.001***	.382	.694	.657	.969	.250	.975	.920	.119

*** p<.001 ** p<.01 * p<.05 † p<.1

<표 II-9>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 비교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20대	2.47	2.32	2.79	2.68	2.31	2.26	2.59	2.68	2.29	1.94
30대	2.54	2.46	2.84	2.63	2.70	2.32	2.79	2.77	2.59	2.02
40대	2.77	2.56	3.23	2.89	3.15	2.75	3.00	2.82	2.72	2.18
이상	2.62	2.48	2.98	2.78	2.80	2.52	2.83	2.78	2.58	2.08
합계	2.62	2.48	2.98	2.78	2.80	2.52	2.83	2.78	2.58	2.08
F값	.259	.104	.046*	.056	.001***	.000***	.123	.514	.125	.030*

*** p<.001 ** p<.01 * p<.05 † p<.1

<표 II-10>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비교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한국인 직원	일반 국민
중졸 이하	2.64	2.87	2.88	3.12	2.96	3.30	3.16	3.04	2.72	2.42
고졸	2.76	2.61	3.08	2.88	2.95	2.57	2.91	2.83	2.66	2.10
대졸	2.40	2.23	2.84	2.57	2.55	2.24	2.67	2.62	2.44	1.96
이상	2.62	2.48	2.98	2.78	2.80	2.52	2.83	2.77	2.58	2.08
유의 확률	.075†	.000***	.347	.001***	.057†	.000***	.185	.013*	.356	.001***

*** p<.001 ** p<.01 * p<.05 † p<.1

연령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이 젊을수록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거리감을 적게 느끼며 이러한 경향은 두 조사 모두에서 공통된다. 특히 근로자와 일반국민 모두 일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 연령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난다.

그런데 국민의식조사와 한국인 직원조사가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미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응답이다. 먼저 미국인의 경우 일반국민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인 직원조사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에 중국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연령에 따른 거리감 증가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한국인 직원들에게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국인에 대해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해보면 국민의식조사와 한국인 직원조사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대비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별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을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선족과 일본인 밖에 없고 그 차이도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표 II-10>에서 보듯이 한국인 직원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인 경우에는 가장 이주민 집단에 대해 낮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지만, 고졸의 경우는 조선족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중졸이하에 비해서 더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사회적 거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한국인 직원조사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 국민에 비해 한국인 직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남성 직원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 응답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한국인 직원조사에서는 학력의 영향이 크게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화, 다른 인종에 대한 관용성을 증대시키는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한국인 직원의 경우 이주자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상쇄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접촉면에 있는 한국인 직원, 특히 고졸학력자나 남성 직원들이 이주자에 대한 거리감을 다른 집단보다 더 멀리 느낀다는 것은 작업장 내의 업무 효율이나 일상적 의사소통, 문화적 상호작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이주자의 국적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외국인과의 접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작업공간에서 주로 접촉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미국인과 일본인을 제외한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학력·연령·직종은 통제변인으로,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동료의 유무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모델 1),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령은 조선족 및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연령이 젊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직원조사에서 학력변인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귀분석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일반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대하는 데 반해, 한국인 직원조사의 경우에는 중졸이하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조선족이나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고졸집단보다 오히려 더 적게 느끼는 경향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주자들과 접

축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의 경우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주자들을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대하는 추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11> 사회적 거리감과 외국인 동료 유무 (회귀분석)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1	2	1	2	1	2
Constant		3.191***	3.237	3.292***	3.313***	3.113***	3.060***
성별		-.484*	-.473	-.301	-.285	-.235	-.241
학력 (기준: 고졸)	중졸	-.314	-.303	-.480	-.495	.113	.103
	전문대졸	.040	.059	.130	.134	-.065	-.068
	대졸	-.397*	-.388	-.201	-.173	-.093	-.109
연령 ²²⁾ (기준: 30대)	20대	-.229	-.230	-.200	-.196	-.346	-.340
	40대	.238	.227	.462*	.442	.220	.205
직업 (기준: 생산직)	미숙련노동자	-.151	-.177	-.519	-.530	-.305	-.324
	사무직	-.244	-.272	-.230	-.249	.002	.036
	전문직	-1.021*	-1.030	-.836*	-.782	-.634	-.657
	경영관리직	-.353*	-.335	-.479*	-.456	-.335*	-.322
	판매서비스직	-.531	-.567	-.122	-.155	-.095	-.063
	기타	.336	.308	1.067*	1.035	.916*	.914
외국인동료 유무			-.316		-.544		.158
R2		.050	.055	.051	.056	.037	.039

*** p<.001 ** p<.01 * p<.05 † p<.1

한편 직업별로는 전문직이나 경영관리직에서 거리감을 낮게 느끼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고 있다. 고학력의 화이트칼라층 일수록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는 경향은 전체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외국인 동료와의 접촉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22) 한국인 직원 조사의 원자료가 실제 연령이 아니라 10세 간격의 연령집단 별로 코딩되어 있어, 이 분석에서는 연령을 연속 변수로 다루지 않았으며 30대 연령집단을 준거로 하여 더미 변수로 분석하였다.

질의 분석에서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외국인 동료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조사의 설문지 안에는 친한 외국인 친구 유무, 외국인과의 불화 경험 등 여러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국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불화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응답자의 주관적인 성향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외국인 동료의 유무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측정이 가능하고 또한 동료의 국적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과 교차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외국인 동료 유무는 해당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국인이나 조선족에 대해서는 동료가 있을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아무튼 작업장에서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근로자를 더 가깝게 느끼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 종족적 배제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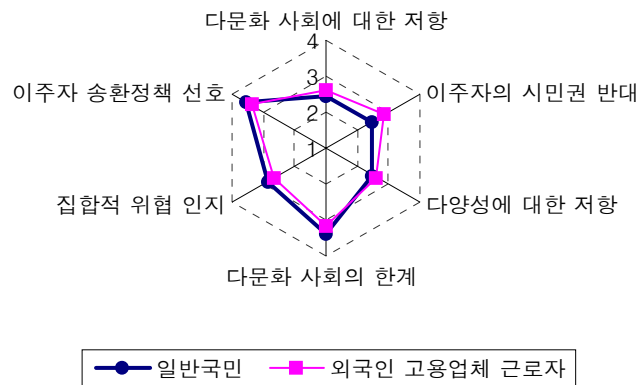
(1) 종족 배제주의의 하위 요인별 태도 차이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종족적 배제주의는 모두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 총합에서는 일반 국민과 한국인 직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섯 개 하위요인별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난다. 배제주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두 집단 모두에서 ‘이주자 송환정책 찬성’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국민의 평균 점수는 3.56, 한국인 직원은 3.40점이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본국송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보다 단호하게 송환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12> 종족적 배제주의 하위 차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국민의식조사		한국인근로자 조사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2.42	0.79	2.63	0.75	24.984***
다문화 사회의 한계	3.40	0.82	3.16	0.92	26.743***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	2.42	0.66	2.86	0.77	144.764***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3.56	0.89	3.40	0.95	10.854***
다양성에 대한 저항	2.50	1.05	2.61	1.07	3.564†
집합적 위협 인지	2.85	0.86	2.65	0.81	20.967***
배제주의 총합	2.86	0.47	2.89	0.49	1.404

*** p<.001 ** p<.01 * p<.05 † p<.1
 주: 종족적 배제주의는 1점~5점(5점 척도)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자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냄.



<그림 II-4>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인별 비교

각 하위요인별로 일반 국민과 한국인 직원들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 직원이 일반 국민에 대해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요인은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다양성에 대한 저항 등이었으며 특히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다. 요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

자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을 동반할 권리를 부여하며,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일반 국민들보다 한국인 직원들이 오히려 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격차는 크지 않지만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이주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에 비해 한국인 직원들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과 접촉을 더 많이 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응답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더 배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인 이주자와의 접촉이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국인 고용업체의 한국인 직원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 항목은 ‘집합적 위협 인지’, ‘다문화 사회의 한계’, 그리고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이었으며 그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은 집합적 위협의 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집합적 위협에 대한 인지(perceived collective threat)²³⁾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한국인이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며, 이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것이 많다는 부정적 태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과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한국인 직원들이 이주자의 시민권을 인정하는데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이주가 야기하는 ‘집합적

23) 일반적으로 종족적 배제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은 현실갈등이론(Real Conflict Theory)과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실갈등이론에 따르면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외국인 이주자와 현실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일수록, 즉 외국인 이주자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삭감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주자에 대해 더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직접 외국인 이주자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존재 자체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적 위협(external threat)과 구분되는 차원에서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Coenders, et al. 2003: 8~9).

위협'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런 일이지만 일단 이주노동자들과 실제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경우는 이주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신의 직장에 이주 노동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송환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보다 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더 관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소수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접촉 경험에 따른 차이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종족적 배제주의 평균 점수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그리고 이주자와의 접촉 경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 보았다. 사회적 거리 분석과는 달리 종족적 배제주의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주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포괄하는 변인이다.

<표 II-13>에서 보듯이,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는 성별이나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직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촉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접촉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 인종적 배제주의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즉, 같은 부서 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가 더 낮아지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 응답자,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자는 각각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이주자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불화 경험은 인종적 배제주의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II-13>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의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별 차이

범주	하위집단	사례수	평균	F값
성별	남성	379	2.90	.783
	여성	121	2.85	
연령	20대	98	2.87	.554
	30대	202	2.87	
	40대 이상	200	2.91	
학력	중졸	25	3.01	1.761
	고졸	288	2.90	
	대졸	187	2.84	
직업	미숙련노동자	16	2.75	2.073 [†]
	숙련노동자	196	2.96	
	판매서비스직	10	2.84	
	사무직	118	2.85	
	전문직	17	2.54	
	경영관리직	131	2.86	
	기타	12	3.10	

*** p< .001

** p< .01

* p< .05

† p< .1

<표 II-14>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촉 경험에 따른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같은 부서나 작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없다	119	2.82	0.46	3.407 [†]
	있다	375	2.91	0.49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	잘 안됨	70	2.942	0.48	4.019 [*]
	보통	317	2.913	0.44	
	잘 됨	106	2.770	0.60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	없다	408	2.91	0.45	4.355 [*]
	있다	86	2.79	0.62	
외국인 근로자와의 불화	없었다	435	2.88	0.48	1.831
	있었다	59	2.97	0.54	

*** p< .001

** p< .01

* p< .05

† p< .1

5. 소결

두 가지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 특징으로 부각된 것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이주민의 증대나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이주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적 응답태도는 이주문제로 촉발된 사회갈등의 수준이 아직 낮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이주자의 존재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끼치거나, 복지정책 등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이주자들과 나누어가져야 하는 문제 등 이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수준이 높아질 경우 한국인들의 관용적인 태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대다수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비교적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꺼리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도 낮다.

셋째, 이주자와 이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 내부에서도 다양한 집단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상이한 태도들이 공존하고 있다. 젊은 연령의 고학력층들은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아시아지역 출신 이주자들의 문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세계화의 중심부, 이른바 선진국이 주도하는 대문화나 일부 선진국 언어의 습득에 관심이 치우쳐 있다. 즉, 앞으로 세계화와 문화다양성의 증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할 집단들은 ‘위로부터의 세계화’만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나 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일어나는 교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외국문화나 교류 증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족과 같이 언어적 동질성이나 계층적 동질성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적게 느끼고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일터에서 이주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한국인 직원의 태도를 일반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접촉의 효과가 다문화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 직원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더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주의 증대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종족적 배제주의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일수록 배제적 태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접촉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에서 한국인 직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적인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노동권이나 시민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보다 오히려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진전될수록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다수자 한국인의 인식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내면화해온 규범이나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급속한 변화에 대해 자신의 원래 입장을 지키려는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이 이주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하여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다수자들의 인식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게 될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서구 선진문화만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의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대문화 추종에서 탈피하여 세계화의 중심부와 주변부 관계, 로컬 문화와 다양성의 가치 등을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인들 내부에서도 사회계층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주민을 인식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주민의 국적에 따라 우호적 혹은 적대적 입장에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인들 자신의 계층적 위치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공감의 수준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인이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문화·다민족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 이해교육의 체계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III

생활공간에서의 대면 양상: 학교와 지역사회

- | | |
|---------------------------------------|-----|
| 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우·교사의 수용 양상 | 82 |
| 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서비스 담당자의 수용 양상 | 104 |
| 3. 소결 | 123 |

최근 들어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사회변화, 이주민과 한국사회의 관계 등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이주민 집단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 경험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수용성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이주민의 존재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피상적 차원에서는 ‘선의’를 표현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과의 실제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몇몇 지점에 있어서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걸맞지 않는 태도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주민의 존재를 대중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 실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식과 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주민 집단 가운데에서도 한국인들과의 대면의 폭이 비교적 넓고 전면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학교와 지역사회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실제 관계와 이들에 대한 기대와 평가,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과 대응 양상 등을 통해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과의 비교나 대면 상황에 따른 비교를 통해 관계의 진척 정도와 그에 따른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나 결혼이민자와 대면하고 관계를 맺는 이들의 관계 형성 양상 및 수용 태도는 주로 참여관찰이나 심층인터뷰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은 특정 지역을 선택해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이들과 일상적인 접촉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주민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 서비스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NGO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선택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으로서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 전라남도 영암군은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곳으로서 일반적인 사회관계 양상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면에서 여러모로 비교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수용태도는 전북지역의 2개 초등학교, 서울의 1개 초등학교, 인천의 1개 초등학교, 부산의 다문화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교실 수업참관을 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수업 과정, 생활 모습, 상호작용과정 등 학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담당 교사 및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II-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수용성 연구 대상 학교·학급 개괄

대상학교	개 괄	참관학급
서울 M초등학교 * 외국인 근로자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G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출신이주노동자 집주 지역에 위치 - 외국인 근로자센터 소재, 이주노동자 자녀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24명. 한반에 1-2명 - 몽골 출신이 주. 필리핀, 러시아 출신 *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프로그램 운영 (국어교육반, 테니스반, 문화체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년 1개 교실. 일본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학생 1명. 교우들이 어머니 출신국가 모름 - 6학년 1개 교실. 몽골출신 학생 2명 -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국어교육반) 몽골출신 4명, 중국 조선족 1명, 필리핀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한국인/프랑스에서 성장 1명 - 주위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센터 방과후 프로그램(G학교)

(계 속)

<표 Ⅲ-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수용성 연구 대상 학교·학급 개괄 (계속)

대상학교	개 괄	참관학급
인천 D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교육청 지원 '다문화 중심학교' - 다문화가족 자녀 5명. (인도네시아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중국인 대리부모 2명, 조선족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 다문화 특별 프로그램(주위학교 공동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년 1개 교실. 인도네시아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 다문화 특별 프로그램
전북 N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자녀 2명	- 3학년 1개 교실. 필리핀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전북 S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다문화 교육정책 학교 - 다문화가족 자녀 26명. 일본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주. 필리핀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 교사, 친구, 학부모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학교(글쓰기 교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1개 교실. 일본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4명. 필리핀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 4학년 1개 교실. 일본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2명
부산 다문화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가 대안학교. 2006년 9월 개교. - 총 27명의 학생 중 다문화가족 자녀 14명. 러시아 출신 6명(이 가운데 러시아(고려인) 어머니 한국인과 재혼 5명), 러시아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중국 조선족 4명, 네팔인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2명, 베트남 출신(아버지라이따이한)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년 1개 교실. 8명중 4명. 러시아 출신 3명, 베트남 출신 1명 - 4학년 1개 교실. 3명중 2명. 중국 조선족 1명. 러시아 어머니 + 한국인 아버지 1명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흐름에 대해 참관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외에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참관과 함께 심층면담을 시도하였으며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글짓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²⁴⁾

24) 초등학생들은 실제 경험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기대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교육지원의 어려움 및 지원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 및 관련 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민 등이 학교 밖에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원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관하기도 하였다.

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우·교사의 수용 양상

1) 교우

(1) 표면적 수용의 이면

흔히 ‘다문화가족 자녀’로 통칭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족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의 수업과정과 일상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관찰, 담당 교사 또는 부모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교우들 사이에서 외국이나 외국 출신자에 대해 직접적인 반감을 표시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식적으로는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과 ‘잘 지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실천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상적 놀림과 차별의 간과

무엇보다 교우들과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적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우들로부터의 놀림과 차별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행해지는 놀림이나 차별적인 함의를 띠는 언사는 주로 피부색을 비롯한 특징적인 외모나 말투, ‘이상한’ 발음의

우려도 있어 주로 일상적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관찰과 글짓기, 담당교사나 부모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용태도에 접근하였다.

이름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어머니를 둔 성현이²⁵⁾ (인천 D초등학교 4학년)와 별이(인천 D초등학교 6학년)는 피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까무잡잡하고 눈이 커서 저학년 시기에 “너희 부모님 외국인 이시니?”라는 질문을 받고는 하였다. 어머니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오셨다고 하면 아이들은 명백한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놀릴 때 활용하기도 한다. 피부와 외모에서 차이가 있는 아이들에게 “까맣다”라는 놀림은 기본이고 이름 역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현이와 달리 일반 학생들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경철이(인천 D초등학교 3학년)는 어머니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아프리카’라는 말을 장난처럼 듣고 있다. 현재 다문화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빈이는 러시아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일반 한국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외모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말은 비교적 잘하는 편이지만, 다문화대안학교에 오기 전 다녔던 일반 초등학교에서 외모 때문에 한국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를 많이 당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문화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전학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교우들의 일상적 놀림과 차별적 언사에 둘러싸인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교우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놀림의 대상이 되는 부모의 출신국가와 외모적 특징, 언어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경우까지 발견할 수 있다.

<인천D초등학교 4학년 경철이>²⁶⁾ (연구자: 엄마가 태어난 나라...인도네시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프리카... (연구자: 어머니가 오신 섬은 어느 섬인데?) 아프리카... (연구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불쌍하다고 생각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25) 사례의 모든 이름은 가명임.

26) 인터뷰 내용은 가능한 한 직접적 표현을 그대로 살려 기록했다.

<다문화대안학교 4학년 담임교사> 작년 여름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11명이 (다문화 대안학교로) 옮겼어요. 그랬을 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일반학교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몰랐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아이들보다도 우리 반에 있는 러시아 아이인 ○○는 얼굴이 확 연히 달라요. 제가 한 번 문화 박물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한국아이들이 ○○를 보고 ‘튀기새끼야’라고 놀린 적이 작년에 두 번 있거든요. **센터에다 글을 낸 적이 있는데 ○○의 글을 읽어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를 보고 “저 애들이 뭐라 그래?”라고 물었더니, 아이 반응이 “저를 외국인이라고 놀렸어요.”였어요. 튀기라는 말을 안 하고 외국인이라고 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많이 당하는 일이라 별반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학교에서도 자기를 같은 편에 안 넣어줬었던 괴로움 그런 걸 이야기 하면서 무조건 방어적 이에요. 공격적이든지. 욕하거나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캠프 때 느꼈던 것 보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같이 생활을 많이 해 보니까 ○○가 너무나 속이 상해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차별적 경험이 주류 집단인 교우나 교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일상적 장난이나 친해지는 과정 정도로 받아들여지거나 일종의 소문이나 후문꺼리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M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몽골 출신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그냥 무난하게 어울리고... (그럼 애들이 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알고) ... 그 아까 선생님 (한국어 교실 교사)이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애가 짝 아이가 남자아이치고는 착실한 아인데 아까 개가 조금 놀렸다고 해서..., 내가 청소하라고 해서 남은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개가 너무 착실한 아이라 말썽도 안 피우고..., “○○야, 너 에르덴 놀렸냐?” 내가 인제 물어봤어요. 같은 교실에 있어도 지네들끼리는 이런 일은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놀렸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애가 “예. 저기요. 에르덴이 뭐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시 상처가 되겠죠. 지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말이 나까지는 안 들리고..., 유난하게 눈에 띄거나 하는 건 아니었는데 애는 괴로웠던가봐요.

<서울M초등학교 한국어교사> 소망이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이 서툴러요. 근데 인제 엄마가 한국으로 왔다 갔다하시니까...이번에 지난달에 러시아에 또 들어갔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7월에 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서울에

서 아빠가 돌보기가 힘들어서 엄마 따라 갔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글 때문에 애들이, 왜 애들이 그럴까요. 발음이 부정확하고 덩치가 좀 크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놀려... 오히려 도와주고 감싸주고 같이 가야 되는데 2학년이 아직 어리잖아요... 놀리는 이러한 게 가까워지는 과정인데 또 놀리는 과정에서 힘겨워 가지고... 애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있다가 왔다 그러면 애들이 아니까 뭐 러시아말로 놀리는 거 욕 하는 거 자기들 장난 하는 거 러시아말로 해봐라 자꾸 놀리니까...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친밀관계 형성에 대한 소극적 태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교우들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은 상당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 없이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에 서툰 학생들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없이 외로운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이들은 외모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한국어도 능숙한 학생들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교우들 앞에서 가능한 한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현재에는 비교적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지만 5학년 때까지 친구관계로 어려움이 많았던 서울 M초등학교 현주(6학년)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6학년 첫날 담당교사가 출석부에 적혀있는 현주의 몽골이름을 부르자 현주가 자기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였고 나중에 그 일로 교사와 따로 울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몽골이름을 사용하면서 동료 학생들이 자신을 멀리 했던 어려움을 다시 겪기 싫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자녀가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한국어에 서툰 외모에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언어와 외모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아이들은 가능한 한 부모의 출신국가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친구를 사귀려 한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끼리 함께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등 잘 어울리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 이주자가 밀집되어 있

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속에서 민족적 집단 구분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태도의 일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놀림이나 차별이 일상화되고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친구조차 사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의 원인은 주로 당사자 개인의 성격 문제로 돌려지는 경향이 짙다. 특히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수업 진행이나 모둠활동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교사나 교우들은 그 요인을 개인적인 특성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급우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유사한 관계를 맺는 이유 역시 다문화가족 자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사나 교우들 사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 이들에 대한 놀림이나 차별적 언사를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해 내보이는 직접적 거부감 역시 교육 현장에서는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찰이나 인터뷰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나 외국인 부모를 친 교우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부정적 태도나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 이러한 태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북 N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우리말을 못하는 친구와 매일 교실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말을 가르쳐주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찻찻하다’, ‘싫다’, ‘답답하다’, ‘머리를 쥐어박고 싶다’ 등 부정적인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이웃에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나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은지”를 물어본 결과 ‘답답’할 것 같거나 ‘찻찻’한 느낌,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할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불쌍한’ 느낌 등을 표현한 학생이 50% 이상에 달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글짓기를 통해 보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와 한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외국인을 ‘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외국인 혐오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성향까지 발견할 수 있다.

인천 D초등학교 4학년 글짓기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여러 명의 외국인이 채석장에서 버스를 탔다. 외국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적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전쟁을 많이 했다. 그러므로 많은 군사가 죽고 다쳤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다 적이다.

인천 D초등학교 4학년 글짓기

마트에서 가족과 돌아다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흑인) 마트에 와서 쳐다보았더니 지나가면서 입을 벌리고 “하”하면서 하고 지나갔다. 그 때 **냄새가 났는데 정말 싫었다.** 가족들은 물건을 고르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 **그 이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싫어졌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 다니는지 모르겠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좋겠다.

(2) 도와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우나 교사의 수용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습과정 중에 보이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공통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 대부분은 숙제나 준비물 챙기기에서부터 한국어나 한국사 등 문화적 지식을 요구하는 학습과정까지 ‘뒤떨어지는’ 아이들, ‘쫓아오기 힘든’ 아이들로 특징 지워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교사가 나눠서 읽기를 시켰다. 혜정이가 더듬거리면서 읽는다. 발음이 약간 어색하다. 더듬더듬 한 글자씩 읽는다. 혜정이는 평소에 말할 때는 발음 이상하지 않은데 읽기를 할 때는 발음이 부자연스럽다. ... 선희가 이어서 잘 읽는다. 진규는 커졌다 작아졌다. ‘많아서’를 ‘만아져’로 발음을 하자 아이들이 웃는다. 그러자 교사가 “너희들도 가끔 그렇게 발음하잖아”라고 하고 “계속 읽어”라고 한다. 진규는 얼굴이 빨개진다. 교사가 잘 읽었다고 해주니까 이어서 또박또박 읽으려고 한다. “콩콩”을 “공공”으로 읽고 “향기도 맡았습니다”는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읽고 읽는다.(전북S초등학교 2학년 1반 2007년 6월 11일 3교시 국어시간)

성현이는 계속 칠판을 쳐다본다. 선생님의 질문이 이어져도 수학시간에 보였던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성현이는 자신의 팔뚝을 쳐다보며 옆짝에게 힘자랑을 해보이기도 한다. 선생님의 질문에는 입을 벌긔하지도 않는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보자”고 하자 아이들은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한다. ... 책을 보며 교사는 문학산 이야기를 한다. ““문학의 정기”란 무슨 뜻이지요? 비류가 처음으로 문학산에서 도움을 세웠지요? 여러분 비류 알아요? 주몽에 나오는지?”... “빨리 모듬 만들기. 모듬 만들어서 인천 지역 소개하는 광고문을 만들어야 해요. 인천의 무엇을 알릴 것인가 정하세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에 성현이는 책도 보지 않는다.(인천D초등학교 4학년 사회시간)

이에 대해 다른 학생들은 웃음으로 ‘가볍게’ 넘기거나 전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M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재원이의 경우 한국에 온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수업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데, 같은 모듬 친구들은 교사의 설명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수업 준비물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은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급에서는 교사가 학생들 간에 멘토-멘티를 맺거나 도우미 친구들을 배정하는 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제도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가족 자녀 사이에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일방적 관계가 고착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같은 모듬이 되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해 교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자신들은 잠깐이나마 방치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경쟁적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돌아오는 데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 경계의 목소리가 뚜렷하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종의 차별’이라는 근거로 태도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의 교사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로 해당 학생의 발표를 장려하고 스티커도 2배로 주는데 대해 일반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전북S초등학교 2학년>

주은: 수업 중에 발표 시키는 거는 좋아요. 사탕도 먹구요. 스티커도 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짜증나요....우리가 먼저 손 들었는데 **늦게 손 든 개네들 시키니까 싫어요.**

형택: 손을 안 들어도 **(개네들은) 시켜줘요.**

주은: 근데 선희 시키는 건 좋아요. 같은 모둠이라 자석을 두 개씩 받으니까.

주희: 친구들은 좋은 데 선생님이 싫어요.

세원: 선생님이 **개네만 많이 시키니까...싫어요.**

주은: 온누리안은 별로 발표 안 한다고 2개씩 붙여 주고 우리는 1개씩 붙여 주니까 **차별하잖아요.**

세원: 선희하고 진규는 손을 매일 드는데 조금밖에 안 시켜주고 혜정이 은자, **맨 처음에 개네들만 시켜요.** (웅성 웅성....)

(3) 출신국가별 태도의 분화

이처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차별적 언사가 일상화되고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차별에 노출되거나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차별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토로하는 경우는 주로 동남아나 몽골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이며 이에 비해 일본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 사이에서는 차별이나 놀림으로 인한

어려움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 출신국가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당 학생이 ‘영어’를 잘하는 경우에는 일부 학습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반 학생들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영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해당 학생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하는 경우까지 있어 모국어로 된 ‘이상한’ 발음의 이름에 대해서는 놀리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D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필리핀 어머니를 둔 별이(6학년)는 초등학교 1,2학년 때만 해도 피부가 까맣다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으나 6학년이 된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어머니가 필리핀인이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고 한다. 별이는 2년에 한번 정도 필리핀의 외가댁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급우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슬기가 영어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별이는 필리핀에서 전혀 영어를 배우지 않았고 외가댁 역시 영어가 아닌 필리핀의 지역 방언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 영어연수가 붙어 일면서 주위 교우들에게 해당 학생은 영어라는 문화자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외국에 대한 태도가 분화되고 있는 일반적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세부과제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관심의 격차가 클 뿐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영역별로 뚜렷한 관심의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에 대한 관심의 위계가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출신국가와 사용언어-정확히는 사용언어에 대한 기대-에 따라 명확히 서로 다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파리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어떻

게 할 것인가”,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서울 M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글짓기와 백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천 D초등학교 4학년생들의 글짓기에서도 출신국가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서로 다른, 심지어 상반된 태도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편으로 서구권과 백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가 현저하며 호기심, 문화접촉과 학습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흑인은 ‘더럽고’ ‘가난하고’ ‘무서운’ 대상으로서 피하고 싶은 욕구, 멀리하고 싶은 욕구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특히 개도국 출신의 부모를 둔 학생은 ‘아프리카’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며²⁷⁾ 이것을 일상적 놀림의 주제로 삼기도 한다.

서울M초등학교 6학년 글짓기

1. 내가 프랑스 파리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내가 파리에서 그냥 살 것이다. 파리는 아름다운 곳이어서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달라서 내가 프랑스 말을 최대한 빨리 배워서 학교에 다니면서 프랑스 말을 마스터해서 친구도 되고 학원은 이제 한국이 아니니까 학원은 안 다니면서 **프랑스 말 배우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럴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부다 프랑스 파리에 데려와서 다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살고 싶다.** 학교가 끝이 나면 바로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할 것이다.

2. 내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내가 차라리 그냥 비행기타고 미국에 갈 것이다. **콩고에는 아프리카 쪽이니까 못사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냥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갈 것이다.** 미국에 와서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그래도 배우기 쉬우니까 빨리빨리 영어를 배워서 가족을 불러서 살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땅은 크니까 최고급 좋은 집을 사서 내가 집에서 타인을 불러 놓고 평생 일시키고 너무나 편하게 살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할 것이다.

27) 김이선 외(2006: 142)의 연구에서도 베트남 출신 며느리에 대해 시어머니가 베트남을 ‘아프리카’에 비유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에 대해 유명기(1999:159) 역시 한국인들의 인식에서 동남아인은 황인종 보다는 흑인종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 D초등학교 4학년 글짓기

백인AND흑인을 보았을 때의 내 생각

나는 백인들을 보면 왠지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떨린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면...'

하지만 흑인들을 볼 때는 괜히 불쾌하다.

‘아... 짜증나. 하필 흑인이야’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흑인들이 짜증난다. 왜냐하면 피부색이 까만색이면 더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인천D초등학교 4학년 글짓기

지하철에서....

스르르 스르르 지하철문 열리자 흑인이 앉아 있고

스르르 스르르 지하철문 열리자 내 마음 두근거리네

스르르 스르르 지하철문 열리자 두려움 한꺼번에 밀려오네.

2) 교사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기본적 태도나 가치 지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처럼 기본적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학습과정, 각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접근은 교우들의 태도와 관계 형성에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의 전반적 학교생활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1) 급조된 관심과 집단적 일반화

조사대상이 된 일반학교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면하는데 있어 보이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다소 있는 경우라도 관심 자체가 지극히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싣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교에 ‘다문화가족 자녀’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느닷없이’ 전달된 ‘다문화’ 개념은 교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으로 일정한 집단을 설정하게 한 것이다.

<서울M초등학교 교감> 글썄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오면서. 오면서 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요 정책이. 그전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와서 한 며칠이 있으니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다문화가정 뭐 느닷없이 돈을 주면서 추진하라고. 그래서 다문화가 뭐야. 모르잖아요. 다문화가정이 뭔지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외국에서 부모들이. 부모들이 외국인인 자녀들이 다문화가정이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지난해에 지난해에는 우리학교에 14명이 있었어요. 14명 있었고. 금년에는 22명인가 있죠. 아마. 많이 늘었어요. 24명인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늘어나는 추세 같더라고요.

<인천D초등학교 교감> 그것은 저는 다문화가정이라는 거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튼 (그전에도) 오학년이나 사학년이 있었으니까 있던 건 사실이죠. 확인은 인제 선생님(다문화가정자녀 프로그램을 맡는 교사)이 오시는 바람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알게 됐죠. ... (연구자: 그 당시 아무런 그게 없을 때에는 뭐 그다지 선생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전혀 없었어요.

‘다문화’, ‘다문화가정’²⁸⁾이라는 단어 이외에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스스로 개념을 형성해야 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작업은 철저히 교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며, 결국 적지 않은 교사들이 누

28)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2004년 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가정, 혼혈인 가정 등 차별적 함의를 띤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제안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대상으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그러나,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념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복잡한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구를 ‘다문화가족 자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되는지를 판단하고 실제 적용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이혼 및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다문화가족’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나 한국인 부모의 사망으로 조선족 부부가 후견인이 되어 돌보고 있는 학생을 ‘다문화가족 자녀’에 포함해야 하는지, 외국인과 한국인이 재혼한 경우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중 일부는 외국에서 태어났고 다른 일부는 한국인이어서 이들이 남매로 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일견 단순하고 명확한 것처럼 전달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념과 범위는 교사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상식적 인식과 자신의 직접적 관찰 경험 등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념을 설정하고 특징을 발견해가고 있는데, 흔히 그 개념은 ‘혼혈’이나 ‘피부색’ 등의 혈통주의적 개념으로 정의되며 부분적으로는 ‘빼뺏어졌다’ ‘단정하지 못하다’는 식의 부정적 함의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하고 일반화된 개념 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서 발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들은 피부색이나 행동 특성이 ‘한국인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점에서 안도감을 갖는 것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M초등학교 교무부장> (몽골 이름을 읽으며) 이렇게 쓰는 아이들은 아직 개명을 안 했더라구요. 나머지는 거의가 다 개명을 한 상태고...아무튼 다문화라는데 혼혈인 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혼혈아잖아요. 근데 우리학교 애들은 유난히 그렇게 많이 피부가 까맣다던지 그런 애들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애들이 순수하고 특별히 빼뺏어 졌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전북N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얼굴색도 까맣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 같고, 행동 바르고, 외모적으로 예쁘고, 교우 관계 좋고 웃도 단정하게 입고 오고.

이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에 가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거나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일정한 집단으로 설정해야 하는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과 무엇인가 다른 존재’라는 정도로 인식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이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출신국가나 경제적 배경, 가족 상황 등이 매우 다양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무엇인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같은 국가 출신이면 공통점이 더 있으리라는 식의 다소 막연하고 일반화된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기초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하기도 한다.

<서울M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저는 정말 잘 챙겨줄 줄 알고 처음에는 (몽골출신 2명)을 같이 앉혔거든요. 몽골 애라고 근데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재원이가 몽골말을 잘하니까 아이들 이름 가지고 몽골어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점심시간에 한번 했어요. 애들이 막 신기하잖아요. 몽골말이 영어도 아니고 선생님 재원이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하는데 현주는 모르는 척 아예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성향이 같지는 않아요.

(2) 준비되지 않은 실천의 돌입

교사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면하는 양상은 이들의 수나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정책 등에 따라 서로 비교된다. 한편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소수이고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학교의 교사들은 수업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따라서 별 다른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수업 태도나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정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알림장이나 전화로 전달되는 사안에 대해 오해가 생기거나 학생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특정한 범주로 설정하고 특별한 지도를 해야 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상식적 수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을 형성해가는 교사로서는 여러 가지 당황

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족 자녀는 교사의 세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로서 이들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울 뿐이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지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던 교사들은 학급에서 해당 학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 파악 자체에 확신이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서울M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우리와 다른 6 어찌구 이렇게 시작되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 저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보통은 특수아동들에 대해서는 연수 때에도 많이 듣고 수업도 듣고 했는데 그렇게 다문화아이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실습 때도 대학교 때도 실습 나갈 때도 실습학교에 다문화애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이 현장에 온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들과 관련해 일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는 전적으로 교사 개개인에게 달려있다. 적절한 지침서도 없으며 주위의 교사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상대를 찾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들을 위해 별도의 학습과정을 구성하는 일은 ‘맨 땅에 헤딩하기’와 같다고 할 만큼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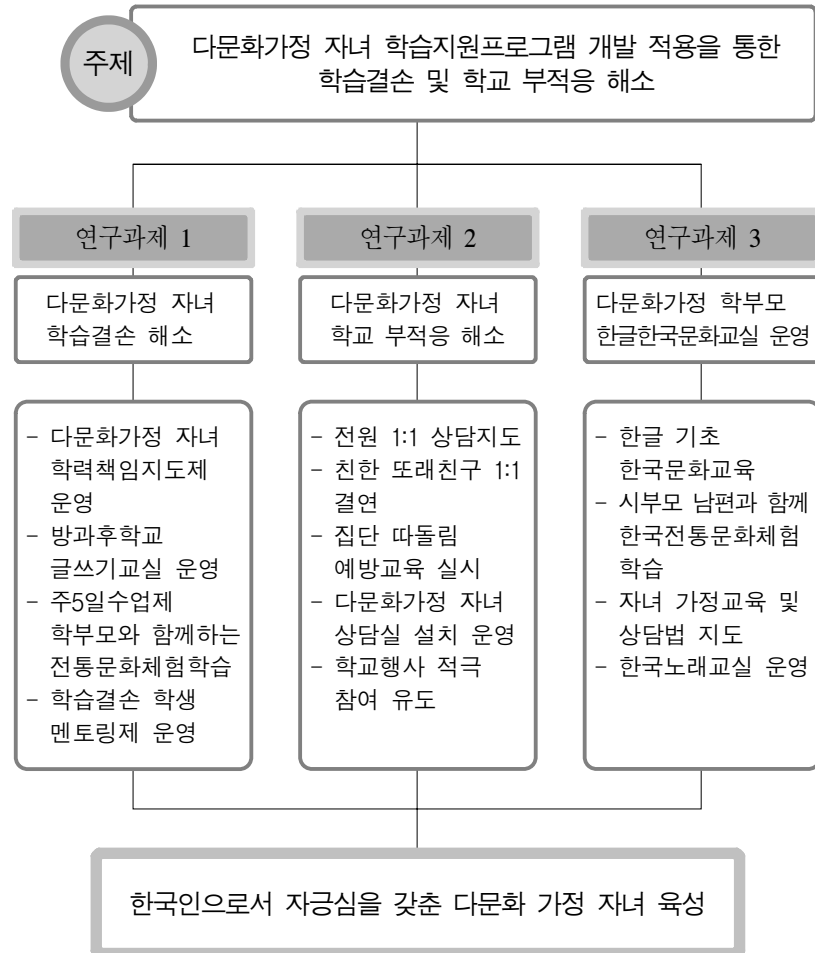
<서울M초등학교 교무부장> 그런 거는 일단 개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책사다가 하려니까 초창기에는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애네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서 조금 중급을 나누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구요. 제일 처음에는 한 국문화를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경복궁이니 남산이니...그런데 안 오더라구요. 애네들이 뭘 알겠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 애들이 너무 흥미 없어 하는 거예요.

(3) 결손의 보충을 위한 도움과 배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또는 해야만 하는 교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한편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에게 이들은 ‘못살던’ 과거 한국사회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학급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 구사가 자유롭지 않고 학습과정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알림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러한 마음은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한국 학생과는 질적으로 다른’ ‘학습 결손’ 내지 ‘학습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물론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는 학습과정 중에 특별히 부적응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개중에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이들의 존재는 예외 정도로 취급될 뿐 다문화가족 자녀 전반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과목의 성격에 따라 참여도나 선호의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인천D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수업 중에도 집중안하고 책도 다른 데를 봐요.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저 혼자 다른 데보고.... 하지 말라고 하죠. 선생님이 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거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니깐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서울M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제가 이제 받아쓰기를 이렇게 미리 3학년 때에도 받아쓰기를 봐요. 애들이 하도 맞춤법을 틀려서.... 그래서 받아쓰기 단계장을 프린트를 해서 집에서 연습을 해오게 시켜요. 학기 초에 나가고 에르덴도 물론 받았어요. 이게 7부터 이렇게 나갔는데.... 그럼 미리 공부를 하고 오면은 애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프린트가 이미 다 나갔으니깐....근데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이 엄마들이 바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이거 안해 오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빵점 맞는 애가 있어요. 에르덴 말고도.... 에르덴도 빵점 받고 개도 빵점 받고.... 빵점을 맞는데 같은 빵점도 수준이 다르다는 걸 에르덴 때문에 알았다니깐요. 빵점이 우리 나라 아이 빵점은 그래도 흉내를 내요. 애가 뭘 쓸려다가 틀렸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에르덴의 빵점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정말 급한 거는 애네들이.... 우리나라 아이들 가나다라 가르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애네들은....



<그림 III-1>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 사업’ 예시

‘학습 결손’ 내지 ‘부적응’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결손 내지 부적응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도록’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의도적으로 발표기회를 부여하거나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는 이들에게 특별한 상(스티커)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이들을 돕고 배려하도록 독려하며 이러한 관계를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들을 별도의 반으로 구성해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S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우리 반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대체적으로 학력이 떨어져요. 특히, 수학과 국어, 사회와 같은 중요과목에서 일반 학생들과 격차가 많이 납니다. 또 발표의욕이나 공부에 대한 욕심이 적어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도적으로 읽거나 발표기회를 부여하고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함으로써 자신감과 의욕을 배양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서울M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특별히 친한 아이는 없구요. 애가 잘 못하는 건 멘토-멘티를 해서 도와주는 친구... 고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짝궁 남자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늘 왜냐면 이 친구도 모르는데 모르는 친구를 옆에 앉으면 서로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저희 반에서 거의 1.2등 하는 아이를 짝궁으로 골랐어요. 그 아이가 차근차근 도와주고 트러블도 없어요. 그전에는 애가 고집이 세니까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은주가 잘 적응해 나가는 거 같아요.

이처럼 다문화가족 자녀를 둘러싼 교사들의 대응은 학습과정 중에 이들이 보이는 부적응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공식적으로 천명되거나 제도화되는 단계로 공고한 ‘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다. 이에 비해, 이러한 부적응의 주요 요인이 이주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학생이 이주 전에는 적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교사의 대응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특정 부분에서 이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으며 우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도움을 받는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문제 중 학습과정 외에 겪는 문제는 간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명시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우들로부터 흔히 놀림을 당하거나 차별적 언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가볍게 간주되거나 차별적 태도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교사 역시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M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도덕이나 사회 그런 거에 (다양한 문화나 인종에 관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요. 솔직히 교과서는 딱딱하잖아요. 그런 거는 효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일반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섞여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특히 일반 아이들한테도.... 학교에서 해보니까 인종에 대한 그런 거를 따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내일모레 당장 시험이면 그런 거는 쪽 둘러보고 넘어가지 그렇게 꼼꼼하게 그런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솔직히 교사 저조차도 약간 다르게 보고 지금도 사실 몽골 얘기 나오면 속으로 뜨끔하고 이런데...

(4) 혼란의 경험과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다문화가족 자녀를 일정한 범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려는 교사들은 우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도움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이들을 도우려는 ‘선의’의 실천이 진행되면서 교사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장벽에 부딪히고는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제공한 ‘선의’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교사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에는 자신의 배경이 주위 교우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민감한 이들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감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심지어 학교를 옮기는 경우까지 있다. 교사가 특별히 배려하지 않거나 특별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학생들과 별 다른 구분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특정한 범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학생들도 자신들과 ‘다른’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역시 자신들이 일반 학생들로부터 구분되어짐을 느끼게 되면서 의도와는 반대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M초등학교 교무부장> 애네들이 지금 4학년 여자애는 아주 자기가...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주 자존심 상해하는 애들도 있고... 6학년 여자애는 안 오는 애도 있고...우리 프로그램에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알리기 싫어하

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전체... 이런 데서 있는 그 소수 아이들을 개네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네한테 더 어떻게 보면 혼혈이라는 걸 더 드러낼 수도 있더라구요. 이름도 벌써 오면 다 개명을 하거든요. 지네들 이름을 다 개명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니까...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몽골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특별히 뭐. 그렇게 유난히 두드러지게 다르게 생긴 애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개네들만 자꾸 뽑아내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오히려 '아... 재네들은 혼혈인이구나.' 그거를 자꾸 인식시켜주고 그러니까... 고학년 여자애들은 아... 정말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상처받고... 애네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해요?' 오히려 애네들이 물어보더라구요. '다문화가 뭐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해요?'

<서울M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그 아무튼 저는 제일 좀 불만이라기보다는 안 좋게 생각하는 게요. 학교 일은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저희학교가 다문화 뭐 해서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다문화 아이를 교무부장님이나 다문화 담당 선생님한테 모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별로 생각이 없는데 현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래 살고 스스로를 친구들이랑 그런 걸 사춘기니까 꺼려하는데 그렇게 가끔씩 재원이랑 불러 가면 저 말하기 되게 껄끄럽고요. 왜냐면 애들 다 알잖아요.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현주야 재원아 그러다가 다문화 가족 캠프를 간다거나 수업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알겠지만 그게 아이가 현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 같은 거 절대 참여 안하거든요.... 물론 지원도 좋지만 보이지 않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애는 싫은데 그래도 학교에서 불러오면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교무실이건 뭐건 그때 저도 되게 좀 그래요. 왜냐면 현주랑 재원이랑 어디 가봐 그러면 애들이 딱 똥줄 알잖아요. 그건 진짜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서울M초등학교 교감> 도와주는 거 참 좋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은 애들만 이렇게 꼭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고...이 아이들이 그냥 흥허물 없이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서 '너 다문화가정아이니까 와서 이거해'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너 왜 거기 가니?' 아이들이 '너 거기 왜 가니' 이러는 거예요. 애가 뭐라 그래요.

또한 여러 학생을 대해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특정 집단에 관심을 쏟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향하는 관심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히 배려하는 것에 대해 교우들이 직, 간

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제약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경을 못쓰면’ 그 또한 해야 하는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 하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향했던 배려가 일반 학생들의 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외에 자신의 ‘선의’와 정책적 배려가 도움 일변도로 흐르다 보면 자칫 해당 학생들을 ‘받는 데만 익숙한’ 수동적 존재로 고착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서울M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재원이는 저도 좀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르쳐 주다가 이게 안되니까 이게 힘들어서요. 사실 교과 면에서는 재원이한테 미안한 게 많이 지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만 도와주면 더 할 수 있는 애들이 많고 그런 애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원이 보다는 좀 말을 알아듣는 그런 애들 좀 더 가르쳐주느라고 바빠서 수학은 거의 많이 신경을 못 써요.

<서울M초등학교 교무부장> 내내 타성이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학교는 개네들보다 어려운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만약에 또 3기 시작이 된다면 체험학습 같은 거 할 때 개네들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인데 정말 반에서 한 두 명 애들이라도 우리 애들 불쌍한 애들 한 두 명 데리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애네들은 아주 완전히 다 주는 습관이 붙어가지고 일단 체험학습 간다고 그러면 ‘뭐 주세요?’ 그래요. 학교에서 학년 체험학습 이런 거는 ‘아 나는 돈 안 들여도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공짜로... 그런 생각이 붙더라고요. 어린이날이라고 운동복도 하나씩 사 주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냥 뭐 거저죠. 거다... 우리 나라 애들도 애네보다 힘든 애들 많은데 모든 게 갑자기 이렇게 정말...

<서울M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밥 같은 것도 애(몽골출신 학생)는 식성이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급식지도 같은 거 할 때도 다 먹어라 자기가 자기 먹을 만큼 덜어라하고 시켜요. 퍼주는 게 아니라... 너가 가져가라. 자기가 조금 먹고 싶은 조금 가져가면 되는데... 자기가 가져다가 먹을 때 입에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럼 먹다가 버리기도 하고... 지도가 제대로 제가 일률적으로 못시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러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애는 어려서부터 먹은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잣대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애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애를 하나 봐주

면 다른 아이가 또 이해를 하나구요. 선생님 저도 안 먹고 싶어요. 저도 못 먹겠어요.
이렇게 되면 애는 봐주고 애는 야단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일반 교사로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대응 방식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장벽에 부딪히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식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판단하고 대응해왔던 데 대해 스스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 도와주고 배려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을 염려하고 ‘다르게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다르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는 ‘자연스럽게 대하기 힘든’ 상대, ‘무엇인가 필요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하는 피곤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일부 교사들은 도움과 배려라는 지배적인 수용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일반 학생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세우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만으로 구성된 환경 속에서 이들과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동정 어린 시각에서 일종의 ‘특별대우’를 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당당한 사회성원으로 도움 받는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학생으로 서로를 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일반 학급 교사들이 한국인 학생들 속에서 학습과정 적응에 힘겨워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관철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서울M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현주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사실 처음 저랑 사건 이후(해당 학생이 한국어 이름이 있는데도 출석부에 적힌대로 몽골어 이름을 불러 학생이 민감하게 반응한 사건)로 조금 제가 서로 눈치를 보고 현주는 제 앞에서 울고 저도 속상해서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주랑 처음에는 껄끄럽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현주랑 재원이는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아이들 대할 때 보다는 티를 안 낼려고 해도 그런 시선이나 이런게 신기하다기 보다는 다르게 봤을 꺼 같아요. ... 저도 물론 노력은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표현은 되겠지만 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봐주는 게 중요한 거 같고, 버거운 면도 있고 재원이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크고 미안해하면서도 또 현실적으로는 계속 못해주니까 따로 지도를 못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건 미안하고 소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구요. 똑같이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G학교(방과후 프로그램) 한국어교사>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측은지심으로 왔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지킬 거는 지키게 하도록 해야 한다. ‘선생님 핸드폰 빌려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끊어졌어? 그래 선생님 꺼 써.’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제가 그때 어떤 글로 쓴 적도 있는데...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네나라 대표로 온 거고 애네들은 엄마아빠 때문에 온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 사실은 애네들도 몽골에 있거나 자기네 나라에 있으면 누구보다 당당할 애들이라서 관점을 약간 바꿔서 지도를 하게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안됐고...

<G학교(방과후 프로그램) 수학교사> 처음에는 그냥 애들을 외국인, 애들을 외국인이 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에 왔어요. 근데 막상 첫날 수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애들은 애들 인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국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게, 이 학생들의 가정 처한 주변 환경이 우리나라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애네를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똑같다고 느껴지진 하지만...

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서비스 담당자의 수용 양상

이상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속에서 교우나 교사 등 한국인과 비교적 밀착된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는 ‘학교’처럼 한국인들과 본격적 관계를 맺을 만한 장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이외의 한국인들과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친밀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06).

이러한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가족을 벗어난 한국사회는 관계가 부재한 ‘빈 공간’이며, 가족 이외의 한국인 이웃이나 친척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을 공유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동화와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성별 구조에 대한 충성 등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가족의 대변인’과 같은 존재이다. 아니면 ‘못사는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에 거리를 두고 차별적 시선과 태도를 보이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이들과 관련된 정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한국인들과의 관계의 외연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그 만큼 주위의 한국인들 역시 이들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전국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와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일상생활 속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지역주민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 양상과 그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지역주민

(1) 형식적 안면관계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심도나 관계의 밀도는 매우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지역의 성격에 따라 관계의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많은 이주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안산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사업장이나 일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고객이나 피고용인으로 만나거나 전세 계약관계를 맺거나 같은 종교를 갖고 있어 서로 알게는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고 지낸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이며 개인적 차원의 친분관계

로 발전되는 양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단지 안산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 간에 면대면 관계가 발달하지 않는 도시 지역의 일반적 특징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지역주민들 간에 비교적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농촌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영암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그냥 알고 지내는 수준에 있는 경우에서부터 서로 농사일이 나 김장을 돕는 정도까지 그 접촉과 친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단지 개개인간의 관계라기보다는 가족 차원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망에 여성들이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 간에 관계가 비교적 긴밀한 농촌지역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는 물리적 도움을 주고받는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향이 현저하다. 이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일상적 관심을 공유하는 한국인 여성들 간의 관계망으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지만(김이선 외 2006: 143-152), 지역주민들은 그 이유를 단지 도구적 차원의 언어소통 문제로 돌릴 뿐이다. 이러한 점은 초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동시에 언어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여성결혼이민자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언어소통 이외의 다양한 어려움을 예측하거나 경험할 만큼 심도 있는 관심을 갖거나 관계의 진전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역량에 대한 제한적 기대

개인적 차원에서는 형식적 안면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만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전반적 기대와 관심, 이해 등은 특정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안면관계조차 없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당수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모임이나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성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에 대해 다소 구체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그 활동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반상회, 부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주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이 거의 없는 농촌의 특성상 미래에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마을 부녀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미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도시지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지 언어를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전망으로 지역사회를 속속들이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으로서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활동 역량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 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자리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가족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회 주체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는 지역사회를 벗어난 부분에서도 드러나는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투표권을 위시한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상당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이유로 정치적 권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이주자에 대한 권리부여에 있어 노동법적

권리나 가족 동반권, 인권 보호 등의 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데 비해 시민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인정하는데 유독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2>.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에 대해 일정한 권리는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지만, 한국사회의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사회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가내 역할에 대한 절대적 가치 부여

이처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 역량과 기여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소극적인 전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존재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지역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다소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특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 여성의 존재를 매우 긴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재생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종의 구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에게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아’ ‘남편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진다.

<영암주민 1> 어찌되었든 간에 그 남자를 안정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면서 43살 되어도 장가도 못하고 맨날 도박이나 하고 진짜 힘들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국 여자들은 안 올 것 이고, 나이가 43이니. 누가 43 먹은 사람한테 시집오겠습니까...

<영암주민 12> 혼자 살, 남자가 혼자 갈, 남자가 장가를 못갔잖아요. 못하겠다고, 한국에서 못 가겠다고 외국에 가서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둘이 방방하니 살면은 자식도 낳

고, 그라고 산다고 하면 백번 좋제. 혼자 산다고 하면, 남자 혼자 산다고 하면 좋겠소?
옆에서 보니까 잘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여성결혼이민자를 한국인 남성의 가족 구성을 위해 ‘데려온’ 존재로 보는 시각이 현저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해당 여성에 대한 평가는 한국인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빠 빼어 닮은 아들 낳고’, ‘한국여자보다 더 음식 솜씨 좋고’ 집안 살림에 충실하고 시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긍정적인 평가가 돌아간다. 이에 반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여성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기 쉬우며, 심지어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족을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까지 발견된다.

<안산주민 5>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는, 한 교포분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참 신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 대화가 참 좋더라고요. (안산, 지역주민 5)

<영암주민 2> 그거를 전혀 그 사람이 아주 생소할 텐데, 남자 하는 농사일에 남편이랑 같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이 샘이 날 정도로 금슬이 좋아요. 딱 같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내가 본다구요. 거시기하다고 놀리고 그래요.

<영암주민 12> 여그는 우리 나도 여기 한국 며느리가 있어. 우리 며느리보다 더 영리하고 더 잘혀. 잘해서 좋고..낯낯하고...아랫마을 여자도 그라고 낯낯하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즈그 가정이 좋아. ... 취업하는 사람치고는 오래 못 살더만. 바람이 나더만. 내가 친척 하나가 사돈에 하나가 있는데...(중략)...여자가 돈을 번다고 하던데 애기가 있을 터가 되었는데 애기가 없으니까 뒤져봤대. 보니까 피임약을 연변의 즈그 언니가 대어줬다고 하더라...(중략)...결국은 돈 벌어가지고 가버렸대. 가부렀어. 결국엔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와갖고.

결국 여성결혼이민자를 향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평가의 잣대는 가부장적인 성별 구조 속에서 규정된 여성의 역할상에 기초해 있으며 이는 여성결

혼이민자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김이선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족을 구성하는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가내 역할에 충실하고 시택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반면 가족을 벗어난 사회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관계는 부정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단지 가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남편을 위시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위치를 설정하는 경향은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권리 부여 등에 대해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나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나 이혼 등으로 그 관계를 깬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암주민 3> (이혼한 경우)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없어. 나가버렸는데, 버려야지. 자식을 본다면 조금 도와줘야 할 것 같긴 한데. 만약 자식이 없다면 도와줄 필요 없어.

(4) 동화에 대한 강한 기대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와 가내 역할에 대한 충실성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한국사람처럼’ 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에 대한 것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위시한 한국문화 수행 능력 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그 노력을 통해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여성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나아가 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한국사람처럼’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영암주민 8> 한국말을 빨리 좀 배우고, 기왕 여기 왔으니깐 한국문화를 빨리 배우는 것이 자기들 발전하는데 도움이 좋을 것 같아요.

<영암주민 10> 잘 왔다, 잘 했다고 말해주지, 앞으로 어짜든지. 착실히 만나고, 남편과 부모 형제 만나, 서로 웃고 잘살라고. 그리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나갈 생각하지 말고 한국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될 수 있으면.

<영암주민 7>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주인이잖아. 일단 아무리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자기네 나라 자기네 편한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편하게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오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할 것 이지... (한국어는) 완전히 기본적인 거 “고맙습니다.”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 이게 얼마예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밖에 없더라고...일단은 교육을 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우리 나라에 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밥 먹을 때는 꼭 수저 젓가락이 있고 국이 있고 그 반찬은 항상 여러 가지 놓고 먹는다.

다른 한편, 여성의 출신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 대상 의식조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태도가 일반인들 사이에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표 2>. 그런데, 이러한 결과만으로 지역주민 나아가 일반인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문화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족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신문화에 대해 다소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주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의 가족들의 이해란 일상적 가족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언어소통에 한정되어 있으며 문화의 다각적이고 심층적 차원의 이해에 대해서는 인식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이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전제하거나 여성이 출신문화를 유지하는데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출신문화를 주장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힘들고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한국을 이해시키고 출신문화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현저하다.

<영암주민 3> 그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왔으면 여기의 풍속을 따라야지, 아가씨들이 시집을 가서 그 집의 풍속을 따르듯이, 여기 신라의 문화를 따르고 여기에 맞게 고치며 살아야 합니다.

<영암주민 12> 그러는 우리가 깡깡할거 같아, 항상. 한국에 와서 이삼년이 넘으면 한국사람하고 같이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그래야 같이 적응이 되고 그래제, 그 사람이 즈그 나라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그 사람하고 더 멀어질 것 아니오

<영암주민 2> 결혼해서 오면 결혼해서 살라고 내비 두는 게 아니고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저 사람들을 말부터 행동부터 우리나라 사람 생활까지 이렇게 몇 개월 아니면 일 년을 잠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현재 내가 살아왔던 거 하고 여기하고는 틀리구나. 이런 건 고쳐야 쓰겠구나. 이래야 맞구나.’ 하고 살 텐데, 지금 자세한 거는 몰라도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음식 같은 해 먹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 사람들 무조건 깨지는 거죠.

(5)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선입견과 외국인에 대한 위협의식

주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갈등경험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그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주민들 가운데 이들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경험한 주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갈등을 겪을 만큼 관계가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아파트 사람들, 교회 사람들, 시장 상인 등 가볍게 대면하는 한국인들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말투 등에서 자신을 향한 차별과 무시, 불신을 발견하고는 적지 않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김이선 외 2006: 135-142)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러한 대조는 서로 대면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위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을 향한 차별적 언행에 민감한데 비해 주류 집단의 일원인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적고 차별적 함의에도 민감하지 않은 경향이 뚜렷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향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태도는 직접적 갈등 보다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의구심이나 두려움 등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그 주요 대상이 되는데 비해, 지역에 엄연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언급이나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로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개도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입견은 결혼을 경제적 수단으로 삼은 ‘순수하지 못한’ 존재라는 점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 경험이나 소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혼혈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영암주민 12> 중국같은 경우는 평이 나빠 갖고 결혼해갖고 남자도 있고 그런 사람이 돈 벌려고 나온 사람이 있다.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다. 당에 다른 결혼해갖고...

<안산주민 9> 그런데 소문을 듣자면 소문을 듣잖아요. 이러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인제 없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에는 참 잘하고 사는데 자꾸 이제 뒷주머니를 차고 어느 정도 되가지고는 달란다고 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안산주민 4> 이주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한국남자들이 뭐랄까.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서 되는데 순수한 목적이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파약을 제대로 해야 돼... 순수하게 서로 사귀어서 결혼해 사는 거는 이해를 해, 결혼을 수단으로 해서 한국을 들어올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야. 그러면 뭐 다문화? 다문화를 왜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이 개방되면서 스스로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되는 거지 다문화를 꼭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 민족도 중요한 거는 지켜야지, 우리 민족도, 전통을 빨리 다문화 해서 혈자는

거야, 뭐야? 우리 순수한 백의민족도 혈통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만 섞어놓을 게 뭐가 있어. 불화만 생기는데?

그런데, 이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국인과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이주자’ 가운데 예외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면에 경도되어 있다. 흔히 중국이나 동남아,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사회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로 한국사회와 별 관련이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언어와 사고방식이 원천적으로 달라 ‘같이 하기 힘든’ 사람, 심지어 한국사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존재 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난한데 남의 나라에 와서 돈만 벌어가지고 간다’는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한다. 외국인으로 인한 냄새와 소음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가장 뚜렷이 그리고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적 반응은 외국인 이주자로 인한 일자리 경쟁의 심화와 임금 하락의 우려, 그리고 특히 범죄 등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의식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안산주민 7> 글썄요. 좀 그래요. 좀 두려운 것도 있어요.... 저 안산역 가봐요. 예전에 그렇게 중국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가시면요 막 스리랑카, 막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 중국 다 이렇게 뭉쳤는데 이렇게 밤에 차 지나가도 안 비켜줘요.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네 차 알아서 가라. 그 정도로..안산역 그 쪽은 밤에는 무서워요. 외국인들 때문에..완전히.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산주민 4>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화합도 안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한국이 발전되다 보니까 동남아가 몰려 들어왔는데 서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서로 접촉이 되도록 순수한 목적에서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인위적으로 막 사들여오다 보니까 문제가. 국가가 아까같이 규제를 해야돼... 한국에 공부하러 오든지..뭐..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좋다, 이래가지고 살아가지. 돈만 목적으로 이런 거는 목적 불손하고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필리핀 여성 같은 사람들은 좀 교육을 받았어. 그 사람들은 한국애를

존경을 해.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무시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문제야.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한다니까...한국말 하나도 못 하는 애들이 와서 지네들이 와서 중국말을 배워서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한국 사람이 원래 역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안의 불안을 느낀다니까. 저번에 사건 많이 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사건 일으켜. 살인사건 났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죽여? 이런 나쁜 놈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니까.

이와 관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이주민이 경제적 기회를 빼앗거나 안전상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식의 집합적 위협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주민을 일시적 체류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이주민들로 인한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태도에서도 이러한 일반적 의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국인 전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심화되는 경향까지 발견할 수 있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 엇갈리는 태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가족간의 친밀관계 형성, 한국어 소통, 경제적 어려움, 예의범절이나 음식의 차이, 자녀 교육 등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근거를 보면 한국사회로의 동화 촉진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분명한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도 발견되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암주민 2>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들어온 여자한테는 뭐, 일 년에 몇 백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한국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가르치면 자꾸 공부 되듯이 전수가 왜 안 되요? 되지. ...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쌀을 안 먹어서 쌀이 남아 돌아서 전부 우리 이런 지경에 있잖아요. 꼭 돈을 받고 판다기 보다는 다소 또 이렇게 없는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발견되는 것으로, 그 주된 이유는 ‘역차별’에 대한 경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사회의 소외계층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제한된 정책 자원을 두고 경쟁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결과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 의제 가운데 유독 적극적 조치에 대해 명백히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II-2>. 시민들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유독 특정한 집단에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민감하며, 이러한 태도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안산주민 4> 내가 한국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절대로 여기는 외국인들만 위해서 외국인 지원 센터 복지관, 이런거 만들어 주는데..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없어요. ... 외국인 여성을 막말로 더 특별 지원해준다거나. 맨날 특별 특별 하는거 그게 더 불평등이야. ... 특별히 뭐 지원해도 별 소용 없다니까. 그리고 또 지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야.

<영암주민 1> 우리 나라에 외국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저는 어느 정도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 잘 못 도와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판자집 촌동네에 사시는 물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안산주민 10> 얼마 전에 어떤 양반이 오셔가지고...그 할머니가 오셔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교포들 불러들여가지고 세금은 다 주고 우리나라 사람 안쳐다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왜? 그 사람네들은 몇 십 년 살다 왔고

잠시지만, 이제 옮겼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못사는 사람 훨씬 많아요. 우리 주위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 먼저 돕고 나서 그분들을 돕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2) 서비스 담당자

(1) 공적 관계를 통한 선입견의 확인

일상생활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면하면서 직, 간접적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주민들에 비해, 일선 기관에서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자체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부터로 그 기간은 대부분 3년 이내²⁹⁾이다. 주로 공적인 역할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정책 실무자나 서비스 담당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와 개인적 차원의 친교를 발전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면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끝나게 되면 관련되었던 여성결혼이민자들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해 도시지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잦은 이동 역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보는 정책·서비스 실무자들의 시각은 여성결혼이민자 특정 개인과의 관계 보다는 자신의 업무를 통한 여성결혼이민자 일반과의 공적 대면을 통해 주로 구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공적 대면 속에서 발견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특정한 행동 경향이 여성결혼이민자 일반에 대한 시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이 업무를 통해 대면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필리핀, 태국,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출신 등으로 이 가운데 ‘일본 출신 여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일반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국가,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는 다른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

2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과 일치한다.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특징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육시간이나 약속시간을 지키는데 있어 ‘시간 개념 없고’ ‘느리고’ ‘악착같이 배우려는 열정이 없고’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등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과거 한국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전근대적’ 요소로 규정하기도 한다.

<영암 담당자 6> 시간 개념도 없고 약속하면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고 시간 지키는 거 이런 게 좀 느려요. 원래 그런 가 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봐.

<영암 담당자 9> 다만 시간 개념같은 것들은 확실히 있더라구요. 우리 일전의 코리안 타임,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런 말이. 이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직 정해지질 않는 것 같더라구요.

<영암 담당자 8> 적극적인게 없어요. 조금 힘들면 금방 뭐하다가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악착같고 적극적이잖아요. 요리 같은 것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안 가르쳐 준다 해서 걱정이지.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몇 가지씩 배우러 다니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자신의 업무에 제한해 여성결혼이민자와 대면하는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담당자들의 기대나 평가, 우려 등은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지배적 인식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지역사회 재생산 문제의 틀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남편이나 시댁식구와의 관계, 자녀 출산, 가내 역할 등을 토대로 이들의 역할을 규정, 평가한다는 점에서 지배적 인식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안산 담당자 4> 기여가 크죠. 한국 가족이 유지되게 하니께. 제가 어렸을 때 사촌 형님이 장개를 보내달라고 땡깡을 부렸었어요. 참. 본인이 연애를 못 거니까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그렇게 장개를 가려고. 그 분들이 없으면, 농촌총각이나 장애인, 자기 스스로 결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영암 담당자 2> 먼저 농촌 총각과 결혼 못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필리핀은 다산국가잖아요. 보통 보면은 세 명, 네 명 이렇게 낳거든요. 인구 증가..아주 큰 효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영암 담당자 10> 아까 그 분 베트남 그 분을 말했을 때에는 언어도 잘하고 남편과 사이가 좋고 시댁과도 원만하고 애들도, 애들 말하는 부분을 다 캐치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엄마. 그러니까 그런 엄마.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적응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에 비해 정책·서비스 담당자들 사이에서 동화 지향적 태도가 극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 미래지향적 사회 질서를 찾아가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정책·서비스담당자들은 타문화에 대한 완벽한 적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동화 지향적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한국인들 사이에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 담당자 5>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생활하다보면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시집 부모들도 계실 것이고 남편이 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같이 도우미역할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적응을 하실 것 같아요.

또한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일부 담당자들은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서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고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한다.

<안산 담당자 8>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잘 살아주면 괜찮은데,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니깐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질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깐. 많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

들이 잘 정착해서 살면 괜찮은데, 들어와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거 같아요. 얼마 안 있다가 파탄이 돼서 헤어진다던지 이러니깐, 우리나라 남자도 문제고. 남자들이 구타를 한다던지 이런 예도 많이 들었고. 너무 그런 게 혼란스러워 질 거 같아요. 평범하게 살지를 않고.

<영암 담당자 8> 교육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봐요... 한국인데 한국인인데...다 농촌을 회피하고 뭔가 내가 똑같이 돈을 벌면서 저런 여자랑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남자들은 왜 이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가. 한국인이 만들어 낸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 문제가 아니냐.

(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벗어나 특정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데 비해, 일부 담당자들은 업무를 통해 안면을 튼 여성결혼이민자와 개인적 관계를 쌓으면서 나누면서 서로 이해를 더해가는 경우도 일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업무를 하면서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가오는 것은 이 여성들이 가족관계나 자녀 양육 등에서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다.

<영암 담당자 3> 이제 가족간의 관계,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들을 많이 접하면서 가족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은 느꼈어요. 우리는 이런 가부장적 약간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남편이 가정 일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남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일단 여성들과 상담을 해 봤었을 때 결혼을 속았더라는 고학력이고 경제력도 좋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장애가 있고 정말 학력도 낮고 오도가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결혼 하고 난 후에 그 남편이 바람을 피는 그런 사례.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여성들도 겪는 그런 부분이지만 외국이 여성이 열악한 상황에 와서 그런 부분을 겪을 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속내 사정들 참 안타깝고.

<안산 담당자 8>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그런 거는 있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생각 있잖아요. 시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쪽으로 가면 더 심하다 해요.

무시하고, 없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봐도 하얀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들을 대할 때는 무조건 백인들만 보면 다 어떻게든 말 좀 붙여볼까 하는데. 동양,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다 잘 산다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것도 많은 거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나눔으로써 담당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상과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문제가 단지 언어 소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충격(cultural shock)을 경험하고 남편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편견이나 차별,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의 가능성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성별 역할구조의 한계와 같이 심층적인 요인도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담당자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은 일반시민들보다 한 차원 나아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하는 가족이나 일반 한국인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자성적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가족의 틀을 벗어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 지원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일반주민들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나아가 일부 담당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에 기초한 기존의 지배적 접근이 지니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일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징을 여성결혼이민자 일반이 공유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단지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언어소통의 한계로 돌리는 지배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기도 한다.

<영암 담당자 12> 저희도 그러니까 예전에 자원봉사할 때는 무조건 이 사람들을 한국말을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 했어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여성들을 봤을 때 제

일 문제가 한글이고 한글이 안돼서 가정의 불화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른 자녀의 언어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여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자주 접해가다 보니까 이 여성들하고 저랑은 의사소통이 완벽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다 웅알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죠. 가족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웃 분들도 많이 좀 바뀌고 우리 한국아 이들도 많이 좀 바뀌고...정말 이제 어떻게 되든 제가 이주여성이 된 듯 한 느낌이에요,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담당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자각하고 자신을 포함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수용하는 한국사회의 전반적 태도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안산 담당자 10> 제 스스로도 많이 달라지죠. 보는 시각도 그렇고, 직접 다가가서 함께 하면서 하는 느낌도 많이 달라졌고.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런 관계도 있구나 했었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상한 거다 생각을 했어요. 나이차가 30살 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가정은 딸 같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할려고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우리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고 살고 하니깐, 선입견을 갖고 봐서는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결혼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테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황을 인정하고 오셨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니깐. ...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도 그렇고, 옛날 가부장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생각 못 받아들이잖아요. 워낙에 개성도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청소년들은 다 자기 주장하고 사는 아이들인데. 옛날 가부장적인 생각 가지고 무턱대고 가장이라 해서 남성 주도적으로 가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암 담당자 7> 저는 처음에 이런 생활했을 때네요...잘 할 거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가니깐, 여기서 한글 교육하고 그런 것처럼 그 쪽 일에서도 너무 가르쳐주면 너무 잘해요.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니깐 좀 다르다 뿐이지,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르쳐주거나 배우면 충분히 저희보다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깐 좀 놀랐어요. 한국말 같은 것도 잘하시고.

3. 소결

이상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하는 교사와 교우들의 태도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생활사건을 통해 또는 공적 업무를 통해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면하는 지역주민이나 정책·서비스 실무자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은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이고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해서 라기 보다는 이주민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되며 이것으로 한국사회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적합한 지향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측면에서 보다 우려되는 점은 다문화가족 자녀나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에서 흔히 차별적 언행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언행의 주체인 주위의 교사나 교우, 지역주민 대다수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언행은 대부분 별 다른 의도 없는 행동이나 ‘친해지는 과정’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이들 대부분에게 가족 이외에 한국사회와의 친밀관계는 공백에 가깝다는 점이다. 관계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위의 한국인들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초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언어소통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언어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언어소통 이외의 다양한 어려움을 예측하거나 경험할 만큼 심도 있는 관심을 갖거나 개인적 관계의 진전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와 개인적 차원의 친밀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

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교우나 교사, 지역주민이나 서비스 담당자들의 관심은 다문화가족 자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성, 개별성 보다는 집단으로서 이들이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공통적 특징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탈 개체화된(depersionalized) 특징은 흔히 부정적 함의를 띠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가운데에는 이들이 보여주는 학습성취 상의 부적응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적 특징으로 인정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과정 상에 문제가 있는,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가족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있는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다양한 국가 출신 가운데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 출신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 경향이 두드러져서 자칫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민족적 편견으로 비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나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부정적 함의를 띤 일반화로 인해 ‘집단적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러한 경향은 팽배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지배적 태도는 한국사회의 틀에 대한 동화를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출신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가족들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 정도로 한계를 지우며 자신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태도가 역력하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한국인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습 성취가 요구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가족 재생산을 해결하는 존재로서 가치가 부여되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심지어 여성의 적절한 위치를 가내 역할에 한정지우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성별분리 구조에 대한 동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해당자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백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발견되는 이주민을 향한 명백히 부정적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사회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태도에서 부정적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흔히 경제상황이나 생활안전 측면에서 위협적 존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위협의식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 태도의 또 다른 단면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이 이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러한 태도는 학교생활 중에서도 나타나며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명백한 부정적인 태도 이외에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적합한 시민의식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발견된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면한 문제의 요인에 대해서는 흔히 그들의 능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비판적 자성의식,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식의 핵심적 기초는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쌍한 존재’로 규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실천’이라는 인식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교사나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 차원의 ‘선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체로서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니는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이들을 일방적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선입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주체로서 보다는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특히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학교생활에서는 바로 교사가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

러한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적지 않은 교사들이 ‘다문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제를 파악하여 접근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 역시 일반주민과 그리 다르지 않은 수준의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재구성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이주자 집단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육적, 정책적 실천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교사나 서비스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동정 일변도의 접근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형성되고 있어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상당부분 발견된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경우 이들을 향한 부정적 태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시민권이나 사회 참여에 대한 이주자들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일견 관용적으로 보이는 한국사회의 수용성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 역시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관용적 태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상당부분 존재하는데, 그 열쇠는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 간에 친밀관계가 발달하면서 이주민을 단순히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 주체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자성적 인식이 확산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삶 속에서 이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IV

다민족 ·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시민적 통합의 중요성: 호주와 일본 사례

1. 호주	131
2. 일본	141
3. 해외 사례의 함의	152

경제적 기회와 가족 형성, 교육, 정치적 요인, 안전 등의 이유로 국경을 넘는 이동이 범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각국에서는 인구 구성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인구 유입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근 들어 이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주민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국의 경제나 정치적 상황과 함께 이주민과 일반시민들 간의 관계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도 핵심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다.

초국가적 이주와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이나 이주의 역사와 맥락, 이주자 집단의 규모와 존재 양태, 이주민 집단의 사회통합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전개 양상, 정치 환경, 행정구조 등에 따라 특수성을 띠고 있어 국가별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국사회보다 앞서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주의 증가가 가져온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사회적, 정책적 의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증가와 관련된 의제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탈 맥락화된 단편적 정책대안을 찾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이 전개되어온 과정과 정책적 접근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정책의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주와 관련해 여러모로 비교되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민을 사회에 수용, 통합하는데 있어 세계 각국이 견지하는 접근은 크게 차별적 포섭/배제모델과 동화모델, 다문화주의 모델로 나누어볼 수 있다 (Castles and Miller 1998: 171-201). 이 가운데 차별적 포섭/배제 모델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특정한 이주민 집단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같은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각종 권한을 부인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하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대부분의 이주민은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손님’으로 여겨질 뿐 정책의 대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민자들은 자

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 내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므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동화주의 사회에서는 이민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도 개방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서의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민자들은 바로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동화주의 국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이민자에게는 출신문화의 정체성에서 탈피해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을 통해 결국 다수집단의 일원이 되어갈 것이 요구되며 국가의 정책은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전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그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이처럼 동화주의 모델이나 차별적 포섭/배제 모델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데 반해, 다문화주의 모델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민족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이민자들에게 굳이 출신문화를 탈피해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출신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상호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마르티니엘로 2003: 72-93).

이 가운데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과 함께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알려져 있는 호주는 실질적인 이민국가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영국계 중심의 ‘동화’ 지향적인 정책을 유지해하다가 1970년대 들어 민족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국가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국가, 다민족국가(Smolicz 2001)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고 있는 반-이주민, 반-다문화주의정책 움직임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의 사례는 지금까지 흔히 ‘이상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던 다문화주의 모델의 한계를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비교해 일본은 비교적 최근까지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신화가 유지되어 왔으며 외국인 이주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여전히 전체 인구 중 이주자의 비중은 높지 않으며 최근 들어서야 이들과 관련된 정책 대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세계적 국가분류체계상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차별적 배제/포섭모델에 기반한 국가로 특징 지워지는 사례로서 한국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조망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한 참고의 틀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호주

1) 인종적 위계사회에서 이민국가로의 전환

호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민자 사회이자 ‘이민의 나라’로서 다문화주의라는 독특한 업적을 성취한 국가로 대변되기도 한다.³⁰⁾ 그런데, 이러한 성취는 1970년대 이후부터의 움직임에 기반한 것으로 그 이전 호주사회는 가장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이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강력하게 지속되었던 사회였다는 점에서 극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1788년 호주 원주민 사회에 백인들이 최초로 이주하기 시작한 이래로 백인들은 원주민들을 에보리진을 동등한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잔혹한 학살과 격리, 배제, 동화 정책을 통해 원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식민지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190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할 때부터 호주는 중국인들에 대한 이른 바 ‘황색 공포’를 드러내며 이민 제한법³¹⁾을

30) 1981년에 호주 수상 프레이저(Fraser)는 “다문화주의를 호주의 독특한 업적”(multiculturalism as Australia's unique achievement)으로 찬미하였다(Galligan and Roberts 2003).

31) 1901년 호주 연방정부의 이민 제한법(Immigration Restrict Act)에서는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구술시험이나 제조업 취업금지 조항

통해 백호주의(White Australia)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1972년 노동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폐기하기까지 호주 이민정책의 근간으로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동시에, 백인들은 에보리진들에 대한 강압적인 동화주의를 실시하였고 앵글로 색슨계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하였다³²⁾. 식민지 기간 중 호주에서는 다른 영국 식민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종의 위계’가 형성되었다. 백인을 정점으로 흑인과 황인종, 그리고 최하층에 호주 원주민들을 위치시키는 인종주의에 의해 식민 정책 뿐 아니라 원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격리와 차별, 동화 정책도 합리화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위계질서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호주에는 비교적 동질적인 영국인들로 구성된 사회라고 하는 ‘동질성의 신화’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동화(assimilation)가 정부의 공식적인 이민 정책을 대표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지배 관념은 1891년에 호주 최초의 노동당이 창립되면서 주로 유색인종의 이민자들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다소 완화되었으나 인종차별 정책을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다행히 호주의 인종차별주의는 원주민들을 제외하면 미국에서와 같이 폭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과 백인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호주의 백호주의는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양차 대전 중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뿐 아니라 보다 결정적인 것은 1942년 일본의 호주 침공을 영국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양차 대전으로 인해 호주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인구증가 아니면 멸망’³³⁾이라는 절박한 이민 정책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등을 통해 특정 인종의 이민이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이용승 2003).

32) 호주는 미국과 함께 아일랜드계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주민들이 주로 정착하였다.

영국계 이민자들에 대한 여비보조 프로그램(assisted passage program)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가 줄어들자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후 폐허가 된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유입되었다. 서유럽 뿐 아니라 점차 남부 유럽과 동유럽계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앵글로 색슨계의 동질적인 백인사회라는 신화는 깨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급증하기 시작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국과 유럽인들의 이주가 줄어들면서 호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본격화되었다. 백호주의 이후 호주가 비유럽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49년 비유럽인 난민을 받아들이면서부터였으며, 비유럽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1957년에 이르러서야 그 문호가 열렸다. 이어 1958년에는 이민제한법을 개정하여 구술시험을 폐지하였으며 1966년부터는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시민권 부여기간도 정주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호주 이민정책의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었고 비유럽 이민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되어 영국인을 선호했던 차별적 이민정책은 결국 폐기되었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인종과 피부색, 신념과 종교의 차이를 무시한 대규모 이민정책이 시작되었다.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 43%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 한명은 해외에서 출생한 자인 ‘이민국가’ 호주의 모습은 이러한 전환의 산물인 것이다.

2) 다문화주의 정책의 전개

‘이민국가’ 호주의 모습은 다면적이며 어떤 부분에서는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국가로 꼽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저변에 여전히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호주의 역사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33) ‘인구증가 아니면 멸망(populate or perish)’이라는 슬로건은 1937년 빌리 휴(Billy Hughes)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민부 장관인 아서 웰(Athur Calwell)이 다시 사용하였다.

백호주의는 호주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구체화된 동화주의로서 영국계 개신교도들의 지배와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배제 또는 백인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호주의의 근간은 다른 유색인종들을 이민정책에서 차별적으로 배제할 뿐 아니라 원주민들과 이미 정착한 아시아계 이주자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그들의 인구가 위협이 될 만큼 증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1937년까지는 강력한 동화주의와 백호주의가 작동하였는데 당시에 유색인종과 비유럽인은 근본적으로 호주사회에 동화될 수 없었으며, 1960년대까지도 영어와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민자의 호주 입국이 허용되었다. 이민자들은 심지어 색다른 옷차림이나 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으며 백인 호주인들의 사진만이 ‘좋은 이웃’ 운동에 사용될 정도로 백인중심적 질서가 공고했다. 그러나 차별적인 이민정책과 이주자들을 백인사회에 동화시키려는 계획적 시도는 호주의 적극적인 인구증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민자 집단과 백인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영국과 다른 유럽인 이주자들은 호수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점차 증가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과의 사회 문화적 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1972년에 휘틀람(Whitlam) 노동당 정부에 의해 백호주의는 공식 폐기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이 단시간 내에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휘틀람 정부의 앨 그래스비(Al Grassby) 이민부 장관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신념이 가장 강했지만 1974년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인종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1974년에 휘틀람은 이민부를 폐지하였으며, 이민부 업무는 사회 안전부, 교육부, 노동부 등으로 분산되었다.

결국 1978년 갈벌리 보고서(The Galbally Report)를 토대로 공식적으로 ‘하나의 다문화 호주 사회’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프레이저 연립정부는 이민민족부(Dept. of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를 다시 설립하였으며, 호주 내에 정착한 다민족 집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다문화주의를 구체화시킨 제도를 구축하였다. 이후 10년 동안 이주민 정착을 지원은 정부의 주된 관심사로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복지, 교육, 다문화 정책이 입안되었다. 이어 1988년부터 1996년까지는 호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본 유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다문화주의가 다소 퇴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근간은 유지되었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계획, 추진하는 기능은 호주 연방 정부의 이민·시민권부(Dep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에게 있으며 관련 부처간 조정을 위해 이민-다문화에 관한 장관급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호주 민족문제위원회(Australian Ethnic Affairs Council, AEAC)와 호주 인구 이민위원회(Australian Population and Immigration Council, APIC), 국가인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Council, NPC), 정착자문위원회(Settlement Advisory Council, SAC)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및 자문활동을 통해 국가의제로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며, 정책제안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비법령기구인 호주 다문화위원회(Council for Multicultural Australia), 이슬람 공동체 자문그룹(Muslim Community Reference Group) 등이 이민부서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체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를 설치하고 다문화주의 원칙에 관한 법률과 민족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일례로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서는 ‘공동체관계위원회 및 다문화주의 원칙 법률 2000(NSW)(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and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ct 2000(NSW))³⁴⁾을 제정해 뉴사우스웨일즈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해 NSW 주정부는 주민의 평등한 권한 및 책임을 도모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다문화적 NSW

34) 이 법률의 핵심은 NSW의 모든 주민들이 공공의 삶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모든 개인 및 기관이 상대방의 문화, 언어 및 종교에 대해 존중하고 준비하며, 모든 개인이 NSW 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누리고, NSW의 모든 기관이 NSW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자산이 귀중한 자산임을 인지도고, NSW 의회가 이러한 원칙이 시민권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있다.

를 위한 공동체관계위원회(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for a Multicultural NSW: CRC)를 설치해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고 강화하며, 문화적 다양성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최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공식적 기구를 통해 추진되는 호주 다문화주의는 공식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에 기반해 있다. 첫째, 모든 호주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 다양성이 꽃필 수 있는 호주 사회의 기본구조와 원칙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 둘째, 모든 호주는 자신의 문화와 믿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할 호혜적 의무가 있다. 셋째, 모든 국민은 인종, 문화, 종교, 언어, 거주지역, 성, 출생지 등에 기초한 차별 없이 평등한 처우와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넷째, 모든 호주는 인구의 다양성에서 유래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 즉 생산적 다양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6).

<표 IV-1> 호주 다문화주의의 원칙과 전략

다문화적 호주: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4대 원칙	· 시민적 책무성	· 문화적 존중	· 사회적 형평성	· 혜택의 공유
전략방향	➢공동체의 화합	➢접근과 형평성	➢생산적 다양성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03)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호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공동체적 화합(Community Harmony)으로 호주인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 민족성과 종교의 차이 속에서 공동체적 화합과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21일을 ‘화합의 날(Harmony Day)’로 지정(1999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해 ‘화합을 이루는 삶(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지역차원의 민족차

별금지 및 다양한 민족 집단간 교류 증진을 목표로 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한 집단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출신 민족집단에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포함한 사회 각 영역에 공평한 접근권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핵심전략에 통합되어 있다. 또한 생산적인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을 전략으로 채택하여 호주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능력의 자산을 호주 경제의 경쟁력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성을 기초로 한 혁신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Productive Diversity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7-9).

3) ‘위로부터 아래로’ 정책의 한계와 시민적 통합의 필요성

다문화주의로의 공식적 전환 이후 호주에서는 이민, 노동, 교육, 언어, 언론, 시민권, 차별금지, 보건의료, 복지정책 등 광범위한 공공정책에 이민자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이자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민자들이 호주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언어를 비롯한 기초능력을 배양할 기회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이민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민자를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주요 자원으로 인식, 활용하는 데에서 다문화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로서 호주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전개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 호주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결코 완성된 견고한 결론은 아니다. 사실, 다문화주의는 출발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었다. 1984년 다문화주의가 창조적 공존이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호주문화를 손상시킨다는 역사학자 블레이니(Geoffrey Blainey)의 지적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비

판을 대변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는 보수주의자와 우파 인종주의자들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다. 이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예산을 ‘낭비적인 도박’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다문화주의는 호주사회를 심각한 갈등과 위기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때로는 아시아화와 이슬람의 위협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동은 세계화 및 호주 경제의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취약한 경제 부문인 제조업과 농업, 비숙련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주의가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집단에게는 좋은 것이었지만 전체 호주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향한 공격은 공식 정치의 장에도 등장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1998년 ‘아시아인은 아시아로!’ ‘아시아인 때문에 호주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백호주의의 부활과 인종적 적대감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단일민족당(One Nation Party)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1986년 호크(Hawke) 정부가 다문화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호주 다문화연구소(AIMA, Australian Institute of Multicultural Affairs) 등의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또한 1996년 이후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따른 이주민 선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다소 축소되면서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소수 이주민 집단 의제가 주변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Jupp 2002).

심지어 2007년 1월에는 다문화주의를 폐기한 것으로까지 평가되는 제도적 변화가 단행되기도 했다. 그간 다문화주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부분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민부의 공식 명칭을 ‘이민·다문화부’(Dep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DIMA)에서 ‘이민·시민권부’(Dep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로 바꾼 것이다. 새로 개편된 이민·시민권부의 2007-2008 계획에 의하면, 새로운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의 시행과 일시적 기술이민의 확대, 인도주의적 정착지

원 사업의 시행을 핵심적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처의 명칭 변경과 시민권 취득 대기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 영어와 호주 역사 시험 등 필기시험이 추가된 것 등의 조치는 그간 하워드 총리가 주장해 온 “모든 이민자들은 호주 땅에 왔으면 호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통합주의로의 회귀를 반영하는 것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물론 이것으로 다문화주의의 폐지를 속단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한편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호주의 가치와 이를 기초로 한 시민권 부여 사이에서 또 한 번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200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호주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9.11사태이후 이라크 전쟁과 테러리즘의 위협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극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호주 한 복판에서 다문화주의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줄 만한 충격적인 사건, 2004년 2월 15일 시드니 레드fern(Redfern) 지역에서는 에보리진들의 폭동사건이, 2005년 12월 시드니 크로눌라(Cronulla)지역에서는 레바논계 호주인들의 폭동 사건까지 발생했다. 2005년 12월 4일 일요일 시드니 남부 교외 크로눌라에서 레바논인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들에게 두 명의 십대 자원봉사 인명구조대원들이 폭행당한 것에서 비롯된 크로눌라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쌓여있던 중동계 이주민과 앵글로계 호주인 사이에 서로를 향한 인종주의적 감정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집단간 갈등으로 비화된 데 있다.

호주사회에서 이주민과 관련해 일고 있는 사건과 논쟁을 통해 다문화주의 정책의 논쟁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러한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 호주 정부가 취한 접근도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이념과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즉, 국가가 이민을 통제, 관리하고 이주자 집단을 지원하고 다문화주의 공공정책을 주도하면서 강력한 다문화주의 이념을 형성, 선포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중심의 접근 속에서 논쟁적인 의제를 다루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증진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문화주의 공공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의 일원이라는 점이 곧 개인적 차원의 태도와 인식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에 알맞은 지향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보면, 상당수의 시민들은 다른 집단의 일원들과 별 상호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 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심이 있더라도 관심의 방향이 다문화사회와 부합하지 않거나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관심에 불과한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국가중심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호주사회 저변에서는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가 유지되고 이민자들은 지역적으로 게토화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외되며 백인 집단의 끊임 없는 편견에 직면해야 했던 것은 다문화주의 국가의 모순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완전히 무기력한 것으로 폄하하기는 힘들다. 화합의 날을 지정하고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시민적 차원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크로놀라 사건과 같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부터 인종차별주의적 태도와 이주민들의 소외된 현실에 대한 자성적 비판이 일었던 것이나 사건 이후 이루어진 조사 결과 시민 80% 이상이 다문화주의를 지지한 것 등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그간 호주사회가 대응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는 공동체 연락관 프로그램(Community Liaison Officer Program)을 운영하고 이주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을 이루는 삶 행사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만으로 이주민과 사회 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진척시키고 민족집단 간 갈등을 예방해낼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호주사회로 하여금 정책이념이나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다문화적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시민들의 실천적 역량을 배양하고 실제 삶 속에서 관계의 밀도를 높이며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수 있는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일본

1) 이주민의 증가와 정주자화

전체 인구 중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적어도 부모 중 한명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가 43%에 달하는 호주에 비하면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3%에 불과하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구성에 있어 ‘동질성의 신화(myth of homogeneity)’를 지배적이념으로 유지해온 사회에서 이러한 수치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일본 내 외국인 등록자 수가 2,084,91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백만 명을 돌파했던 2005년에 이어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73,364명(3.6%)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하면 669,783명(47.3%)의 증가로 10년 사이에 약 1.5배가 된 셈이다. 물론 이 통계에는 등록자 수만 포함된 것으로, 각종 ‘불법’ 체류자를 넣으면 일본 내 외국인 수는 훨씬 증가한다. 이에 더해, 2004년을 피크로 일본의 전체 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인적 구성의 다원화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등록자의 국적(출신지) 수는 188개로 전통적인 재일외국인 집단인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한국·조선적이 전체의 28.7%를 점하고, 그 뒤를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미국 등이 잇고 있다. 이 중 한국·조선적을 위시해 식

민지배의 소산인 소위 올드커머 외국인은 감소하는 반면 뉴커머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뉴커머 외국인 중 중국인은 1970년대 중반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만해도 7.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일본이민자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국적자들도 1989년 말부터 3년에 걸쳐 대폭 증가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 ‘귀국자녀’³⁵⁾나 귀국한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가족들’³⁶⁾, 일본인과 결혼을 하거나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이들 등 주류 일본인들과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집단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가시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역시 일본사회로서는 새로운 경험이다. 외국인 노동자, 일본계 중남미인 모두 정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주였지만, 이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정주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으로 비자 조건이 훨씬 유리한 일본계 외국인 사이에서 정주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실질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⁷⁾.

35) 주로 해외 상사 등에 근무하는 부모를 따라 외국생활을 하다 귀국한 일본인 자녀들을 가리킨다.

36)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종전 이후에도 남아있던 일본인과 그 가족들로 이들은 1982년부터 일본으로 영주귀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문화와는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어 정착과 통합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주류사회에 포섭되지 않은 채 마이너리티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한영혜 2006: 160-165).

37) 현재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따르면 외국인단순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정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30만이 넘는 일본계 중남미인과 수많은 불법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일본계 외국인들은 1990년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취업에 제한조건이 없는 정주비자(3년, 갱신가능)가 부여되고 있다.

2)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게 된 일본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향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러한 과정 중에 새로운 이념적 지향을 압축하는 개념이 바로 ‘다문화공생’이다. ‘공생’이란 개념은 원래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뜻하는 것으로서 생태학에서 사용되던 것이 1970년대 들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란 맥락에서 많이 쓰이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뉴커머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사회적 ‘공생’개념이 흔히 쓰이고 있다(Chapman 2006: 세부과제⑤ 이태주 외 2007 재인용). 그 후 이 개념은 노동현장, 기업의 경영전략/이념뿐만 아니라 정당의 강령이나 행정부의 정책과제 등에 사용되면서 일본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대상도 남성 대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일본인 대 외국인 등 일본사회의 여러 소수자 집단 문제를 포괄하게 되었다(金泰永, 1999: 세부과제⑤ 이태주 외 2007 재인용). 한편 ‘다문화공생’이란 표현은 1993년 한 일간지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마와키 게이조(山脇啓造)에 의하면 1995년 한신대 지진 당시 외국인을 지원했던 단체가 ‘다문화공생센터’로 전환되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이 용어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넘어 오면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체에서 ‘다문화공생’을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정책 지침으로 내세우면서 이 개념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2004년에는 아이치현, 미에현, 나고야 시가 ‘다문화공생사회건설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05년에는가와사키시가 선구적으로 ‘다문화공생사회 추진 기본지침’을, 다치카와시가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책정하는 등 지방자치체에서는 커다란 움직임을 이루었다. 이밖에 최근에는 일본 재계에서도 다문화공생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일반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다문화공생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풀뿌리 시민단체와 외국인 비중이 높은 자치체의 관심이 가장 높은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의회나 경제단체 등이 관계 중앙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조정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다문화공생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다만, 2005년을 계기로 총무성에서는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6년에는 연구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책정하는 등 자세의 변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본의 행정체계 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정도로 국가 차원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총무성에서 제시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외국인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자체를 다문화공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계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지원과 생활지원,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라는 주요 영역별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행정정보를 다중언어로 제공하거나 통역서비스나 모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복지·보건, 방재 등 실생활에서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공생에 대한 지역주민 전체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식의 국제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 IV-2> ‘다문화공생추진플랜(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의 주요내용

다 문 화 공 생 의 의 의	<p>▷ 외국인 주민의 수용주체로서의 지역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서 수용하는 주체로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지방공공단체이며, 다문화공생 시책의 담당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p> <p>▷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장 지방공공단체가 다문화공생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의 외국인 인권존중 취지에 합치하여야 한다.</p> <p>▷ 지역의 활성화 세계에 개방된 지역사회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 지역 산업·경제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p> <p>▷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다문화공생의 도시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이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젊은 세대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p> <p>▷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 국적과 민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조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각에서 추진하도록 한다.</p>
기 본 시 책	<p>▷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 다양한 언어,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 제공, 외국인 주민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NPO와의 제휴,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p> <p>▷ 생활지원 - 거주관련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방재에 대한 정보 제공 - 생활 및 노동환경 개선 - 법률·의료 통역상담 업무 등 전문인재 육성, 유학생 지원</p> <p>▷ 다문화공생의 지역 조성 - 지역사회에 대한 다문화공생의식 계몽, 다문화공생 거점 조성. 교류이벤트 개최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중심인물 네트워크, 자주조직 지원, 심의회 및 위원회에 외국인 참여, 외국인의 지역사회(자치회, 상가, PTA)참여 촉진, 지역사회 공헌 외국인 주민 표창제도</p> <p>▷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 담당부서 설치 - 지역내 횡적 제휴 - 시구청촌과 도도부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p>

총무성의 이러한 제안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시책 중 대표적인 사례를 취합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1970-80년대부터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많은 수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외국인 집주 지역’에서는 관련 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추진되는 다문화공생 시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마와키 게이조(山脇啓造)는 크게 인권형, 국제형, 혼합형로 분류한 바 있다. 인권형은 비교적 일찍부터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자치체로 오사카시가 대표적인 예이며, 국제형은 1990년대 들어 뉴커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책을 추진한 자치체로 하마마츠시 같은 곳, 그리고 혼합형은 위의 두 가지가 결합된 경우로 가와사키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山脇 2007: 세부과제⑤ 이태주 외 2007 재인용).

이 가운데 오사카시는 2차 대전 전부터 한반도 출신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국·조선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외국인등록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까닭에 오사카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외국국적주민시책을 추진해왔다. 1994년부터 외국국적주민시책유식자회의(外國籍住民施策有識者會議)를 설치, 운영하면서 1998년에는 ‘오사카시외국국적주민시책기본지침: 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하여’를 책정하여 외국적 주민의 인권 존중,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 지역사회에의 참가 등 세 가지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2004년 개정).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사카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언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일본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본인 학생이나 주민을 위한 국제이해 내지 상호이해 교육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모니터링제도(1997년 실시)를 도입했으며 이외에 각종 심의회에 외국인 주민을 등용하거나 각종 여론 조사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기제도 확충해가고 있다. 오사카시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국인권실추진그룹으로, 외국국적주민시책 담당과장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제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하마마츠시의 외국인 시책을

소관하는 부서는 기획부 국제과이다. 하마마츠시는 전국적으로 브라질인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2001년 ‘세계도시화비전’을 책정하여 ‘공생’을 ‘국제교류 협력’과 함께 시책의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2007년 개정 예정). 또한 도시간 연대를 중시하여 다른 자치체들과 함께 2001년 외국인집주도시회의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같은 해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국가에게 촉구하는 ‘하마마츠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2년에는 ‘14개 도시 공동 어필’을 발표하여 외국인 수용과 관련된 기본방침의 책정과 관계 중앙부처의 시책을 조정할 조직의 설치를 중앙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가와사키시는 수도권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많이 거주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1980년까지는 한국·조선인이 외국인등록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1990년에는 60% 선으로, 현재는 약 30% 선으로 축소되고 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1988년 일본인과 외국인의 공생을 목표로 한 일본 최초의 사회교육시설인 후레아이관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1996년에는 외국인 시민대표자회의를 조례에 근거해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인권의 존중, 사회참여의 촉진, 자립을 향한 지원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다문화공생사회추진지침’을 책정하였다. 가와사키시에서 외국인시책을 소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국 인권·남녀공동참획실로서 외국인시민시책담당주관을 두고 있다.

위의 세 지역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공생 관련 시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역사나 배경, 구체적인 접근방식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 수준을 넘어서서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본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계몽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이 함께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多文化共生地域づくり)를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3) 생활자 중심 접근의 성과와 한계

일본 다문화공생정책의 핵심은 외국인을 ‘지역의 생활자’ 또는 ‘외국인 주

민'으로 위치 지우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즉, 일본인 주민도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로서 국적과 민족 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는 다민족화, 다문화화가 진행되는 현장이자 구체적인 다문화공생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 가는 핵심적 장이다.

아이치현 니시오시³⁸⁾의 현영주택단지³⁹⁾는 일본인 주민과 브라질인들이 일정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생'의 길을 찾아가는 일본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일본에서는 앞서 살펴본 크로놀라 사태와 같은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쓰레기 배출이나 주차 문제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 사이에 마찰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지역 해체 요인'이라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다³⁹⁾.

니시오시의 현영주택단지⁴⁰⁾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활상의 갈등이 야기된 적이 있다. 일본인 주민끼리 자치회를 운영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던 한 현영주택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자 무질서한 주차,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의 미준수,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 주민들과 일본인 주민들 사이에 마찰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예방하기 위해 일부 현영주택에서는 주택내 자치회 임원으로 브라질인 임원을 선출하고 번역, 통역을 담당하는 임원이나 외국인 상담역, 회계감사 등을 신설하였다. 이렇

38) 나고야시 남동쪽 약 35km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지방도시로 1990년도 입관법을 계기로 브라질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입이 현저해진 지역이다. 이들은 주로 니시오시와 주변시의 토요타계열의 공장 등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39) 토요타시 H단지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다(都築 1992·1993·1995·1996·1998a·1998b·2002·2003; 세부과제⑤ 이태주 외 2007 재인용).

40) 다음에 소개되는 부분은 니시오시 한 마을에 위치한 3개의 현영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이다.

게 자치회 활동에 브라질인 주민들이 적극 참가하게 됨으로써 자치회에서 발신되는 정보가 포르투갈어로 번역, 통역되어 브라질 주민들에게 통지되어 일상생활 상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자치회 활동을 통해 브라질인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한 현영주택에서는 ‘할머니의 학교’라 불리는 포르투갈어 교실을 운영하고 ‘아미고의 모임’이라는 브라질인 모임이 결성되어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제인 페스타 유니나나 바비큐파티, 브라질 어린이날 운동회 등을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인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석하여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생활상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적으로 가시화되고 그 위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현영 주택이 속해있는 지역 연합 반상회에 브라질인 임원직이 마련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니시오시 외국인과의 공생을 생각하는 모임’ 역시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발족하였으며 여기에도 브라질인 이사가 선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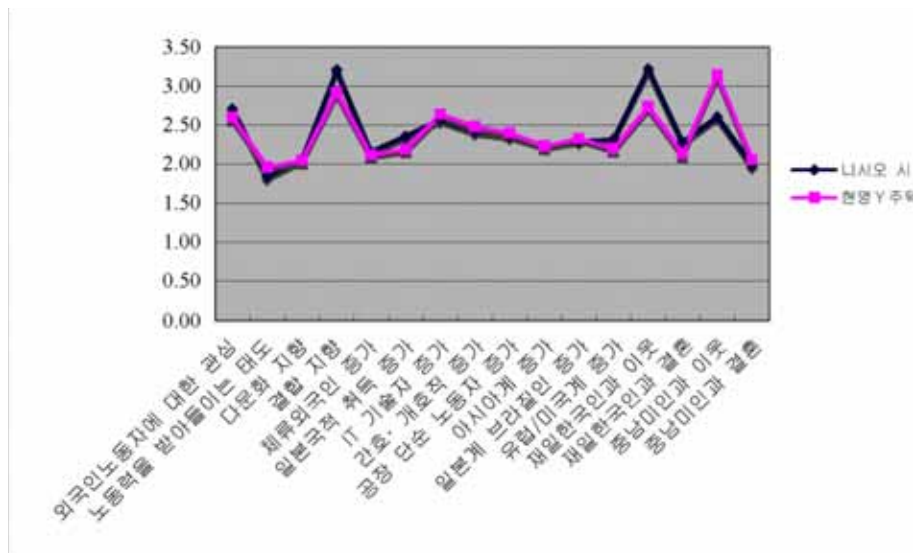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실천은 제도적 기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관심과 열정에 의존한 것으로 해당 개인의 이동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⁴¹⁾. 그리고 무엇보다 큰 과제는 지역적 차원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일본인 주민들의 태도가 그리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점이다. 심각한 갈등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2002년 한 현영주택의 일본인 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일본인 주민은 브라질인 주민들에 대해 판에 박은 듯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브라질인 주민들의 증가는 “주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淺田 2005 : 89: 세부과제⁵ 이태주 외 2007 재인용).

2005년에 니시오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한 현영주택의 일본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⁴²⁾에서도 공통적으로 일본인 주민들은 브라질인이

41) ‘할머니의 학교’를 운영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미노 모임의 페스타 유니나와 운동회도 중단되는 등 외국인 주민들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42)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세부과제 ⁵ 이태주 외 2007 참조.

나 재일한국·조선인과 지역에서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내에 브라질인 이웃을 둔 주민들이 중남미인과의 이웃관계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관계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V-1>.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의 이주민 이웃과의 개인적 교제의 빈도나 밀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브라질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함.

자료: 세부과제 5 이태주 외 (2007)

<그림 IV-1> 이주민에 대한 니시오시 시민과 현영주택 주민의 태도 비교

이밖에 다문화공생사회의 이상과 달리 그 현실은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여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일본인이 살기 편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일본사회의 규율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한편, 일본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 무시

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외국인 주민만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는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문화공생 실천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지역차원으로 축소시킨 정책적 접근에 그 중요한 요인이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작업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해 일차적 생활공간 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과의 공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 공생 이념은 근본적 사회 구성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민족국가 이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국제화 이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서구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할 때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일본인 간의 심각한 갈등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이민이나 합법적 노동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서구사회와 비교해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수적으로도 적고 대다수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일시적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조직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아직 정주의 역사가 짧아서 시민권에 대한 목소리도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올드커머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지만⁴³⁾ 정치적 부담도 적고 현재로서 뉴커머의 주 관심사이기도 한 일본어 교육이나 다언어 행정 서비스, 이문화 체험 이벤트나 교류행사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요구는 잠복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뉴커머들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나은 직업, 의료혜택, 교육,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다 중요해 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자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제도적 권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시민권을 요구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다문화 존중’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 다문화공생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

43) 재인한국인이 사이에서는 이미 국적취득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영혜(2006) pp.175-178 참조.

을 것이며 정책의 수정을 위한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일본인 정체성과 시민권의 재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과정은 지금까지처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해외 사례의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호주는 민족국가의 형성과정, 이주의 역사와 이주자 집단의 규모, 이주자의 요구와 사회통합문제의 양상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주자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위치시키고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간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비교의 준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에서는 이주의 증가로 집단 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공통적 진단을 기초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와 동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국가로 평가되던 호주는 9.11 사태 이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와 유사하게 민족간 갈등이 악화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인종, 종교, 민족 집단간 갈등이 표출되고 일정 부분 공식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앵글로계 호주인들과 중동 출신의 이슬람인들은 서로를 관용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으며 민족 간의 상호 경계심은 악화되었고 집단적 충돌과 폭력사태로 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에 더해 보수주의 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의 선정성으로 사태가 극단적으로 전개될 우려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의 현실은 이주민과 일본인 주민 간에 생활상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분이 있지만 심각하고 노골적인 양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문화사회로서 일본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제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주의 기간이 보다 장기화되면서 이주민들의 요구

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지역생활’에서 벗어나 일본사회의 본질적인 질서에까지 이르게 되면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와 관련된 문제의 양상이나 심각성만큼이나 이를 다루는 두 국가의 정책적 대응 역시 사뭇 대조적인 측면이 발견된다. 호주에서는 이민자 선별에서부터 정착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중심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명확한 정책이념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다문화주의 정책이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정치의 장 전면에 등장하여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해있다. 또한 국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가는 가운데 시민적 차원의 통합은 다소 간과된 면이 있다. 1970년대부터 다문화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다문화적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시민들의 실천적 역량을 배양하고 실제 삶 속에서 관계의 밀도를 높이며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수 있는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뚜렷한 이념을 제시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이나 일본인 주민들이 실제 겪는 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발적으로 공존의 질서를 형성해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문화공생정책이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그 실천을 활성화하도록 장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이 뜨거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호주에 비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주변적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거세지 않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도 ‘다문화공생’은 합의된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다문화공생’을 민족국가의 폐쇄성을 은폐하는 레토릭으로 사용하려는 민족주의 진영과 다른 한편으로 탈-민족주의적 대안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사이에 각축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한영혜 2006:180). 또한 다문화공생이 사회 목표로 천명되고 곳곳에서 관련 시책이 추진되는 가운데에서도 조만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즉 일상적 삶을 사는 동시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주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본의 현실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생활자로서의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족과 문화를 넘어 서로 대면하고 이해하고 협력해가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 공생정책의 시행으로 시민적 통합이 증진되고 있는지 역시 의문점이다.

물론 일선에서 다문화공생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민관이나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과 이문화에 대한 일본 어린이, 학생, 성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공생에 관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고,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축제나 상호 교육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다문화공생플랜에서도 ‘외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식의 국제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는 2006년 월드컵 개최에 맞춰 “스포츠와 국제교류”라는 주제 하에 일본인 주민 대상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제원조단체의 활동 경험을 통해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강연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가와사키시의 사회복지법인 후레아이관에서도 일본인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악기나 춤을 소개하는 강좌를 하거나 초등학교에서 한국, 북한의 문화나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는 이미 다문화공생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도로 다문화공생의 현실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실현을 위해 실천을 도모해 가는데 있어 호주는 국가 중심적 접근을 채택한 대신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내지 시민적 차원의 통합은 간과함으로써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면,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자발적 의지를 지닌 생활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그 대안은 경제적 상황과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한 위로부터의 정책적 선택과 이에 입각해 정책 이념을 형성하고 그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동시에 시민적 차원의 통합을 추구하는 이중적 접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을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주체는 바로 시민 자신들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 일본이나 호주 정부 모두 이주민을 사회성원으로 인정하는데 열의를 보인 만큼, 이들과 함께 다문화적 현실을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단지 일본이나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주요 다문화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주요한 과제이다.

이주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일반 시민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 것인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념적 태도가 시민들의 실천적 태도로 내재화되고 있는지, 일상적 실천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등은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적 부분이다. 특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이상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공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아지고 개방적인 태도가 형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현실을 보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념의 내재화가 지체되어 이념적 지지와 시민들의 관심과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 시민의 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리카(2003)는 제도적 차원의 다문화적 국가(multicultural state)와 구분된 ‘다문화적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개념을 제시하고 다문화주의의 내재화, 즉 다문화주의 본연의 목적과 일치하는 일상적인 시민의식과 태도의 정착,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량과 기술의 증진을 위한 별도의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정책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들 역시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함께 논의하고 활동해나갈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향한 정책의 출발점은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함께 하는 사회의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관심이 사회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있을 때에는 큰 갈등이 야기되지 않지만, 이주민들의 요구가 주민으로서의 생활권에서 시민권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사회구성의 변화가 논의되게 되면 논쟁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호주보다 일본이 이주민을 둘러싸고 보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문화적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갈 만한 시민사회의 역량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 두 국가의 사례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단지 출신국가, 민족집단별 다양성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자칫 일반화에 기반한 편견을 부추기고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소수자 집단 간 경쟁 구도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이주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내의 다양성은 민족 이외에 젠더, 장애여부,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서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에서는 주요 원칙의 하나로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인종과 출생지 이외에 성별, 문화, 종교, 언어, 거주지역 등에 기초한 차별 없이 평등한 처우와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통합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공생’ 개념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이 주류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이념을 정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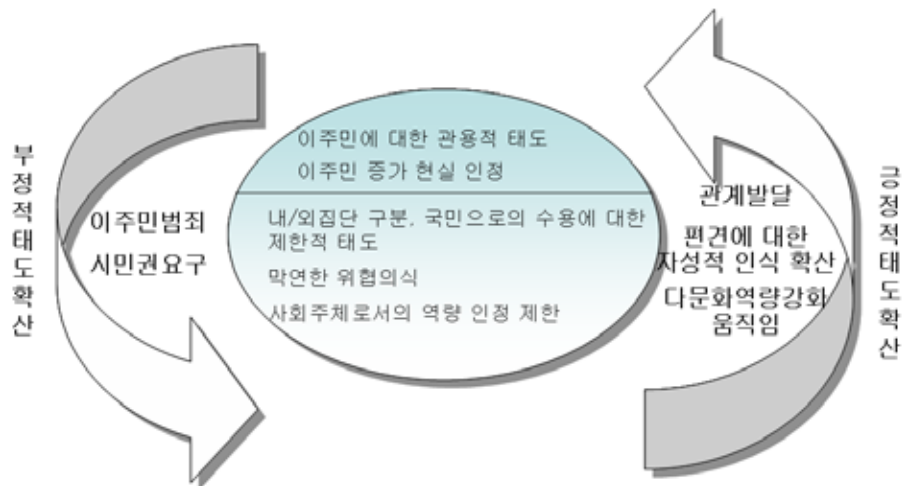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외국국적주민시책을 인권과 평등 시책의 하위 영역으로 위치시켜 남녀공동참획플랜 등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오사카 시나 가와사키의 사례는 현실 정책 차원에서도 여러 기준의 다양성을 함께 다루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

1.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161
2. ‘다문화’ 정책의 현실	169
3. 정책제언	179

1.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그림 V-1>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1) 다문화사회에 대한 탐색 단계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작업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주민과 대면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작업장 동료, 교우와 교사, 지역주민과 정책·서비스 담당자들의 수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혈통 중심적 국민정체성 의식도 기대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회원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주자 증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이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해 한국사회가 긍정적인 지향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은 이상의 몇몇 측면에서는 관용적인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척도 가운데서도 다양성 수용능력의 한계나 이주민 본국 송환 등에 대해서는

EU회원국가 국민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배제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에 있어 현재 한국사회가 보이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체적인 제별로 태도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와 논의의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사회는 이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에 관한 의제가 발굴되기 시작하고 관심과 논의가 형성되어 가는 단계로서 일반국민들 역시 몇몇 사안을 중심으로 태도를 형성해가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생활의 장에서 이주민을 대면하는 이들의 태도 역시 이러한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하는 교사나 교우들, 지역사회에서 또는 공적 업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면하는 지역주민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는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해서라기보다는 이주민이 현저히 증가하고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을 총괄해 볼 때, 현재 한국사회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는 정도의 수용성은 나타나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경험과 논의가 제한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일관된 신념과 가치를 형성해 가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민, 사회주체로서의 수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전반적으로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몇몇 측면에서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때로는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과는 모순되는 태도도 발견된다. 우선 한국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클 뿐 아니라, 특정한 관계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을 동료나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해 혈연이나 가족관계로 받아들이는데 현저히 소극적이며, 이러한 태도는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시민’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in-group)에 가까운 관계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만큼 외국인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각종 권리 부여에 대한 태도에 있어 노동법적 권리나 가족 동반권, 인권 보호 등의 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데 비해 시민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활의 장에서 이주민을 실제로 대면하면서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서는 이러한 태도가 이주민들의 사회주체로서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연결된다.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활동역량에 대해서도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투표권을 위시한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지역주민들이 명백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사회의 수용성으로는 이주민을 친구나 이웃, 동료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에 적합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선진국 지향성과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수용성이

출신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으로, 한편으로는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수용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적, 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기대는 조선족과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자에 대한 거리감을 분화시키는 경향은 다른 국가군에 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출신자에 대한 거리감이 현저히 적은 특징을 보이는 데에서 확인된다.

이 가운데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태도의 분화 양상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저연령, 고학력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층에서는 국가별 관심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개도국에 대한 관심은 제한되어 있으며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관심의 위계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경제발전수준과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주민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분화시키는 글로벌 상호문화지향(global interculturalism)(Kymlicka 2003)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국제결혼 자녀 가운데 특히 영어를 위시한 문화자본을 지닌 교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출신자가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 중심적인 태도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특히, 향후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선진국 지향적인 태도가 강화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관련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출신국가별로 이주민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독 개도국 출신자를 향한 부정적 태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국민 대상 의식조사와 교사와 교우, 지역주민의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 가운데 오직 특정 국가군 출신, 즉 한국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편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나 학

교처럼 일정한 생활공간 내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본 출신자나 그 자녀에 대해서는 집단적 일반화에 기초한 편견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비해, 개도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한 편견이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대표적 편견으로는 이들로 인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나 생활환경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협 의식으로 이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태도의 일면이 나타날 정도이다.

막연한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도국 출신 이주자를 향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집단적 편견은 이들을 완벽한 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흔히 한국어 능력을 위시해 학습 성취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결핍과 부적응의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으며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과정 상에 문제가 있는,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법제도적 수용과는 무관하게 지역사회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 탈 개체화된(depersionalized) 일반화 경향은 다양한 국가 출신 가운데에서도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 출신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자칫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민족적 편견으로 비화될 우려도 잠재해있다.

무엇인가 ‘부족한’ 이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실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 정도가 일부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선의’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인식 역시 현재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자칫 이주자를 일방적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선입견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주체로서 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관계의 제약과 배타적 태도의 재생산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은 이주의 전개 양상과 이주민의 존재 양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 방향 등을 탐색하면서 태도를 형성해 가는 단계로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초-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향배가 좌우될 것이다. 특히, 점점 많은 시민들이 특정한 이주민과 개인적 차원의 직, 간접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자신과 주위의 수용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작업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이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단순한 안면관계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개인적 친분을 쌓는 경우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이주민과 별 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관계 형성 자체만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관계의 성격으로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사회·문화적 배경, 기본적 태도, 소통 능력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언어 소통이 가능한 상대와는 어느 정도의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해당자에게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느낌을 벗어나 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태도의 구체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이에 기초한 막연한 위협의식은 다소 완화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를 지역주민으로 대하는 이들이나, 국제결혼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학생이나 교우로 대하는 이들 역시 이들을 완벽한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각국 출신 이주자에 대한 거리감이 일반인 보다 오히려 거리감이 크고 문화적 다양성이나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자아/타자 집단의 구분이 강화되는 경

향도 발견할 수 있다.⁴⁴⁾

이처럼 개인적 관계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완전한 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관계의 수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독특한 수용성 역시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을 동료나 이웃,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것과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어느 정도의 개인적 관계 형성으로 그 장벽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일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생활의 장에서 이주민과 대면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자격 차원에서 이주민을 평가하면서 이미 수용성이 소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예외적인 이주민 집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내집단(in-group)’으로의 통합이 허용되는데, 한국인과 혼인관계,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혼인, 혈연관계 그 자체로서 실질적 성원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가족생활 면에서 ‘한국인처럼’되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표면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시민 사이에서 한국사회로의 동화 이외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수용성 변화의 가능성

현재로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한국에서 이주자 문

44)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시의 일반시민과 현립주택 주민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아도 같은 주택단지 내에 브라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반주민에 비해 중남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표면적 관계만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는 주로 인권침해나 소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소수자인 외국인 이주자가 다수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갈등을 빚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수용성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만약 이러한 조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인의 표면적인 관용성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경우 이들을 향한 부정적 태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시민권이나 사회 참여에 대한 이주자들의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일견 관용적으로 보이는 한국사회의 수용성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 촉매자(social facilitator)가 부재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 변화로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학교생활에서는 교사가, 지역생활에서는 일선 정책·서비스 담당자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로서는 이들 역시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수용성의 재구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이주민 집단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육적, 정책적 실천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교사나 서비스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형성되고 있어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 열쇠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과 개인적,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면서 이들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전되며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자성적 인식이 확산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삶 속에서 대면하는 이주민과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기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 ‘다문화’정책의 현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정책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사회의 ‘다문화’논의 전개과정에서는 사회적 관심 형성의 계기 자체가 정부 정책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현재의 정책을 보면, 이미 ‘다문화사회’가 공식적 정책의제에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정책 목표로까지 채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4월 정부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을 필두로 각종 정책계획에서 ‘다문화사회’를 비전이나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를 오직 일시적 체류자로만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은 출입국 관리에 한정시켜 왔던 정부가 국제결혼의 급증과 함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적응 문제가 대두되자 ‘다문화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이주자 관련 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표 V-1> ‘다문화’ 정책 계획 현황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사회비전 2030
발표 시기	2006. 4.	2006. 5.	2006. 5	2006. 8
관련 부처	14개 부처 및 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정책위원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비전과 목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 차별 및 복지 사 각지대 해소	문화 민주적 통합 (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로 한국을 문화적 융해의 장 (Cultural Melting Pot) 으로 전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 - 외국인 인권존중 과 사회통합 - 우수 외국인력 유 치 지원	세계와 교류하는 다문화사회 - 차별과 배제가 없 는 다문화사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 방지 및 결 혼당사자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의 안정적 체류 지원 - 한국사회 조기 정 착 지원 -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생활안정지원 강화 - 사회적 인식 개선 -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지원 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우 리 국민의 다문화 주의 의식 제고 - 지역사회의 다문 화가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 사 역량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 서에 다문화 교 육요소 반영 - 대학생 멘토링 사 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 - 국제결혼가정 자 녀의 이중언어 학 습 지원, 불법체 류자 자녀의 신분 안정을 위한 부 처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동포 포용 - 결혼이민자, 외 국인여성, 외국 인의 자녀 권익 향상 - 난민에 대한 실 질적인 지원 - 외국인근로자 처 우 개선 -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 다문화사회로의 통합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와 이 주노동자 등 새 롭게 등장하는 사 회적 배제 집단의 기본적 인권 보호 와 사회 통합 촉 진위한 기본법 제 정, 정부내 전담 기구 설치 - 국제결혼이주여 성 기초생활보장, 결혼이주여성지 원센터 설치, 언 어교실 운영 등 지원책 마련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현실적으로 뿐 아니라 공식 정책적 차원에서나 ‘다문화사회’에 돌입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이후 많은 부처가 ‘다문화’ 혹은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문화관광부에서는 ‘다문화체험’을,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전문가’와 ‘다문화 청소년 축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 지원 대책’을 표방하고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및 자녀들을 ‘다문화주의 전파자’로 육성할 목표를 채택하였다. 더욱이 이 계획에서는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⁴⁵⁾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함께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을 계획에 포함하기도 했다.

1) 정책목표의 혼란

이처럼 2006년을 계기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소위 ‘다문화’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목표로 명시된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정책의 현실을 보아도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이념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이 몇몇 이주민 집단과 관련된 제도나 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이라는 특정한 다문

45) 미국의 독특한 국가문화 이념으로 특정한 민족 집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지닌 다양한 요소가 혼합, 용해되어 미국만의 독특한 국가문화를 창출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화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문화주의 이념과는 별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는 등 제시된 ‘다문화주의’의 기본 방향과는 모순적인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된 정책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개념일 뿐 아니라 이미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조차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논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 확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목표로 채택,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의미가 불명확한 정책 목표나 목표와의 부합성이 낮은 정책의 내용은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며, 정책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특정한 이념과는 무관한, 어떤 측면에서는 모순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정책대상의 선별: 차별/배제 접근

현재 ‘다문화’ 정책의 기치 하에 추진 중인 법·제도적 개선과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데에서부터 여타의 국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이주자 관련 정책은 합법적 이주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이주자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되어 거론될 뿐이며 이주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다문화’정책의 핵심에서 배제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서도 특정한 요건을 갖춘 이들이 우선적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적을 취득하

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모·부자 보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한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⁴⁶⁾⁴⁷⁾한 것이 그 대표적 예로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혈연관계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고 정책의 포괄범위를 조정하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⁴⁸⁾.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외의 이주민은 일시적 체류자격만을 부여한 채 사회통합 범위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차별/배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유사한 모델에 기반했던 독일은 일시적 체류자로 분류되었던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주자화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차별/배제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대응 시점을 놓쳐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용일 2007: 250-251). 또한 일본에서도 다양한 이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정주자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구-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이주민 집단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민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배제모델에 기반한 정책의 한계는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경험되고 있다. 출신국가나 입국 목적 등이 다양한 이주민 중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현재의 정책은 현실적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 정책의 핵심적 대상으로 설정되는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명확한 범위를 규정되기에는 어려

46) 2006년과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과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중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수혜대상자로 명시하였다.

47)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우선적 취지는 이주민 지원 보다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 보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8) 이외에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원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규정하면서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한 바 있다(박종보 2007).

운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관련 가족과 그 자녀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를 규정해야 하는 일선 담당자들의 혼란은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⁴⁹⁾ 이와 함께 특정 범주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단적 구분을 전제로 한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의도된 것은 아니나 정책 추진의 결과 한국사회와의 통합에 미온적인 선진국 출신 이주민 보다는 개도국 출신 이주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 자체가 사회적 편견을 공인하고 해당자들에게 ‘낙인찍기’와 같은 부담을 주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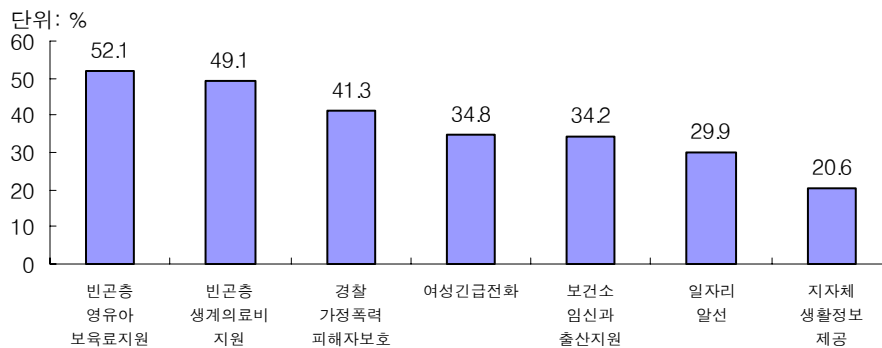
3) 정책과정에서 이주민의 위치

다문화사회의 핵심은 사회 내에 국가 외부에서 온 이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을 주체들이 존재하면서 함께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을 단순한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지우는 데에서 탈피해 정책의 파트너 나아가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각 지방정부별로 외국인회의나 현정 모니터 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있으며 독일의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대표기구를 조직해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이주민들이 출신국가별로 회의를 조직하고 단체를 결성해 각 민족문화를 보

4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추진과정에서도 ‘결혼이민자’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음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혼인하는 경우, 둘째, 외국주재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마친 후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셋째, 결혼이민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 그런데, 이 가운데 셋째 유형은 전형적 결혼이민이 아니고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거나 사회·경제적 상층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어 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박종보 2007: 26)고 명시하여 정책대상으로서 ‘결혼이민자’ 범주 선정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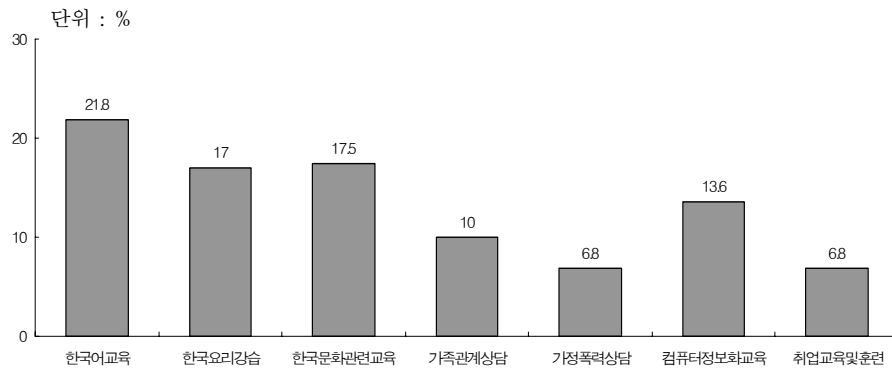
존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제2외국어 정책 등 출신문화의 위상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이선 외 2006: 281).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이주민은 국가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주체라기보다는 여전히 일방적 지원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져 있다. 주로 ‘탈법적 국제결혼 피해자’, ‘가족폭력 피해자’나 ‘학습 부적응자’, ‘생활 불안정 계층’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들은 별도의 교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설정되는 경향이 짙다. 반면,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이주민의 모습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정책과정에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주민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조차 수렴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해당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정책 수행과정에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06)

<그림 V-2> 결혼이민자의 지원정책 인지도



자료: 여성가족부 (2006)

<그림 V-3>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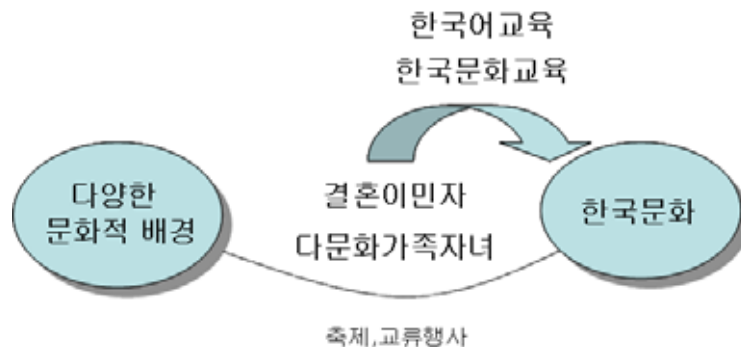
심지어 이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최근 들어 각종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는 20% 수준에서 높은 경우 5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절반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참여율은 더욱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별로 적게는 6%에서 많아야 20% 수준의 결혼이민자만이 참여한 경험만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정책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이 이주민 자신보다는 오히려 국가, 공무원, 업주 등의 편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4) 동화 지향성의 유지

현재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기관의 수적 급증세에서도 확인되는데, 2005년 전국적으로 86개에 불과하던 서비스 기관이 2006년에는 242개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무

려 500개 이상으로 2006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이선 외 2006;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이처럼 급증하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컴퓨터교육, 취업기술교육 등 각종 교육에서부터 통역서비스, 가족상담 및 교육, 자녀교육지원, 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부록 3>.

그런데,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서비스의 시행 현황을 보면 한국어 교육과 한국 요리 강습, 생활예절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문화를 강조하고 문화적 적응과 동화를 지향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그 기회도 크게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축제나 요리교류, 풍물교류 등 일회성 행사가 중심이어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김이선 외 2006: 231-234).



<그림 V-4> 이주민대상 사업을 통해 본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

물론 한국어 교육은 생활 적응과 사회 통합에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정책에서는 주요한 의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 결과,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이주민 집단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데 일방적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주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요구에 충실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정책은 이주민과 관련된 몇몇 현안을 다루고 있을 뿐,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정책으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시민적 통합에 대한 간과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정책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을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에서는 시민적 통합이 주요한 과제로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함께 하는 사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도모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출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호주나 일본 모두 실효성 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시민 통합을 핵심적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호주에서 추진되는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이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회 또는 국제교류센터,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학생과 시민 대상 국제이해교육이나 워크숍 등은 다문화사회를 향한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사회와 본격적인 관련성을 지니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에서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관련 정책계획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 제고’, ‘다문화사회로의 통합기반 강화’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계획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은 축제나 풍물교류, 요리교류 등 일부 일회성 행사 정도에 불과하다. 다문화시범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별도의 교육에 집중해 있는 반면, 학생 일반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현재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더욱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담당자나 서비스 제공자,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다문화’ 정책의 한국사회와의 관련성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정책제언

1) 다양성 · 사회통합 정책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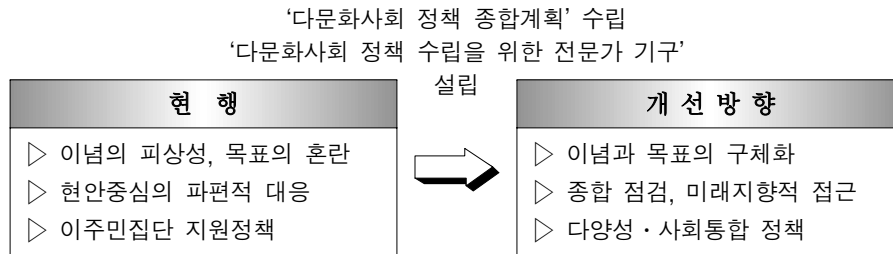
현재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의 시작하는 단계에 서 있다. 보다 앞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 사회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논의 과정은 단기간에 완결되지 않을 것이며 적지 않은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다문화사회’를 공식적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급속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사회적 이해의 확산과 합의 도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논의 수준과의 격차로 인해 정책 추진 자체가 적지 않은 모순과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 측면도 있다.

특히, 현재의 정책은 ‘다문화사회’의 현실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적 모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다문화사회’만이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수준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일부 정책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표상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같은 시기에 수립된 또

다른 정책 계획에서는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이라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특정한 이념 지향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 정책의 혼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다문화사회’라는 목표 하에서 실제 계획,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을 보아도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의 기본적 구성 원리로 인정하는 근본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순되는 방향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정책으로서의 면모에 걸맞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황까지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한 특정한 이주민 집단이 입국과 한국사회 적응 상에서 겪는 문제로 이미 가시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다양성의 가치와 인정 범위와 방식, 이주민의 사회적 위상 등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제기되는 의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편화된 현안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총체적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대상 정책으로서의 제한된 틀에서 탈피해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재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전개 가능성을 예측하며, 이를 기초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이념적 지향을 형성하고 그에 입각해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중요하다.



<그림 V-5>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방향

이와 관련해 호주에서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호주 다문화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Multicultural Affairs: AIMA, 1979-1986)와 이민 · 다문화 · 인구 연구국(Bureau of Immigration, Multicultural and Population Research, 1989-1996) 등 국가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여 관련 의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총무성 산하에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개별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안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사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의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전문가 기구(‘다문화사회 정책 수립 전문가 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종합적 진단과 예측, 현재 정책 평가, 정책 계획 수립, 관련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사회 정책 종합계획’(가칭)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도입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가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사회 각 부문

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이주민 집단이 이미 가시화되고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해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주민과의 관계가 쌓여도 이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는데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완강해지는 경향까지 발견되고 있어 이주민의 증가와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대면에 따라 이주민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산적인 사회 질서를 구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에서 지역사회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으로서 이주민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문화공생을 표방하면서 일본 정부는 단순히 외국인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본인 주민도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지역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시정 모니터링제도를 비롯해 하마마츠시의 외국인 시민회의 및 지역공생회의,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이슬람 공동체 등 주요 출신국가별 공동체 자문그룹을 두고 있다. 크로놀라 사태 해결과정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가 시행한 공동체 연락관 프로그램(Community Liaison Officer Program)역시 사태 해결 방안과 향후 대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주민의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위한 기제였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의 정책에서 이주민은 오직 교육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질 뿐 사회의 주체로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이주민의 요구와 비판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들어 여성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족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의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적합한 사회 질서로서의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주민을 완전한 역량을 지닌 사회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으로서의 위상과 직접 관련된 논의는 사회적 수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합법적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공인하고 그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지역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정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와 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다양한 배경의 주민, 동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지역사회’, ‘함께 하는 작업장’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시범학교도 이러한 방향에서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시민적 통합 증진 정책 도입: 다문화 시민교육의 확산

다문화사회의 궁극적 지향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대면하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의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생산적 시너지를 구현해 가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 지

향, 지식,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과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 등은 다문화적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주(민)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서구 국가의 경험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다문화사회가 진전되면서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의 근본적 질서의 재구성 문제까지 이르게 되면 다문화사회의 향배는 시민적 태도와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간과될 경우 다문화사회의 전개는 결정적 고비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장기적 전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왜곡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적 태도와 역량은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 의제는 간과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점검하고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모순되는 지점을 파악해 대안적 방향을 설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 수용 양상을 철저히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보면 이주민을 사회주체로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소극성, 다양성에 대한 무관심과 동화 지향적 태도, 선진국 출신자와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 등 다문화사회의 전개 현실과 모순되는 양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은 강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동등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공유했던 경험은 거의 없다. ‘한국인’ 또는 ‘시민’의 정체성은 민족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민족이 아닌 한국시민’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어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의 증대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러한 고정관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성숙과 문화적 관용의 확산을 결합한 형태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큰 방

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다문화 사회의 주체들인 ‘다문화 시민’을 양성하는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민족·다문화 사회는 곧 시민적 관용성이 확대된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주도의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중요하다.

최근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에 대한 관심은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주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의 공존을 가르치기 보다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의 주류사회에 편입 또는 동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체계성과 통합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양영자 2007).

장원순(2007)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이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사회의 이상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련의 단계와 체계를 갖춘 교육 프로그램의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민적 관용성의 증대’라는 대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적 시민사회’(장원순 2007) 또는 ‘심미의 다문화주의’(김남국 2005) 등은 이러한 이상을 표현하는 개념들이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시민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소수집단인 이주자 뿐 아니라 다수자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시민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소수자 뿐 아니라 다수자들도 누구나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이며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이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반드시 소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적 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표 V-2>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내용구성

다문화적 시티즌쉽			
영역	문화적 능력	민주적인 상호문화 능력	시민적 능력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지역, 지역문화 - 종교, 세대, 직업문화, 사회영역 문화와 같은 다양한 하위집단 문화 - 문화의 특성과 문화접변, 상호작용, 변화과정 - 사회과학 개념과 이론(지위, 역할, 구조, 변동) - 사회과학의 탐구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문화의 상호작용과 변화, 그리고 발전 - 지식의 구성 및 변형과정 그리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적 권리와 의무(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문화권) - 입헌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 정치과정과 참여 - 담론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 합리적 담론형식과 절차 - 민주적인 정치참여 및 활동 -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의미, 참여 및 활동

자료: 장원순 (2007) p.30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역량(civic competence), 문화적 이해 능력(cultural competence)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과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문화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즉 민주적인 상호문화 능력(democratic intercultural competence)을 배양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제도화된 학교교육 시스템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교재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 특히 인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시민적 관용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와 지역의 정책·서비스 담당자들과 같이 실제 생활의 장에서 다문화 주체

들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에 다문화 시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 촉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다문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시민교육의 이상에 따르면 이주자에 대한 교육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주입할 것이 아니라, 이주자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문화나 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사회 역시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이주자들이 다문화 이해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즉 자신의 출신 문화를 한국인에게 소개하는 문화전달자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양성하여 각급 학교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세계화의 진전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글로벌 상호문화지향(global interculturalism)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 시민교육은 아시아 개도국 출신 이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로컬 상호문화지향(local interculturalism)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시민교육은 다양성과 역동성을 결여한 획일적 프로그램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시민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별·시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시민교육은 ‘문화’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보다는 체험과 실천,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시

민 참여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지역단위의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다문화 시민교육이나 문화활동과 관련된 각급 단체와 주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이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건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90: 29-53.
- 권숙인. 2005.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pp. 251-284.
- 금명자 외. 2006.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상담원. pp. 17-72.
- 김광익. 2005.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익 외. pp. 15-84.
- 김남국.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97-121.
- 김민정 외.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6.
- 김세균 외. 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학과학사.
- 김수행. 2006. “영국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외. pp. 37-88.
- 김애령. 1998. 『충남거주 조선족 여성의 결혼과정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김이선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원 외. 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일 외. 1995.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취업”. 『경제와 사회』 통권 제26호: 172-207.
- 김현미. 2007. “국가와 이주여성: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의 갈라지는 희망들”.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 국제학술대회: 지구지역시대의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자료집.
- 김현선. 2006. “국민, 半국민, 非국민- 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 12: 77-106.
-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아카데미.
- 박병섭. 2006.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학』 12: 99-126.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70: 5-25.
- 박종보. 2007. “다문화가족 지원 법안 발제문.” 국회인권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 설동훈. 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노동자.” 『경제와 사회』 제15권: 113-144.
- _____. 1998.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6. “국민 민족 인증: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앤더슨 (윤형숙 역). 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 양영자. 2007. “한국의 다문화 교육 현황과 과제”. 오경석편.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한울아카데미.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pp. 45-73.
- 여성가족부.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2):145-181.
- _____. 1999.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열린사회를 향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당대비평』 9:152-172.
- _____. 2002. “외국인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12-35.
- 윤인진. 2002.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거리감’,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나남출판.
- 윤형숙. 2005. “지구화,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성적·인종적 위계 만들기”.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한국여성학회 제21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선화. 2007.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 연구』 8: 177-205.
- 이용일. 2007. “이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도전: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서양사론』 제92호: 219-254.
- 이진숙. 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231-252.
- 이태주 외. 2007. 『다민족, 다문화 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8: 89-113.
- _____.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장원순. 2007.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다문화교육의 과제”, 2007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 - 한국사회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과제 - 자료집.
- 장태한. 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 99-113.
- 정기선 외.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기선. 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불평등지각, 노동지향, 가족가치: 국제사회조사(ISSP)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
- 정일선. 2006. “길찾기: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자료집.
- 조영달. 2006. 『다문화과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한건수. 2004.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실태. 교육정책토론 자료집: 교육소의 집단의 교육실태 및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한영혜. 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71: 155-184.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 인류학』 28: 199-221.

Banton, Michael. 1996. “The Cultural Determinants of Xenophobia.” *Anthropology Today* 12(2): 8-12.

Blanc Christina S., Basch, Linda and Schiller, Nina G. 1995. “Transnationalism, Nation-States, and Culture”. *Current Anthropology* 36(4): 683-686.

Castles, Steven and Mark J. Miller. 1998(2nd. ed.).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uilford Press

Coenders, M., Lubbers, M. and Scheepers, P. 2003.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 - Overview of Theories, Hypotheses and Results of Majorities towards Minorities*. EUMC. (Report for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Ref. N. 2003/04/01)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2003 Multicultural Australia: United in Diversity: Updating the 1999 New Agenda for Multicultural Australia: Strategic Directions for 2003-2006.

EUMC(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MC.

Galligan, Brian and Winsome Roberts. 2003. “Australian Multiculturalism: Its Rise and Demise.” A Paper presented to the Austral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Univ. of Tasmania. 29 Sep-1 Oct 2003.

Gijssberts, Mérove, Hagendoorn, Louk and Scheepers, Peer. eds. 2004. *Nationalism and Exclusion of Migrants: Cross-National Comparison*. Ashg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2005. *World Migration Report 2005*. IOM.

- Jupp, James 2002. *From White Australia to Woomera*. Cambridge Univ. Press.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
- _____.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 (2): 147-169.
- Smolicz, Jerzy J. 2001. "Globalization and Cultural Dynamics in a Multicultural State: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ialogue and Universalism* 11-12: 27-41.
- Stolcke, Verena. 1995. "Talking Culture: New Boundaries, New Rhetorics of Exclusion in Europe". *Current Anthropology* 36(1): 1-24.



부 록

<부표 1>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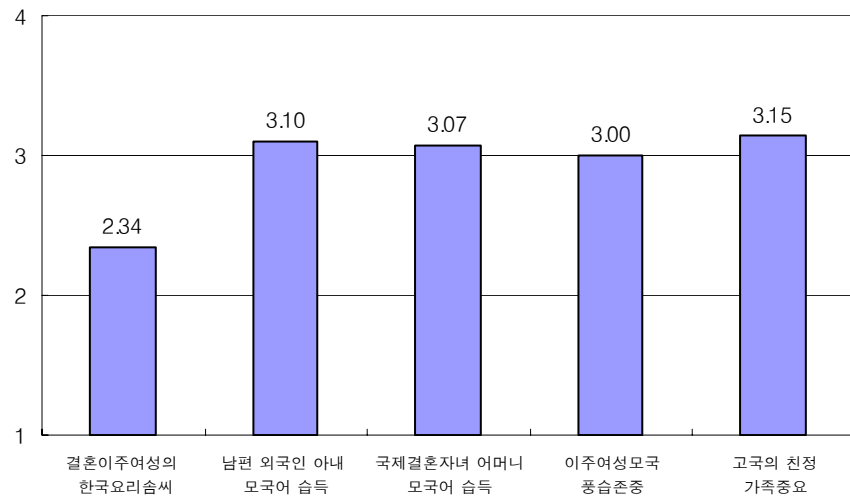
(단위: 명, %)

	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고	기타
1990	619	175 (28.3)	88 (14.2)	268 (43.3)	-	-	-	-	-	88 (14.2)
1991	663	224 (33.8)	106 (16.0)	232 (35.0)	-	-	-	-	-	101 (15.2)
1992	2,057	1,223 (59.5)	429 (20.9)	249 (12.1)	-	-	-	-	-	156 (7.6)
1993	3,109	826 (26.6)	1,851 (59.5)	230 (7.4)	-	-	-	-	-	202 (6.5)
1994	3,072	561 (18.3)	2,043 (66.5)	227 (7.4)	-	-	-	-	-	241 (7.8)
1995	10,365	1,412 (13.6)	8,450 (81.5)	188 (1.8)	-	-	-	-	-	315 (3.0)
1996	12,647	2,370 (18.7)	9,271 (73.3)	228 (1.8)	-	-	-	-	-	778 (6.2)
1997	9,266	1,075 (11.6)	7,362 (79.5)	213 (2.3)	-	-	-	-	-	616 (6.6)
1998	8,054	1,004 (12.5)	4,688 (58.2)	1,514 (18.8)	-	-	-	-	-	848 (10.5)
1999	5,775	1,248 (21.6)	2,883 (49.9)	280 (4.8)	-	-	-	-	-	1,364 (23.6)
2000	7,304	1,131 (15.5)	3,586 (49.1)	235 (3.2)	-	-	-	-	-	2,352 (32.2)
2001	10,006	976 (9.8)	7,001 (70.0)	265 (2.7)	510 (5.1)	134 (1.3)	185 (1.8)	157 (1.6)	118 (1.2)	660 (6.6)
2002	11,017	959 (8.7)	7,041 (63.9)	267 (2.4)	850 (7.7)	476 (4.3)	330 (3.0)	241 (2.2)	195 (1.8)	658 (6.0)
2003	19,214	1,242 (6.5)	13,373 (69.6)	323 (1.7)	944 (4.9)	1,403 (7.3)	346 (1.8)	297 (1.5)	318 (1.7)	968 (5.0)
2004	25,594	1,224 (4.8)	18,527 (72.4)	344 (1.3)	964 (3.8)	2,462 (9.6)	326 (1.3)	318 (1.2)	504 (2.0)	925 (3.6)
2005	31,180	1,255 (4.0)	20,635 (66.2)	285 (0.9)	997 (3.2)	5,822 (18.7)	270 (0.9)	236 (0.8)	561 (1.8)	1,119 (3.6)
2006	30,208	1,484 (4.9)	14,608 (48.4)	334 (1.1)	1,157 (3.8)	10,131 (33.5)	273 (0.9)	206 (0.7)	594 (2.0)	1,421 (4.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 2000년을 기점으로 원자료의 국적 구분이 바뀌었다. 1999년까지는 일본과 중국, 미국, 기타로만 구분되어 있다.

<부표 2> 결혼이주여성의 출신문화·사회 존중도



*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신사회와 문화에 대한 존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점수분포: 0-4점)

<부표 3> 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개요: 2007년

서비스내용	정책대상	부처	일선서비스기관
한국어 교육, 방문서비스	결혼이민자 일반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농림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NGO 등
한국문화 교육	결혼이민자 일반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NGO, 지방문화원 등
통역서비스	폭력피해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선정기관
생활정보지원 (자료제작, 배포)	결혼이민자 일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
네트워크구축 및 문화교류	결혼이민자 일반	법무부, 문광부	선정기관
컴퓨터 교육	결혼이민자 일반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선정기관
가족 상담 및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NGO 등
직업훈련 및 알선	결혼이민자 일반	교육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워크넷)
영유아 보육지원 (보육료지원, 도우미파견)	결혼이민자가족 중 해당가족	여성가족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
자녀교육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취학자녀	교육부	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
무료건강검진	결혼이민자 일반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립건강보험공단
가정폭력피해 여성보호 (외국인전용쉼터)	폭력피해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2007년 12월 26일 인쇄
2007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김 경 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206-9 94330 <정가 14,000원>
978-89-8491-205-2 94330 (세트)